

전략연구 2022-22

충남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강마야 · 이도경 · 김기흥 · 정민철

연구 요약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을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 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한다.

그리고 상위계획 및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중앙정부,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배려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지원은 물론 멘토링 등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예산)집행조직 현황은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 관심, 탐색, 준비 단계보다 유입, 진입, 정착, 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여러 부서가 사업을 개별 분산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정책 접근,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한 접근,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연계고리를 찾고자 하는 접근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전업 청년농업인만을 고려한 농업정책 영역 외에도 겸업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추이, 중앙정부가 놓칠 수 있는 청년농업인만의 세밀한 특징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중요성,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불균형적인 농업인구의 분포, 충남 전체 농업인구 중 낮은 비중의 청년농업인 인구(2022년 12월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농업·임업·어업 산업의 취업자는 전체의 3.8%, 농림어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 수준에 불과, 연령대별 농지소유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년대상으로 주관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로서 ① 행정의 추진체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정책공급과 정책 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등이 존재,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은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는 문제 등을 제기, ③ 청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은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충남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는 '유입 및 성장단계'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영농자금' 분야로 나타났다.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판매처 확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로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가장 높았다.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높아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하였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을 보았다.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농지기반 확보, 영농자금 지원,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역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수요 분야는 소득안전망 구축, 기존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농업정책을 현재 청년 세대의 수요와 특징에 맞도록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서 유연성

발휘, 유형별·단계별 정책대상자 기준 확장,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청년 수요(놀거리, 즐길 거리 등)를 파악하여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농지·주거기반 수요와 관련한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근관점과 방향으로 “①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 ②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③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 설계, ④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 ⑤ 진입을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 ⑥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추진전략은 ①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으로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②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 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③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 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통합 시범사업 예시를 제안하였는데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 “충남형 젊은 농부 젊은 농촌 프로젝트”이다. 청년농업인의 관심, 유입, 결심, 준비, 정착, 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 되지 않고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4. 연구의 기대효과	6
5. 연구의 추진일정	7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8
1. 선행연구 고찰	8
2. 국외 및 중앙정부 정책동향	12
3. 충청남도 정책동향	20
4. 정책분석	23
5. 사례조사	42
6. 요약 및 시사점	54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56
1. 청년농업인 기초현황	56
2. 충남 청년대상 주관식 의식조사	68
3.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74
4. 요약 및 시사점	85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87
1. 접근관점과 방향	87
2.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91
3.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117
4.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134

5. 통합 시범사업 예시	151
6. 요약 및 시사점	161
제5장 결론	163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63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7
부록	169
부록1.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지	169
부록2. 충남 청년농업인과의 대화마당 회의록	173
부록3.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회의록	174
부록4. 제주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 회의록	175
부록5. 충남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테이블) 회의록	176
부록6. 과제선정위원회·착수연구심의회·최종연구심의회 심의의견 회의록	177
부록7.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2023) 결과 요약	178
참고문헌	179

표 목 차

〈표 1-1〉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과 응해야 할 답변(예시)	4
〈표 1-2〉 연구의 추진일정	7
〈표 2-1〉 선행연구 고찰 결과 요약	9
〈표 2-2〉 유럽연합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New CAP 2023-2027) 주요 내용 요약	13
〈표 2-3〉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19
〈표 2-4〉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방안	25
〈표 2-5〉 중앙정부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특징 요약	27
〈표 2-6〉 지방정부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특징 요약	27
〈표 2-7〉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별 예산 현황(2022년 본예산)	28
〈표 2-8〉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개요(2022년)	37
〈표 2-9〉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현황(2018년~2022년)	38
〈표 2-10〉 전라남도의 진입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42
〈표 2-11〉 전라남도의 정착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43
〈표 2-12〉 전라남도의 성숙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44
〈표 2-13〉 강원도의 영월군 청년정책 단계별 로드맵	45
〈표 2-14〉 강원도의 영월군 청년사업단 조직도와 담당업무	47
〈표 2-15〉 전라남도의 곡성군 분야별 청년키움 지원사업 내역(2020년)	49
〈표 3-1〉 기초통계자료를 통한 충청남도의 청년 분야별 현황분석 결과	56
〈표 3-2〉 전국 및 충남의 청년인구 현황(2022년 12월 기준)	58
〈표 3-3〉 전국 및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2022년 12월 기준)	59
〈표 3-4〉 전국 및 충남의 연령별 농업인구 구조와 분포(2005년~2020년)	60
〈표 3-5〉 충남의 청년 산업별 취업자 현황(2021년)	61
〈표 3-6〉 전국의 청년 구직희망 직종 순위(2021년)	61
〈표 3-7〉 충청남도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기준	62
〈표 3-8〉 충청남도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외 기준	63
〈표 3-9〉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 현황(2023년 2월 기준)	64
〈표 3-10〉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현황(2022년)	66
〈표 3-11〉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	71
〈표 3-12〉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영농활동 지역	75
〈표 3-13〉 응답자의 유형, 성별, 연령대, 동거가족수	76
〈표 3-14〉 응답자의 학력과 영농 전 종사업종	77
〈표 3-15〉 응답자의 현재 영농·영농정착생계유지 여부	77

〈표 3-16〉 응답자의 영농투자 금액과 연간 농업소득	78
〈표 3-17〉 응답자의 영농단계 위치, 정책이 집중해야 할 영농단계 및 영농영역	79
〈표 3-18〉 응답자의 영농정착금 지원받은 기간·영농준비~정착 기간·농업경영체 등록 소요 기간	80
〈표 3-19〉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 및 도움이 되는 주체·기관(중복응답)	82
〈표 3-20〉 응답자의 과거 영농준비 및 현재 영농과정 상 어려운 점(중복응답)	83
〈표 3-21〉 응답자의 영농포기 순간·현재 영농실태에 대한 만족도·향후 농사 지속 여부	84
〈표 4-1〉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요약	91
〈표 4-2〉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 설정에 대한 정책현장 사례	93
〈표 4-3〉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 설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95
〈표 4-4〉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소득안전망 시나리오 구상	99
〈표 4-5〉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간 각자의 시선에 대한 현실 사례	101
〈표 4-6〉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재와 미래	107
〈표 4-7〉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요약	117
〈표 4-8〉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131
〈표 4-9〉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요약	134
〈표 4-10〉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농지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135
〈표 4-11〉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	140
〈표 4-12〉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영농자금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143
〈표 4-13〉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주거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147
〈표 5-1〉 전략연구과제 내용 요약 및 활용계획	166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5
〈그림 2-1〉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	14
〈그림 2-2〉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 목표 및 전략 ..	15
〈그림 2-3〉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	16
〈그림 2-4〉 농식품부의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 비전, 목표, 전략, 과제 ..	17
〈그림 2-5〉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민선 8기) : 목표 및 전략	20
〈그림 2-6〉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민선 8기)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	21
〈그림 2-7〉 충청남도의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22
〈그림 2-8〉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단계별 평가	23
〈그림 2-9〉 대상자 유형별-정책단계별 구조	31
〈그림 2-10〉 대상자 유형별-진입전후 단계별 구조	32
〈그림 2-11〉 대상자 유형별-정책영역별 구조	33
〈그림 2-12〉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 현황(민선 7기와 민선 8기)	34
〈그림 2-13〉 충청남도의 조직도 중 청년정책 추진 부서 변화(민선 8기)	35
〈그림 2-14〉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단계별 평가	39
〈그림 2-15〉 강원도의 영월군 청정 영월 프로젝트 장면	46
〈그림 2-16〉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년키움 추진체계	48
〈그림 2-17〉 충청남도의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51
〈그림 2-18〉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업무내용과 장면	52
〈그림 3-1〉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소유농지 면적분포(2022년 기준)	64
〈그림 4-1〉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	87
〈그림 4-2〉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단계별 추진전략 로드맵	89
〈그림 4-3〉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90
〈그림 4-4〉 청년들의 농촌진입을 돕는 지원조직과 프로그램 사례	113
〈그림 4-5〉 전라남도의 곡성군 ‘농담’ 매거진 누리집 첫화면	115
〈그림 4-6〉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록코끼리 상품 및 활동	122
〈그림 4-7〉 충청남도의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지역 네트워크와 활동 내용	128
〈그림 4-8〉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보농부 단기과정 사업 구조 : 지역 네트워크 조직 ..	129
〈그림 4-9〉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맵	154
〈그림 4-10〉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안) 구상	15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번 연구주제를 생각하게 된 근본 문제인식은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이 없어서 청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접근 관점의 부재, 추진 방식추진체계정책 성과지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이 근본 원인이다. 인구 감소와 같은 시대적 추세는 차치하더라도 청년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면 작은 실마리가 나올 지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다.

현장 청년의 입장에서 이번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의 청년들은 농업과 농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제안들을 쏟아냈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현실은 왜 달라지는 게 없는가?” 이다.

첫째, 충남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육성, 정착 등의 정책성과는 흡족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내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는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 정부와 민선 8기 충남도정은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은 물론 청년농업인 육성을 중점과제로 등장시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개별적, 분산적, 시혜적, 단편적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청년농업인의 양적·질적 육성 실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정착한 실적 등 정책성과 창출 측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다.

둘째, 민선 8기 충남 농정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목표치는 연간 300명 양성(2022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많은 정책과 사업이 도출되었다. 충청남도가 실행을 준비하는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추진해왔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집행방식과 추진 체계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선 8기 도정출범 준비를 위해 출범한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2022.07.)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 내용은 스마트팜 단지화, 청년농업인 단계별 영농 정착지원 확대, 충남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교육, 충남형 리브투게더, 고령은퇴 농어민 정년제 도입, 청년 원가주택 공급 등이다. 이후 충청남도(2022)¹⁾ 민선 8기 충남 농업정책 추진방향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임대 및 보급사업, 우수 청년농업인 선발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청년농촌보급자리 등이다.

현재 준비 중인 정책과 사업들도 사업개수는 많아졌지만 기존 집행방식과 추진체계는 동일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되 민선 8기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민선 8기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의 관점은 청년농업인 특징인 문화적 다양성, 농촌에 대한 감수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청년농업인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보이는 만큼 이에 맞는 단계별 전략, 유형별 전략, 농업과 농촌 모두를 고려한 통합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위기 지표를 보이는 농업농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청년농업인 유입, 육성, 정착 전략을 돌파구로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민선 8기 동안에야말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생애주기별 대책 중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인구증가 수단으로서 청년에게 지원정책을 투자한다고 나아지지 않았기에 정책기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 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유출되지 않는 정책도 더불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농지+소득+주거+문화+복지+사회적경제+일자리+네트워크”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통합적 집행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청년농부육성 사업과 같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여 주목받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반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1) 자료 : 충청남도(2022), 민선 8기 농업정책 추진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및 미래포럼 발표자료(2022.12.05.).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을 분석한다.

- 선행연구 고찰
- 국외 및 중앙정부 정책동향, 충청남도 정책동향
- 정책분석, 사례조사

둘째,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다.

- 청년농업인 기초현황
- 충남 청년대상 주관식 의식조사
-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셋째,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 접근관점과 방향
-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 통합 시범사업 예시

참고로 충청남도가 수요조사 제안서에서 작성했던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선 8기 도정 목표와 연계한 분야별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전략 구체화
-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실효성 검토 및 개선점 등 발굴, 타 시도 정책사례
-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향후 개선(실행)방안 마련
- 신규 청년층 농촌 유입 및 육성을 위한 대내외 캠페인, 마케팅(홍보) 방안

2) 주 : 본문에서 청년농업인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했는데 충남 자체사업의 고유명칭을 살리고자 일부에서는 '청년농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저자 주).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의 내용에 따른 연구의 방법,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고).

첫째,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 및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국내외 정책동향 : 유럽연합,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책 파악
- 정책분석 : 대표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집행-사후평가-모니터링-피드백 등 평가
- 기초현황 분석 : 기초 통계(인구학적, 사회학적), 정책현황 등
- 사례조사 : 선행연구, 언론기사, 분야별 현장사례조사 등
- 인식실태 : 청년대상, 청년농업인 대상의 주관식 의식조사 및 영농정착 실태 설문조사

둘째, 청년농업인, 행정, 연구자, 활동가가 함께하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다.

- 청년(농업인) 그룹 : 청년농업인 그룹만이 아닌 선배 농업인 그룹, 일반 청년 그룹 등 다양한 인적풀 구성하여 진행
- 행정, 연구자, 활동가 그룹 : 도시군 담당공무원, 전문가·연구자·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풀 구성하여 진행
- 이들 미션은 청년(농업인) 질문에 대하여 각자 처해인 입장에서 답변하기 순으로 진행 (〈표 1-1〉 참고)

〈표 1-1〉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과 응해야 할 답변(예시)

질문	답변
·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 정착 관련 정책은 왜 성과가 미흡했을까?	· 부서별 개별적, 단편적 지원사업 위주로 지원되었던 것 같다.
· 정책과 사업이 없어서 청년농업인 육성이 되지 않았는가? 정착하지 않았는가?	· 정책, 사업 등 예산 비중은 턱없이 적은 편이다. · 개수가 적지 않지만 결국 통합되지 못했다.
· 청년농업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요인은 무엇인가?	· 지금 정책은 기존 농업인 정책과 흡사하다. · 청년농업인을 농업인으로만 접근했고 그래서 청년들의 진짜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

주 : 저자 작성함.

셋째, 청년농업인, 행정, 연구자, 활동가가 함께하는 정책 집담회 등을 수행한다.

- 참가주체 : 충남연구원 연구진, 충남 내 청년농업인 그룹(청년후계농, 청년창업농 등 포함), 도시군 담당공무원, 전문가·연구자·활동가 그룹
- 논의주제 : ① “(가)청년농업인이 묻고 행정과 연구자가 답한다” 주제, ②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 논의
- 논의방식 : 정책 집담회(라운드테이블),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행사 진행

넷째, 자문회의 및 행정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 행정, 연구자, 활동가 그룹으로부터 수시 자문회의 진행
- 연구과제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진행
- * 기존 논의주체, 활동조직과 연대, 협업하면서 진행하는 방식 차용, 충남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그룹, 친환경청년농부 운영위원회, 도청 내부 청년정책 TF 등과 협업

〈그림 1-1〉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주 : 저자 작성함.

4. 연구의 기대효과

이번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기여 측면의 효과이다.

- 연구방법 측면에서 새로운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실용적인 내용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기존 제시해왔던) 부문별 정책대안의 구조화 및 체계화
- 추진전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례조사,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 자료 수집
- 정책대안 도출과정에서 현장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용적 학문가치 창출

둘째, 정책활용 기여 측면의 효과이다.

-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에서 시행착오 최소화 기틀 마련
- 다양한 연구 방법과 실험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추진전략 도출
- 민선 8기 동안 실현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도출하여 핵심 공약과제 실천에 기여
- 유입과 육성 전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 구성원으로서 남는 정착 전략 제안

참고로 충청남도가 수요조사 제안서에서 작성했던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충남형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선사항 반영 및 전략 추진
- 친환경청년농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 공유 및 사업지침 개선 반영

5. 연구의 추진일정

이번 연구를 위하여 진행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표 1-2〉 참고).

〈표 1-2〉 연구의 추진일정

대상	구분	추진일자	추진 세부내용	참석자
청년그룹	설문조사	22.07월중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관	도내 청년농업인 669명 (4-H, 청년농업인단체, 친환경청년농부, 청년후계농 등)
청년그룹 행정, 전문가	간담회	22.07.15.	충남 청년농업인과의 대화마당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관	청년농업인 및 청년활동가, 전문가, 행정, 연구진 등 20여명
청년그룹	서면자문	22.08.22. ~09.02.	사전 연구설계를 위한 서면자문	청년활동가 3명, 청년농업인 7명
전문가	자문회의	22.08.23.	사전 연구설계를 위한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활동가 및 전문가, 연구진 등 10명
행정	업무협약	22.09.07.	사전 연구설계	행정, 연구진 등 5명
연심회	착수연심회	22.09.16.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전문가, 청년농업인, 연구진 등 7명 * 행정은 사정상 불참
행정	업무협약	22.09.29.	과제 진행 업무협약	행정, 연구진 등 4명
청년농업인 행정	현장사례조사 심층인터뷰	22.10.12. 22.10.19.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스마트팜) - 스마트팜 혁신밸리(대규모, 김제시), 스마트팜 임대형 실습농장(소규모, 당진시)	행정, 연구진 등 4명
청년그룹 행정, 전문가	포럼	22.10.13.	지방소멸대응포럼(양극화 주제) 참석 *충청남도 기획실 양극화대응담당관 주관	연구진은 포럼 토론자 참석
청년그룹 행정, 전문가	위원회 회의	22.10.27.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석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주관	연구진은 위원 자격 참석
청년그룹	현장사례조사 심층인터뷰	22.11.01.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공유공간) - 플랫폼 및 공유공간(보령시, 홍성군)	연구진 2명
청년그룹	현장사례조사 간담회	22.11.02.	제주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	청년농업인 및 청년활동가, 연구진 등 10여명
청년농업인 행정	현장사례조사 간담회	22.11.03	분야별 현장간담회(스마트팜) - 스마트팜 임대형 실습농장(당진시) *한국농어촌연구원 주관	청년농업인, 연구진, 행정 등 10여명
전문가	자문회의	22.11.08.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전문가, 연구진 등 4명
청년농업인	설문조사	22.11.18. ~11.27.	충남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 설문조사	도내 영농정착지원금 1년차~3년차 신청자(청년후계농) 846명
청년그룹 행정, 전문가	정책집담회 워크숍	22.11.25.	충남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테이블)	청년농업인 및 청년활동가, 행정, 연구진 등 20여명 * 공주시 청년센터와 연구협약식 개최
청년그룹 행정, 전문가	포럼	22.12.05.	미래포럼(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주관	연구진은 포럼 토론자 참석
연심회	최종연심회	22.12.06.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전문가, 청년농업인, 연구진, 행정 등 8명

주 : *는 충남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주관으로 한 경우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부록 참고, 저자 작성함.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1. 선행연구 고찰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고). 주로 청년농업인에게 시급한 것은 농지기반, 정주기반, 대상자 유형별 차등적 정책접근 등으로 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농지기반 확보 : 농지유동화, 다양한 세제혜택, 농지임대차 및 매매 정보 수집, 관리정확성,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농지 공급,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이용관점으로 접근, 농지관리방식 및 지역 내 주체 설정 등
- 정주기반 조성 : 정주여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및 근린 질의 양호한 지역 확보 필요, 농촌주택확보를 위한 농촌주택 정보의 수집, 관리
- 영농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정책개선
- 지역기반의 실천농장 방식으로 체계화(친환경농업기반, 지역정착 유인, 교육 및 경제 기능 달성)
- 지역단위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등 인력육성계획 연계
- 지역 내 유희시설 활용한 지역 공동자산화하여 정보공유와 소통 공간 조성
- 마을자치회 등 마을단위 조직 및 사람 등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
- 시기별, 단계별(준비기-창농초기-재구조화기-정착기) 종합패키지 지원
- 유형별(청년창업농과 청년후계농) 차등적인 정책자금 지원
-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문화, 교육, 복지),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 확보
- 창농 초기 유입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관리
-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혹은 윈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농업인 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표 2-1〉 선행연구 고찰 결과 요약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특성 연구자(연도) : 김기흥(2021) 연구목적 : 실천농장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방안과 확대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단위 실천농장(인큐베이팅)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모색 다양한 지원체계(농지, 자금, 교육 등), 국비사업과의 연계 전국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실천농장 특성 제시 실천농장 확대 방안 제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 배균기,조원지,이병환(2021) 연구목적 : 청년창업농의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지역 농업 차원의 육성 방향과 전략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실태(설문)조사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중심의 창업농 지원체계 강화 청년창업농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지역단위 현장중심형 육성 방안 마련 청년창업농 경영·생활안정 지원 강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연구자(연도) : 임소영,마상진(2021)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의 농업 진입장벽 분석(농지 확보, 자금 조달, 주택확보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농지 유통화, 농촌주택 확보와 자금지원, 농가 경영 자금지원의 양적확대, 다양한 농가 승계 모델 구축, 농업 탐색의 기회 확대 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 김기흥(2020)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관련 지원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사례조사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청년농업인 정착 마련 및 사업 정비 (지방정부) 도·시군 공유지 활용 검토 면단위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마련 마을자치(위원)회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마을 유희시설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소통공간 마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 최정신,황정임,최윤지(2020)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요인(지역사회 역할 확대, 리더 육성, 여성농업인) 분석 및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 방안 마을공동체 내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 청년농업인의 영농특성 분석 및 리더 역량 자가 진단표 개발 청년 여성의 농산업분야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AHP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 김민정(2019) 연구목적 :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을 평가하고, 청년농업인 농업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농 현황과 장애요인 정리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정책 관련 자료 분석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유럽연합, 프랑스, 일본 사례와 국내 지방자치체 및 민간단체의 우수사례 분석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농의 농업 소득,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 그리고 삶의 질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경제학적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연도) : 마상진,김남훈(2019)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을 통해 조사 농지 특성, 창농 과정, 농가 경영 특성, 지역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이 청년농의 정착 성공에 미치는 영향 추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연구자(연도) : 황정임,최윤지,최정신,정용경(2019)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자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책에 주거환경적 측면의 지원방향을 모색하여 시사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모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특성 실증분석 청년농업인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연구자(연도) : 김기흥(2018) 연구목적 :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 개념과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자료 분석 정책분석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개념과 현황 파악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시사점 도출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단계별 과정 정립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계획 마련의 기초 자료 구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사례 연구자(연도) : 김기흥(2018) 연구목적 : 청년 농업인 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과 정착과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농업인 정의 정리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의 영농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청년 농업인 집단의 다양성을 전제로 유형별 사례 조사 실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연구자(연도) : 마상진,김경인(2018) 연구목적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사례조사 통계자료 분석 모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농 단계별·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한 생태계 구축 창업농 육성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관련 사업 체계화 지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육성 계획 구체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이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충남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연구목적: 충남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그룹별 집담회, 간담회,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분석과 평가 충남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의 접근관점, 추진체계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	--	--	---

주 : 저자 작성함.

둘째, 이번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 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 부족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는 부재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청년 후계농 육성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후계농업인 중심의 산업영역에 집중한 농업정책
- 이번 연구의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착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 즉, 청년농업인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삶, 생활 관점이 녹아든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차별성 지향
- 연구방법 중 청년농업인 그룹, 행정.전문가.활동가 그룹이 함께하는 집담회, 지역 내 이미 활동하는 조직과 단체 등과 협업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차별성 확보
- 새로운 실험방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내용은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 목표 및 공약 이행사항에 부합하도록 현장밀착형 세부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를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 확보

2. 국외 및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유럽연합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EU's New CAP, 2023-2027)

농업과 농촌은 유럽연합 그린 딜의 핵심도구로 보고 “새로운 공동농업정책(New 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23-2027)”을 발표하였다.³⁾

- 미션 :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다(A greener and Fairer CAP).”라는 기반, 성과와 결과에 집중한다는 것도 기존 CAP과 뚜렷한 차이점 발생
- 핵심 : New CAP(2023~2027)은 농정의 중심이 소비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고 치밀한 그린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소규모 농장에 보다 집중 지원, 국가별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허용
- 전략 : New CAP(2023~2027) 핵심도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 전략과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강화
- 목표 : 경작지 4% 휴경, 유기농 비율 25% 목표로 2030년까지 비료 사용량 20%,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모든 농장에서 경작지 최소 3%는 생물다양성과 비생산적인 요소에 전용, 경작지의 7%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계획 지원(습지와 이탄지대도 보호)
- 실행수단(예산 등) : 자발적으로 생태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추가보조금 지급, 소농 보호를 위한 ‘재분배 직불’ 예산 비중 상향 조정, ‘청년농 직불’ 예산 비중도 최소 3%로 상향 조정(현재 ha당 134유로, 최대 5년간 120ha까지 지급 가능)
- 청년농업인 관련 제안⁴⁾ : 젊은 층이 농촌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농촌 인프라 개선, 청년농업인에 대한 현장 컨설팅 중요, 영농승계 정책 개선 필요

그 외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고).

3) 자료 : 1. 유럽연합 누리집(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cap-overview/new-cap-2023-27_en, 검색일자 : 2022.10.30).
2. 데일리굿뉴스 누리집(<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02>, 검색일자 : 2022.10.27).
3. 한국농어민신문 누리집(<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48>, 검색일자 : 2022.10.28).
4. 한국농정 누리집(<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20>, 검색일자 : 2022.10.29).
5. 대산농촌재단 누리집(<https://webzine.dsa.or.kr/?p=10846>, 검색일자 : 2022.09.28.).
4) 자료 : 1. 농민신문 누리집(<https://www.nongmin.com/338000>, 검색일자 : 2022.12.10.).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1),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이 농촌지역의 세대갱신·지역발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

〈표 2-2〉 유럽연합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New CAP 2023-2027)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세부 내용
<p>A Greener CAP (더 친환경적인 공동농업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높은 녹색 의지 : CAP 계획은 환경 및 기후 법규와 일치 지향, 각 EU 국가는 이전 기간에 비해 환경 및 기후 행동에 대한 더 높은 의지를 보여줄 의무가 있으며 기후 및 환경 법률 수정될 때 계획 업데이트 의무 · 그린 딜 목표에 기여 : 국가 CAP 전략 계획은 그린 딜 목표에 기여 · 강화된 조건 : CAP의 수혜자에게 더 강력한 필수 요건과 연계된 지불금 지원(예 : 모든 농장에서 경작지의 최소 3%가 생물 다양성과 비생산적인 요소에 전념, 7%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 계획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 · 생태 제도 : 직접 지불 예산의 최소 25%가 생태계획에 할당되어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관행 및 접근 방식(예 : 유기 농업, 농업 생태학, 탄소 농업 등)과 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농촌 개발 : 기금의 최소 35%가 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및 동물 복지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 · 운영 프로그램 : 과일 및 채소 부문에서 운영 프로그램은 지출의 최소 15 %를 환경에 할당(현재는 10%) · 기후 및 생물 다양성 : CAP 예산의 40%는 기후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EU의 다년 재정프레임워크(MFF) 기간이 끝날 때까지 EU 예산의 10%를 생물 다양성 목표에 전념하겠다는 약속 강력히 지지
<p>A Fairer CAP (더 공정한 공동농업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지원의 재분배 : EU 국가는 중소 농장의 소득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불금의 최소 10%를 재분배 소득 지원에 할당 · 활동적인 농부 : 새로운 법안에는 수행되는 활동 수준을 포함하여 EU 국가에서 설립해야 하는 활동적인 농부에 대한 의무적이지만 유연한 정의가 포함, 활동적 농부만이 특정 EU 지원 가능 · 사회적 조건 : 특정 EU 노동 기준의 존중과 연결되며 수혜자는 농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 지불의 수렴 : 소득 지원은 개별 EU 국가 내, EU 국가 간에 더 많이 수렴 · 젊은 농부 지원 : EU 국가는 직접 지불 예산의 최소 3%를 소득 또는 투자 지원 또는 젊은 농부를 위한 창업 지원의 형태로 젊은 농부에게 분배 · 성별 균형 개선: 양성 평등과 여성의 농업 참여 확대는 최초로 CAP전략에 포함, EU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 노력 촉구 예정
<p>An Innovation-Friendly CAP (혁신 지향적, 경쟁력 향상 공동농업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력 향상 : 생산자 협력을 강화하여 농부들이 함께 일하도록 장려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지향 : 전반적인 시장 방향을 유지하여 EU 농장이 유럽 및 그 밖의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정하도록 장려 · 위기 준비금 :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혁된 CAP에는 연간 최소 4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재정 준비금 포함 · 와인 부문 지원 : 와인 부문에 대한 지원 개선을 위해 특정 규칙 합의

자료 : 유럽연합 누리집(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cap-overview/new-cap-2023-27_en, 검색일자 : 2022.10.30).

2) 윤석열 정부의 청년관련 정책

윤석열 정부(2022)에서는 ‘희망복원·공정기회·참여보장’의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그림 2-1〉 참고).

-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미래 희망 복원
- (공정 기회)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 (참여 보장)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

그 외에 청년 고용정책 방향은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 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그림 2-1〉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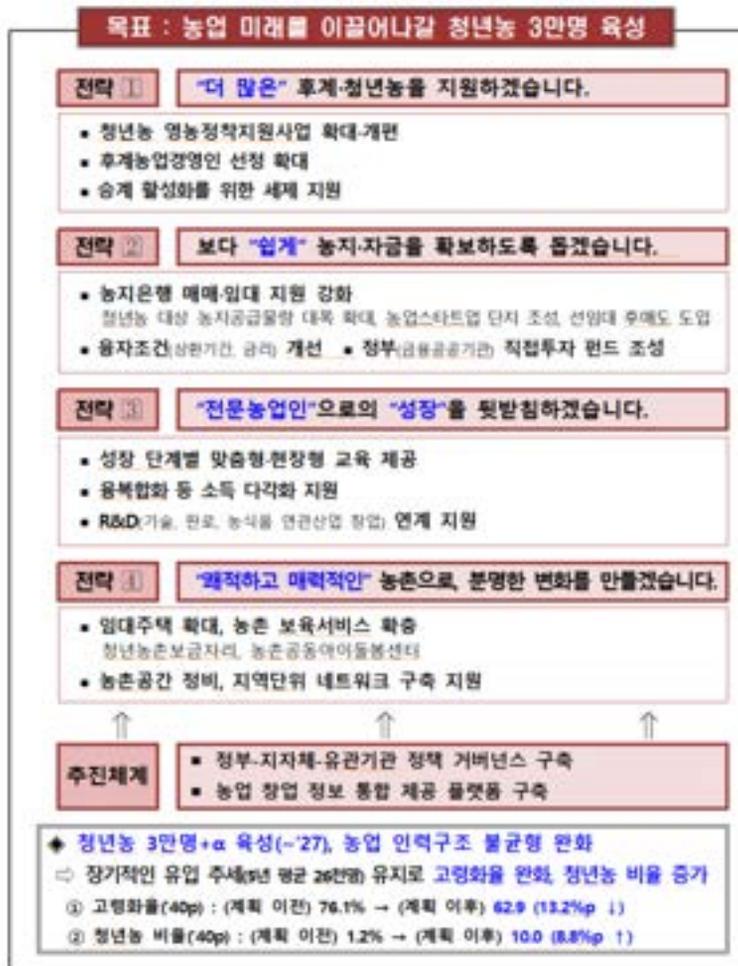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2.10.26.),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3)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정책

첫째,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세제지원 확대, 농지은행 매매 및 임대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소득다각화 지원, 임대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그림 2-2〉 참고).

〈그림 2-2〉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 목표 및 전략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05.),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 농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이번 계획의 주요 특징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이다. 준비-진입-정착-성장단계로 구분하여 각 사업들을 배치하였다. ① 준비단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② 진입-정착단계에는 후계농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컨설팅, 정주여건 마련을, ③ 성장단계에는 후속투자, 전문가 양성, 융복합화 지원, R&D로 창업 지원 등을 하는 계획이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05.),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 농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둘째, 농식품부의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에서는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2-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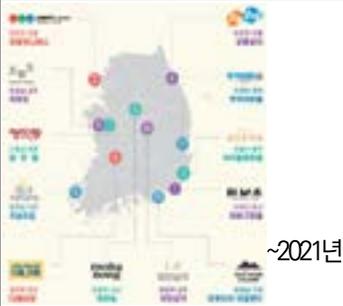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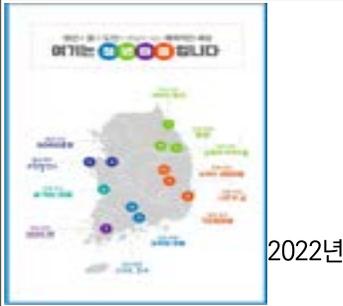
〈그림 2-4〉 농식품부의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03.03.),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사전준비, 안정적 정착지원 로드맵 마련.

4) 행정안전부의 청년관련 정책

첫째,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희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 특산물,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 선정규모 : 12개소, 지원금은 대상지역별 2억 원, 다년도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간(2022~2024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2. 05.~2022.11.(1차년도),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일부 조정 가능 · 시행주체 : 청년단체·기업(영리·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계획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3년간 계획 포함 필요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p>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1.04.), 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1.5. (수)~2.9.(금)),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둘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⁵⁾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91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140개 팀으로 확대하였다.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

5) 자료 :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1.18.),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있는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 최우수에 경남 거창의 「있다」.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4.20.), 지역 활력을 이끄는 청년공동체 140개 팀 본격 활동 시작 : 11월까지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140개 팀 활동 지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팀당 800만원)를 지원한다. 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청년공동체 간 교류(네트워크) 활동, 창업·창업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표 2-3) 참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 2022년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이다.

〈표 2-3〉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지역혁신형 일자리	·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지원하는 사업 ·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 인건비 지원(2년),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년차에 정규직 유지 시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 인센티브 1년 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	·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소멸위기지역 내 청년의 신규 창업 지원(1~2년, 연 1,500만원) + 3년차 청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1년간 2,400만 원 지원 ·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간 1,500만 원 지원, 2년차 청년 추가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간 2,400만 원 지원
지역포용형 일자리	·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1인당 연 2,250만 원의 인건비 1년간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2.09.),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 국비 2,388억 투입,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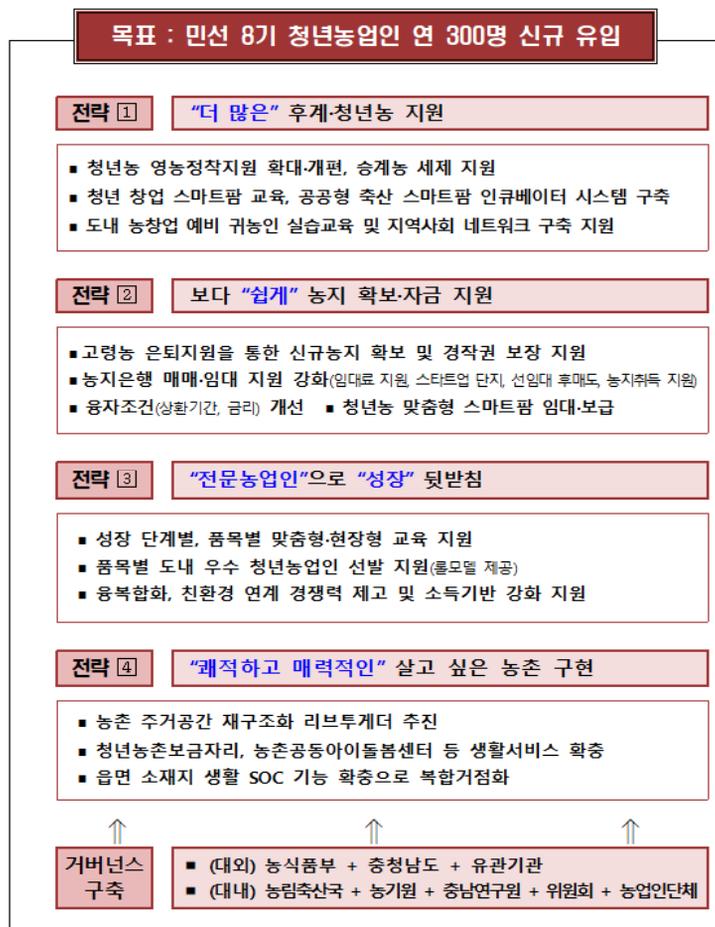
넷째, 그 외에도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⁶⁾이 있다.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운영으로 5년 간 지역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6)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2.17.), 2022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삼성생명-사회연대은행, 전국 21개 청년단체에 전달식 가져.

3. 충청남도 정책동향

첫째,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민선 8기)에서는 스마트팜 교육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 고령농 은퇴지원을 통한 신규농지 확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임대 및 보급, 농촌 주거공간 재구조화 및 리브투게더,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그림 2-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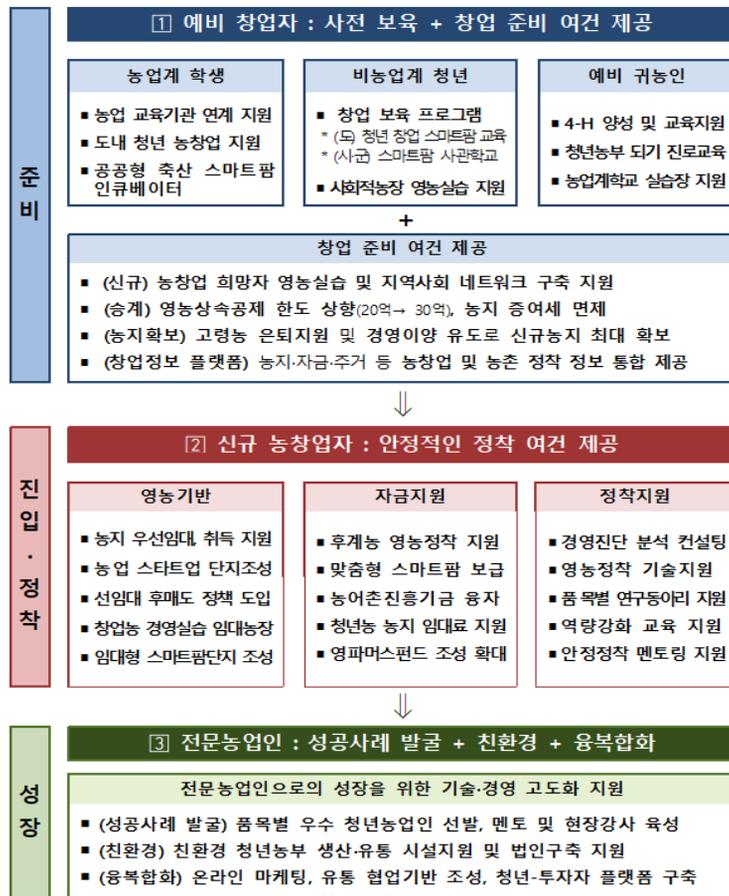
〈그림 2-5〉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민선 8기) : 목표 및 전략



자료 : 1. 충청남도(2022), 민선 8기 농업정책 추진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및 미래포럼 발제자료(2022.12.05.)
2.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이번 계획의 주요 특징은 성장단계별, 대상자유형별 지원 체계이다.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로 구분하여 각 사업들을 배치하였다. ① 준비단계에는 스마트팜 교육과 사회적농장 영농실습 프로그램과 농지정보 및 창업정보 제공을, ② 진입.정착단계에는 농지 우선임대 및 취득지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을, ③ 성장단계에는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고도화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민선 8기)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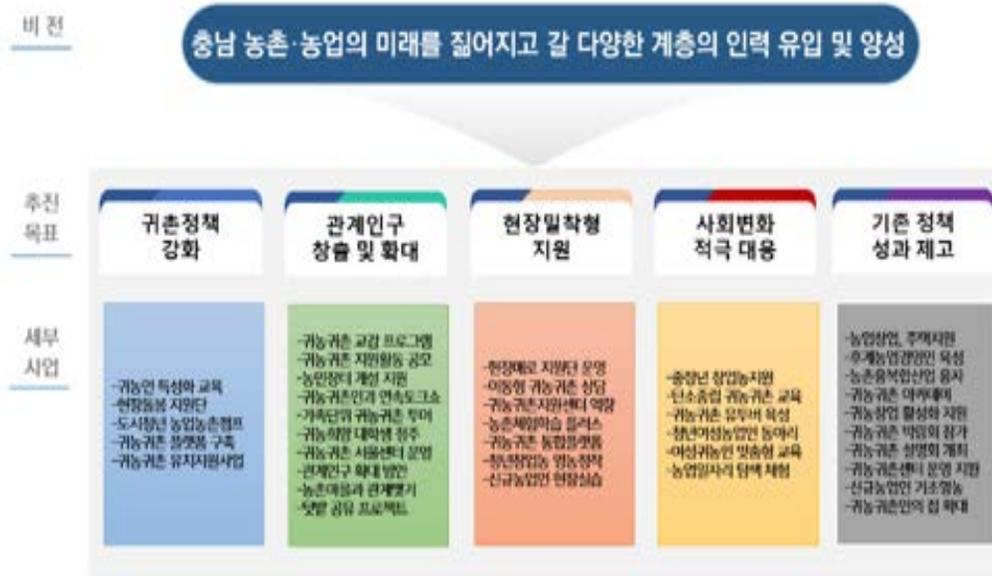


자료 : 1. 충청남도(2022), 민선 8기 농업정책 추진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및 미래포럼 발제자료(2022.12.05.)
 2.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둘째, 제1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최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및 인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여건 변화에 조용한 새로운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그림 2-7〉 참고).

청년농업인 영역과 관련 있는 부분은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귀농희망 대학생 정주 프로그램, 관계인구 확대방안, 농촌마을과 관계맺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청년여성농업인 동아리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등이 있다.

〈그림 2-7〉 충청남도의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자료 : 충청남도(2022),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4. 정책분석

1)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창업농에게 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2-8〉 참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크게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 2,000명을 신규 선발(누적 8,600명)한다.⁷⁾ 이 중 영농정착지원금은 가계자금(생활비) 및 경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데 독립경영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창업자금은 1인 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실시하는 융자사업이다.

〈그림 2-8〉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단계별 평가

계획	집행	사후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간 최대 월 100만 원 ·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본생활(영농정착지원금) · 창업을 위한 자금대출(창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간 차등 지급하는 구조 · 전국적으로 연 약 2,000명 선발 · 영농기반을 이미 갖춘 후계농에게 유리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간 부족(3년 → 5년)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 창업자금 한도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은 청년농부 영농정착 여부 확인 필요 · 관리감독 및 체계 점검 미비 · 청년에 대한 농업 관점 외에도 생활 관점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금씩 제도개선 및 보완 사항 실행 중

주 : 저자 작성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좋은 점은 ① 영농경험이 없고 자금기반이 약하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2.24.),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② 농촌에 정착하는데 상당시간이 걸리고 수입이 나오지 않기 마련인데 이 사업 덕택으로 많은 청년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③ 비교적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농자재, 생활비 등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계획하여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한계점은 ① 2019년 사업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의무조건을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이나 교육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②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부유한 영농후계자들이 받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③ 교육방식의 한계이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얽매이게 되었다. 인터넷 강의를 밤새 틀어놓기도 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필수 교육이수를 핑계로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 집합교육이 취소되다보니 이수를 할 수 없었던 문제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식의 한계는 존재한다.

④ 청년후계농 사업의 경우 월 60시간 이하 근무하는 직장에서 한해서만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수요자에 적합한 지원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다. 베테랑 농민들조차 2만 평, 3만 평 이상 규모화를 이루거나 고투자 자본의 시설농업 경우를 제외하면 점차 겸업하는 추세인데 아무 경험도 없는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걸 돕겠다는 제도에 넘기 어려운 허들을 두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

⑤ 지역에 정착하는 것에 관심을 뒤야 한다. 돈만 있다고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살이를 하며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데 지원금이 정부 지자체에만 연결되다 보니 지역사회에 등한시 하는 부분들이 많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이수보다 마을활동, 영농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⑥ 양적 성과지표의 한계이다. 많은 청년지원 사업의 경우 대다수 사업들이 양적실적에만 맞춰져있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받고 청년농업인이 지역정착률과 같은 성과지표를 삼아야 한다. 이미 정착한 청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유입 초점을 맞추기보다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것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4〉 참고).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가능조건(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 체계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평균 근로시간 등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농업특성 상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기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영농경력이 3년 초과일 경우 둘 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 농촌의 인구특성 상 60대도 소위 '막내'라고 하는 가운데 만 40세 미만 계층을 청년농업인이라고 보기에 무리인 현실에서 농촌인구에 한해서 연령기준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영농경력 3년 이하는 정착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영농경력 5년 이하 등으로 경력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내인지 확인함으로써 가구당 1명만이 청년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거 소재지가 행정구역 상 인접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농업소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농외소득 창출활동은 불가피함, 농외소득 창출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소득안전망 장치의 적극 확대, 영농정착지원금의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기수별 대상자가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끊기면서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 대상으로 사후관리 체계 및 지속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무연고, 무자본, 무경험의 청년농업인이 3년 동안 자립하기란 상당히 버거운 기간이므로 국비로서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그 사이기간동안은 충남에서만이라도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후 추가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모색 등이 요구된다.

〈표 2-4〉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방안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월 최대 100만 원 - 근거 : 2017년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 월평균 근로시간(166.3시간) = 1,07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평균 근로시간 등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특성 상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 일본의 경우, 최대 7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각각 등록하면 한 사람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영농경력이 3년 초과일 경우 둘 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신청가능조건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인구특성 상 60대도 소위 '막내'라고 하는 가운데 만 40세 미만 계층을 청년농업인이라고 보기에 무리인 현실 · 농촌인구에 한해서 연령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3년 이하는 정착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영농경력 5년 이하 등으로 경력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 프랑스의 경우, 영농경력 5년 이하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내 인지 확인함으로써 가구당 1명만이 청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농지 소재지와 주거 소재지가 행정구역 상 인접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신청가능 불가조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히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재(단기근로자는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 있는 자(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합산한 부과액 기준)		· 농업소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농외소득 창출활동은 불가피함 · 그렇지 않다면, 농외소득 창출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영농정책지원금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사후관리 체계	· 1기 : 2018년~2020년, 이후 지원 부재 · 2기 : 2019년~2021년, 이후 지원 부재 · 3기 : 2020년~2022년, 이후 지원 부재 · 시행지침 상 사후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음		· 기수별 대상자가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끊기면서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 대상으로 사후관리 체계 및 지속지원 필요성 제기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 검색일자 : 2022.05.01.).

2. 농민신문(2022.04.29.), 새정부 청년농 육성하려면 영농정책 지원사업 개선을(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54863/view>, 검색일자 : 2022.07.15.)

3. 농업인신문(2021.07.16.),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 개선 필요(출처 :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75>, 검색일자 : 2022.07.15.)

주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함.

그 외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영농 창업을 위한 생활비 지원, 농업취업지원, 보육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을 하지 않는 귀촌 청년, 농촌으로 이주해 온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다. 성과목표는 모두 영농 정책과 관련한 지표이다(〈표 2-5〉 참고).

〈표 2-5〉 중앙정부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특징 요약

구분	청년영농창업지원	청년농산업취업지원	청년스마트팜 보육센터	청년귀농장기교육	(농협)청년농업사관 학교
내용	3년간 월급여식	3개월 급여지원	2개월 기본교육 6개월 실습교육 1년 독립경영	6개월 실습교육 (숙식포함)	6개월 실습교육 (숙식포함)
대상	48% 예비창업자	비농업인	비농업인	비농업 도시청년	비농업 도시청년
본인부담	없음	없음	없음	1,680,000원	1,000,000원
규모	1,600명	100명	60명 (2019년 300명)	50명 (2019년 100명)	23명 (2019년 2기 60명)
업무주체	경영인력과	경영인력과	창조생명과학	경영인력과	미래농업지원센터
운영방식	지자체 배분 농정원 관리	영농조합법인선정 및 신청자 연계	교육기관선정 및 교육생 선발		

자료 :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참고로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 특징과 비교해보면,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지원, 멘토링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보보다 지방정부가 좀 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표 2-6〉 참고).

〈표 2-6〉 지방정부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특징 요약

구분	전라남도(5개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귀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실습농장조성 (20개소) 청년창업타운(12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부 육성지원(40명, 1,000만 원 지원, 경북 청년농부씨앗카드 발급) 예비 청년귀농인 멘토링 (연 20명)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영농바우처지원사업 롯데슈퍼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2020) 도시청년초보농부 플랫폼 조성운영 초보농부 경영실천농장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 연수 영농승계 및 청년농업인간 네트워크 농촌지도자회원 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청년농업인 창업스쿨 청년농업인 유통협업시스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 (8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삼락캠프
귀촌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마을 프로젝트 (2,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청년시골파견제(농촌장주) 청년유턴일자리지원 청년마을일자리지원 청년커뮤니티창업지원 청년문화커뮤니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 청년허브 홍성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 투잡, 청년쉐어하우스 캠프 진안 씨약 510 플랫폼 무주 청년정착지원

자료 :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2)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첫째,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사업(예산), 집행조직 현황이다(〈표 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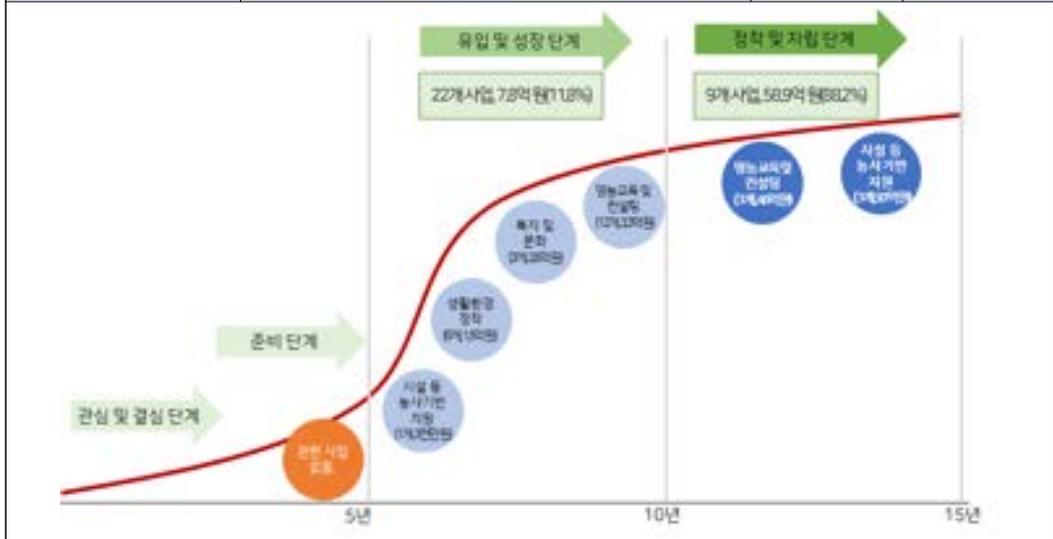
민선 7기까지 진행하였던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관련 충청남도청 2개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개국에서 31개 사업을 집행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 농림축산분야는 1.45조 원인데 이 중 청년농업인 분야(청년창업농, 후계농, 4-H 등)는 66.8억 원 투자, 약 4.6%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기준으로 31개 사업을 단계별, 정책영역별 살펴보면(표 내부 그래프 참고), 유입 및 성장 단계로서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가장 많은 12개 사업, 3.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외에 생활환경 정착 영역, 복지 및 문화 영역,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 순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착 및 자립 단계로서 생활환경 정착 영역에 가장 많은 3개 사업, 4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외에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과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에 동일하게 3개 사업을 투입하고 있다.

〈표 2-7〉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별 예산 현황(2022년 본예산)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천 원)	비중(%)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계(7개 사업)	4,109,350	61.5%
	·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30,000	
	· 여성·청년농업인 정책 홍보	8,500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192,000	
	·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및 운영관리	24,000	
	· 청년후계농업인 시군심사및모니터링단 운영	86,000	
	·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09,000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59,850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소계(2개 사업)	270,180	4.0%
	·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39,780	
	·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	230,4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소계(3개 사업)	66,000	1.0%
	· 청년 창업농 컨설팅 추진 및 전산용품 구입	21,500	
	· 청년 창업농 컨설팅 현장업무 추진	11,500	
	· 청년 창업농 시군 현장 컨설팅 지원	33,000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천 원)	비중(%)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소계(19개 사업)	2,235,068	33.5%
	·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14,750	
	· 4-H 양성교육	14,200	
	· 4-H 중앙야영대회	150,000	
	· 4-H 학습단체 행사	96,000	
	· 신규 및 여성4-H회원 교육	15,300	
	·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51,000	
	·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06,620	
	·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22,950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활용 기능교육	17,000	
	·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지원	6,503	
	·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	3,645	
	·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	26,100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100,000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585,000	
	· 한국4-H 교육지원	8,000	
	· 한국4-H 교육지원 공모심사	3,000	
	· 한국4-H 교육지원 행사운영	5,000	
	· 한국4-H 교육지원 현장지원	10,000	
	총합계(31개 사업)	6,680,598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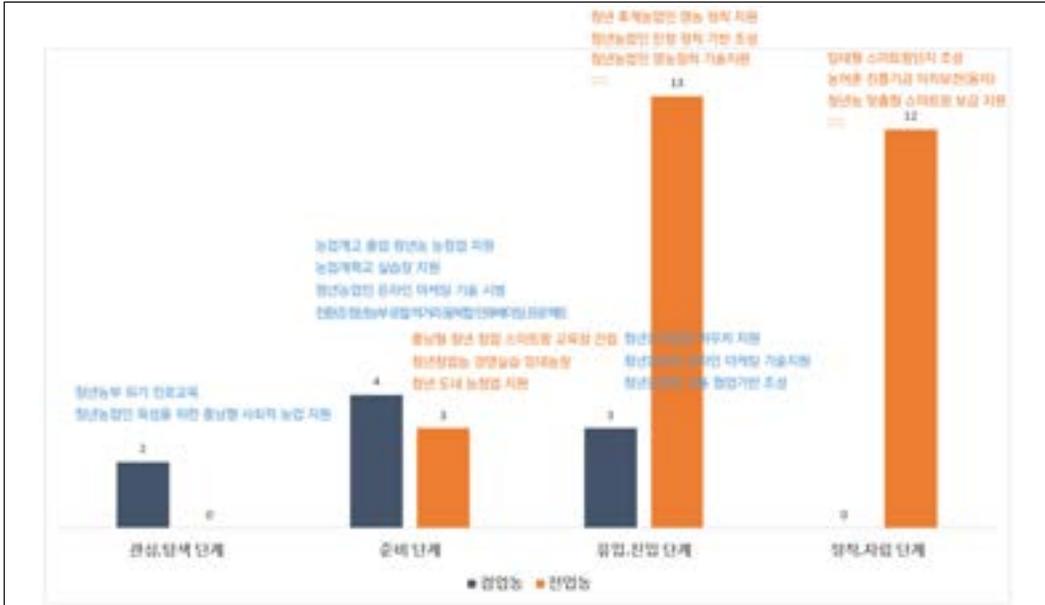
둘째,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대상자 유형별 정책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관련한 사업은 총 37개, 예산액은 528억 원이다. 2022년 대비 사업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증가하였다. 총 37개 사업을 대상자 유형별로는 겸업농과 전업농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책단계별로는 ‘관심·탐색 단계, 준비 단계, 유입·진입 단계, 정착·자립 단계’로 구분, 진입전후 단계별로는 ‘진입이전 단계, 진입이후 단계, 성장 단계’로 구분, 정책영역별로는 ‘생산, 유통·소매·판매, 생활, 역량강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총 37개 사업 중 겸업농 대상은 9개 사업에 55.7억 원, 전업농 대상은 28개 사업에 472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탐색·준비 단계보다 유입·진입·정착·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유형별-정책단계별 구조, 대상자 유형별-진입전후 단계별 구조, 대상자 유형별-정책영역별 구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9〉, 〈그림 2-10〉, 〈그림 2-11〉 참고).

① 대상자 유형별-정책단계별 구조를 살펴보면, 겸업농 대상의 사업은 준비 단계를 돕는 것에 4개 사업, 32억 원 투자를, 전업농 대상의 사업은 유입·진입, 정착·자립 단계를 돕는 것에 25개 사업, 428억 원 투자를 할 계획이다(〈그림 2-9〉 참고).

〈그림 2-9〉 대상자 유형별-정책단계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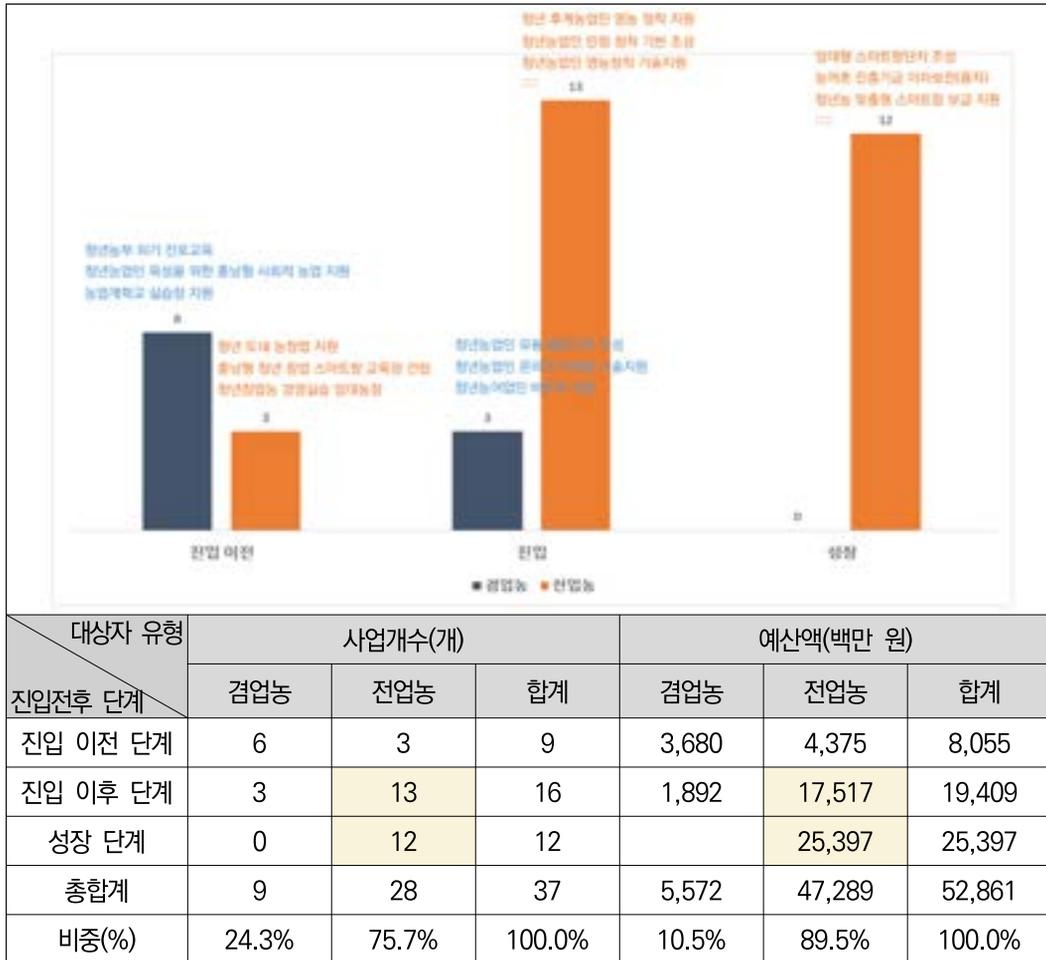


대상자 유형 정책단계	사업개수(개)			예산액(백만 원)		
	겸업농	전업농	합계	겸업농	전업농	합계
관심·탐색 단계	2	0	2	420	-	420
준비 단계	4	3	7	3,260	4,375	7,635
유입·진입 단계	3	13	16	1,892	17,517	19,409
정착·자립 단계	0	12	12	-	25,397	25,397
총합계	9	28	37	5,572	47,289	52,861
비중(%)	24.3%	75.7%	100.0%	10.5%	89.5%	100.0%

자료 : 1.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사업 관리카드 내역자료.
 2. 충청남도(2023), 충남청년정보.
 3.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 중 세부 사업자료.

② 대상자 유형별-진입전후 단계별 구조를 살펴보면, 겸업농 대상의 사업은 진입이전 단계를 돕는 것에 6개 사업, 36억 원 투자를, 전업농 대상의 사업은 진입이후 및 성장 단계를 돕는 것에 25개 사업, 428억 원 투자를 할 계획이다(〈그림 2-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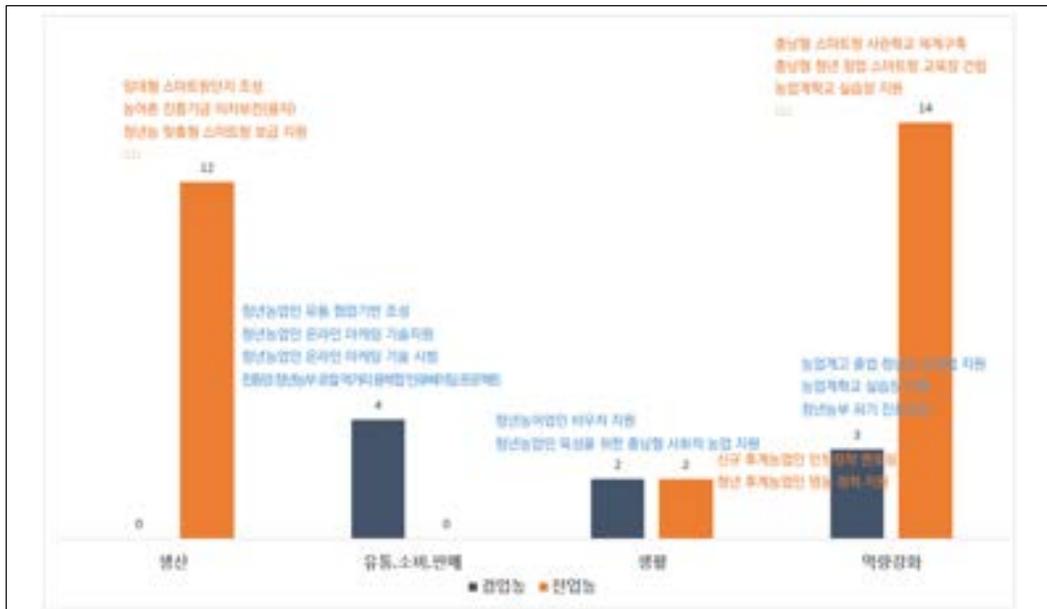
〈그림 2-10〉 대상자 유형별-진입전후 단계별 구조



자료 : 1.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사업 관리카드 내역자료.
 2. 충청남도(2023), 충남청년정보.
 3.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 중 세부 사업자료.

③ 대상자 유형별-정책영역별 구조를 살펴보면, 겸업농 대상의 사업은 유통소비판매를 돕는 것에 4개 사업, 18억 원 투자를, 전업농 대상의 사업은 생산 영역을 돕는 것에 12개 사업, 309억 원 투자를, 역량강화를 돕는 것에 14개 사업, 92억 원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림 2-11> 참고).

<그림 2-11> 대상자 유형별-정책영역별 구조



대상자 유형 정책영역	사업개수(개)			예산액(백만 원)		
	겸업농	전업농	합계	겸업농	전업농	합계
생산	0	12	12	0	30,925	30,925
유통·소비·판매	4	0	4	1,860	0	1,860
생활	2	2	4	432	7,074	7,506
역량강화	3	14	17	3,280	9,290	12,570
총합계	9	28	37	5,572	47,289	52,861
비중(%)	24.3%	75.7%	100.0%	10.5%	8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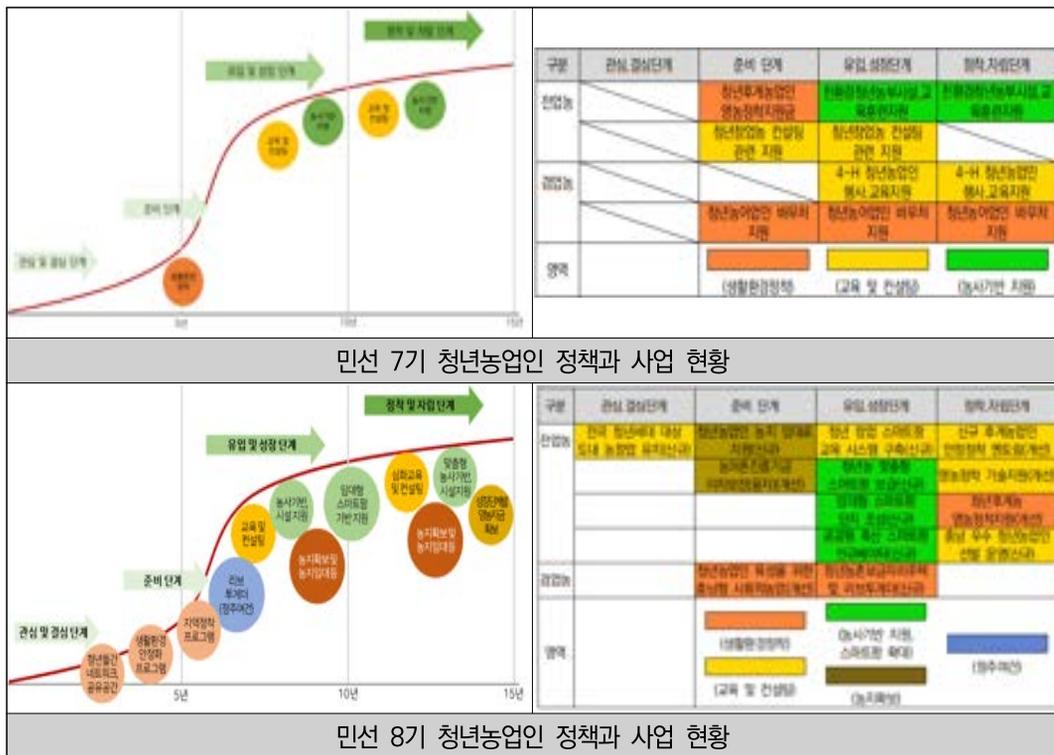
자료 : 1.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사업 관리카드 내역자료.
 2. 충청남도(2023), 충남청년정보.
 3.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 중 세부 사업자료.

민선 7기와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그림 2-12〉 참고).

민선 7기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유입 및 성장단계, 정착 및 자립단계에 ‘생활환경정착, 교육 및 컨설팅, 농사기반 지원’ 영역에 치중했다면, 민선 8기부터 진행되는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계획은 관심 및 결심 단계, 준비 단계에도 ‘생활환경정착, 교육 및 컨설팅, 농사기반 지원, 농지확보, 정주여건’ 영역에도 일부 지원하려 한다는 점이다.

민선 8기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교육 및 컨설팅,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농사기반 시설 지원, 농지확보, 정주여건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전히 신규 비승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결심 단계의 영역에는 투자가 미흡해 보인다. 주로 승계농 청년농업인,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집중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 현황(민선 7기와 민선 8기)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주 : 2022년과 2023년 각각 해당연도에 시행 중인, 시행 예정인 대표 사업 및 규모가 큰 사업만 표시, 저자 작성함.

넷째, 충남의 청년농업인 관련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일명 롯데슈퍼 후원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다(〈표 2-8〉 참고, 김기홍(2018))⁸⁾.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은 충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농가수와 청년 농업인 감소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청년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은 2016년 롯데슈퍼 후원금 사업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거쳐 2017년 3월에 충남도가 선정되면서 진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청년층의 농업분야에 관심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성장여건 조성으로 농업 혁신을 촉진하며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유도,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 확대, 친환경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교육, 회의, 생산유통 조직화, 선진지 견학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즉, 친환경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신규 친환경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육성하기 위해 초기 시설과 관련하여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창업, 육성으로 구분하고 사업 실행을 위해서 각 지역에 청년농부법인을 만들어 관리를 맡기고 법인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유지되도록 하였다.

추진 방향은 ① 영농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인력을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②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광역법인 구성·운영, 교육·컨설팅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후계인력 양성, ③ 사업대상자별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설정 추진, ④ 친환경청년농부법인을 지역별 친환경농업 거점센터운영으로 구심체 역할, ⑤ 친환경청년농부법인 중심으로 농부육성 및 역량강화, ⑥ 청년농부법인 및 농부에 대한 시군의 주도적 관리로 운영활성화 도모 등이다.

사업 내용은 크게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사업과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충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롯데마트와 함께 도비를 매칭하여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 유일무이한

8) 자료 : 김기홍(2018),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현안연구과제, 충남연구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8월 사업 1년차 47명을 선발한 이후 2018년 10월 사업 2년차 청년농부를 선발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친환경청년 농부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단계이다.

사업주체(시군)는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이 선정되었고 각 지역에서 멘토가 1명씩 선정되어 청년농부의 농촌 정착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 내 친환경농민이 청년농업인들의 멘토가 되어서 영농기술과 노하우 등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표 2-8〉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개요(2022년)

구분	사업규모	사업내용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960,000천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1인당 40,000천 원 · 사업량 : 24명(청년농부 개인 또는 청년농부 영농법인) - 연령 : 만39세 이하 - 주소 : 지원기준 시점 충남도내 주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노후 시설개보수, 유통시설 등 - 하우스신축, 관정, 관수, 차광, 커튼, 육묘장 등 생산시설 - 보온덮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연동하우스 골조 시설 등 시설 개보수 - 저온창고, 포장기, 선별기 등 유통시설과 관리기, 온풍기 등 소형농기계 및 농기계임대료 ※ 신규 생산시설 및 시설개보수 외 유통시설, 소형농기계, 냉난방시설 등이 총사업비 60% 초과 금지, 대형농기계, 차량, 농지임대료, 양액재배시설 등 지원불가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친환경청년농부 법인 · 사업량 : 8개 법인(천안, 아산,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 사업비 : 132,600천원(도비 39,780, 시군비 92,820) · 지원기간 : 청년농부사업의 초기임을 감안 법인운영 활성화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지원(2019~2023)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회의, 워크숍, 선진지 견학(국내외) - 체계구축 : 조직화, 생산유통 체계구축, 작부구축 - 홍보 : 홍보마케팅, 모바일앱(쇼핑몰)개발 및 유지관리 - 활동비 등 : 시군 청년농부법인 대표 및 간사 활동비 지원, 광역단위 친환경청년농부 대표 간사 활동비 지급, 청년농부법인 사무관리 및 운영비 지원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현황.

주체별 역할은 우선 친환경청년농부 광역법인은 환경청년농부 운영방안 및 광역단위 생산 유통 등 주요사항 심의 의결(품목, 사업지원, 선발 등), 친환경청년농부 교육 및 공동체 조직화, 멘토링·영농강화프로그램 운영, 생산지도 및 관리, 법인규약 마련 운영, 농지알선, 법인운영 및 자산관리, 사업비집행, 정산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친환경청년농부는 법인설립, 법인가입 및 활동 의무사항 이행, 재배작목 선택 및 생산·유통판매계획 수립, 교육 회의, 농촌활동참여,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획득에 참여한다.

지원현황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선정 인원이 총 194명(지원 173명, 정착 164명, 포기 41명)이다. 포기한 41명은 선정 후 미지원 포기 22명(대체선정 1명), 지원 후 포기 19명(대체선정 9명, 미선정 논산 7명)으로 구성된다. 창업농의 경우 2018년~2019년은 롯데자금 100%, 2020년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되었다. 정착현황은 전체적으로 90.8%에 달한다(〈표 2-9〉 참고).

〈표 2-9〉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현황(2018년~2022년)

구분	지원 현황	사업비					대상자 선정	포기(대체선정)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롯데자금		미지원	지원 후
계	172	6,960,000	1,402,000	2,616,000	984,000	1,960,000	193	22(1)	20(9)
2018년	39	1,560,000	182,400	425,600	152,000	800,000	46	7	9(4)
2019년	52	2,080,000	222,800	515,200	184,000	1,160,000	59	7	9(5)
2020년	44	1,760,000	456,000	1,064,000	240,000	-	50	7(1)	-
2021년	23	920,000	220,800	515,200	184,000	-	23	-	1
2022년	14	640,000	320,000	96,000	224,000	-	15	1	1

구분	5년 간 선정 합계(명)	5년 간 정착 합계(명)	전체 : 선정 대비 정착률(%)	창업농 : 선정 대비 정착률(%)	육성농 : 선정 대비 정착률(%)
충남 합계	194	164	84.5%	74.3%	90.8%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현황.

주 : 저자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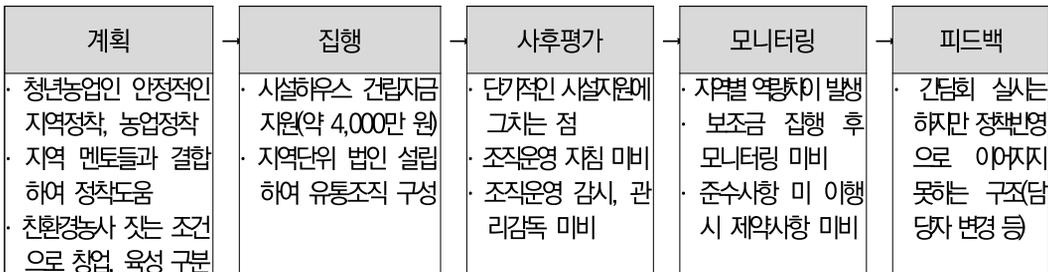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정착지원사업 단계별 평가에 대해서 의견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14〉 참고).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애로사항은 선발된 청년들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가장 곤란했던 것 중 하나는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선발된 청년 가운데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비는 마련했으나 정착 농지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농지 문제의 경우 청년 농업인들은 자금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매매는 힘들고 임대를 해야 하는데 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반드시 농지은행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임대가 쉽지는 않다. 실제로는 지역 내에서 농지 임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를 빌리기가 쉽지 않다.

한편, 자금이 마련되어 있어 농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새롭게 내려온 청년 농업인의 경우 선뜻 지역에서 농지를 내어주려는 농가는 잘 없다. 신규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구하려 할 때 정보를 얻는 곳으로 ‘부모나 친지, 지인’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 이었다는 결과(김기홍, 2019)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도움을 받는 일은 어려워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농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

〈그림 2-14〉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단계별 평가



자료 : 저자 작성함.

친환경청년농부 사업방향은 신규 친환경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시설자금 성격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청년농 육성의 목표와 전략, 2022”)에 따라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큰 그림이 먼저 도출되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사업 지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 계획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연동해야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청년농부’를 어떠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위상이 잡혀야 할 것이다.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세부 사업은 기존 시설 지원과 교육 훈련 지원사업 이외에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마련될 수 있다. 본 사업은 과 단위의 세부 사업으로만 편성되어서는 지속성은 물론 당위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의 좋은 점은 ① 지역농민이 멘토가 되어 청년들이 멘토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자금을 지원해주고 친환경청년농부들이 조직을 만들어 상호의존하며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② 친환경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창업, 육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별 친환경청년농부 법인을 만들어 관리를 맡기고 법인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유지되도록 하였다.

③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농장을 만들고 정착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 친환경청년농부들이 조직을 만들어 상호의존하며 문화를 만들게 하는 의도가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의 한계점은 ① 광역단위로 청년들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위로 지역 내 농민조직들과 결합하여 마을주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다.

② 지역 멘토들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행정은 청년들이 대표로 나오라고 요구했고 이 사업을 받는 청년만의 유통조직을 만들자고 했다.

③ 롯데슈퍼 후원금이 사장의 교체로 인해 끊어지면서 생긴 변화도 사업의 목적이 변질하게 된 이유도 있다.

④ 유지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변수들은 행정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⑤ 단기적인 시설지원에 그치는 점, 조직운영의 지침이나 감시가 미비하여 지역별로 역량이

차이가 커진 점, 당사자에게 4천만 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점, 수혜자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친환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약사항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⁹⁾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비 : 640,600천 원(도 192,000천 원, 시·군 448,600천 원), 재원비율은 도 30%, 시·군 70%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청년농업인
- 지원인원 : 3,200명
- 지원사항 : 연간 20만 원 한도 영농바우처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법」 제3조,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의 그동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추진경과
 - 2020년 7월 : 전문가, 청년농업인 대표 간담회(지원연령, 지원대상, 사용처 등 협의)
 - 2020년 12월 : 사업명 공모 인터넷 투표 진행(「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확정)
 - 2021년 1월 :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2021년 4월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21년 4월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시·군(읍면동) 신청 및 홍보
 - 2021년 6월 ~ 12월 : 1차(7월) ~ 6차(12월) 카드 발급

2021년 12월 15일 집계기준,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결과 : 3,690명
- 총 사업비 : 총 738백만 원, 도비 221.4백만 원, 시군비 516.6백만 원
- 신청인원 : 1,994명(신청율 54%)
- 카드발급인원 : 1,640명(발급율 44%)
- 카드 사용액 : 174,790천 원(53%)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대상자 중 미발급자(56%, 2,050명)에게 발급안내(홍보)를 해야 하지만 대상자 파악에 애로가 있었다. 즉, 지자체가 보유한 농지원부 상의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08.), 충남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

5. 사례조사

1) 전라남도의 단계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첫째, 전라남도의 진입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은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있거나 농업에 관심이 있어 이제 막 농업으로 진로를 잡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기초적인 영농기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표 2-10〉 참고).

〈표 2-10〉 전라남도의 진입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량
①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시군)	·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등	· 신규농업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현장지원팀 운영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시군)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자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연수생 교육훈련비 80만원/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40만원/월
③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	· 스마트 시설 온실 임대차,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기회 부여 · 시설 임차 기간 : 1년~3년까지 1회 한정
④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농업마이스터 활용한 청년농업인 컨설팅 실시 ·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하여 이론만으론 습득하기 어려운 영농기술 노하우 전수
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품목별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장비 활용·제어 기술 등(20개월 과정) · 20개월: 입문과정(3개월), 교육형 실습과정(6개월), 경영형 실습과정(12개월)
⑥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	· 4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 우수 농가와 대화(성공사례 공유) · 청년농업인 우수 농산업 현장 방문 등 · 교육기간 : 3월~12월, 학기당 15주(45시간), 강의+현장체험 형식으로 진행
⑦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 전라남도 21개 시군	·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예비 귀농인 임시주거 리모델링 · 농가체험, 팸투어, 멘토·멘티 등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료 : 전라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검색일자 : 2022.05.01.).

둘째, 전라남도의 정착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은 농사에 경험이 있는 자, 승계받은 자, 4-H 회원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창업농장 조성, 창업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돕고자 하고 있다(〈표 2-11〉 참고).

〈표 2-11〉 전라남도의 정착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량
① 학사농업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거주하는 50세 이하자로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인당 최대 2억 원 용자(道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5년 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② 청년 창업농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만 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영농창업 해당 사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개소당 25,000천 원(도비 25%, 시군비 75%) · 사업내용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③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개소 / 300백만 원 · 사업내용 : 승계한 세대의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 장비로 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④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4-H연합회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0개소 / 675백만 원 · 사업내용 : 과제공모에서 선발된 청년농업인 사업의 모델화 지원, 신기술 투입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체험장 등 조성 지원
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21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받은 청년농가 등 · 만 49세 이하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적정농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 공급주체에서 추천하는 기존 계약재배 농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신축, 개보수) 및 연중생산 컨설팅·교육 지원 - (참여농가) 시설하우스 신축(30백만원), 개보수(10백만 원 한도) - (공급주체) 연중생산 컨설팅·교육비(15백만원), 물류비(12백만 원) 등
⑥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6~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동아리 구성원의 거주지가 2개 이상 시군인 경우 구성원 비율이 높은 시군으로, 동등하면 대표자 소속 시군에 신청주체에서 추천하는 기존 계약재배 농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 등
⑦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도내 청년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22개 시군/ 94.5백만 원(시군별 3백만 원) · 사업내용 : 청년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교육 동시 실시
⑧ 청년4-H Idea L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4-H연합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20 Idea Link 내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량
지원	※ Idea Link(아이디어 링크): 창의적인 아이디어 연결하는 과제 활동 품목연구 동아리	1~2백만 원/ Idea Link · 사업내용 :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자율적인 도 단위 Idea Link 지원으로 영농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공유 및 과제 활동 활성화
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도내 청년농업인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소 / 250백만 원 · 사업내용 : 개발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자율형 사업 공모

자료 : 전라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검색일자 : 2022.05.01.).

셋째, 전라남도의 성숙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은 농사에 경험이 이미 있고 사업가 수준의 궤도에 오른 자를 중심으로 청년농·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등을 돕고자 하고 있다(〈표 2-12〉 참고).

〈표 2-12〉 전라남도의 성숙단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량
① 청년농·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로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1억 원 이상 농업 투자 준비 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 지원단가 : 컨설팅비 6백만 원, 운영비 1.2백만 원 · 사업내용 : 투자계획의 적합성 여부 판단, 투자계획 수정·보완 및 필요역량 등 제사를 위한 심층컨설팅 비용 지원
②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도내 청년농업인	· 사업비 : 5명 / 140백만 원 · 사업내용 : 생산, 가공, 체험, 유통, ICT 등 6차산업 기반조성으로 농업소득 향상 아이디어 사업 지원
③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도내 청년농업인	· 사업비 : 20개소 / 400백만 원 · 사업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 사업으로 추진

자료 : 전라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검색일자 : 2022.05.01.).

2) 강원도의 영월군 청정영월 프로젝트

영월군에서는 청년의 창업, 취업 및 일자리, 문화와 여가 등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여 기존 부서조직에서 청년사업단 부서를 추가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 공간 청정지대를 만들었고 2021년 4월 12일 개소식을 통해 청년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공간 ‘청정지대’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 이끌어내어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청년 누구나 머물고 이용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영월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계획되어 진행 중이다. ① 영월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문화생활 정착 연관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우선 추진, ② 단기적 제도 정비 이후 지역 청년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 ③ 성숙한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육아와 공간, 사람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표 2-13> 참고).

〈표 2-13〉 강원도의 영월군 청년정책 단계별 로드맵

단계	목표	주제	사업분야
준비시기(2021년)	청년 공간 인프라, 청년 육아 지원시스템 확충에 집중	LIFESTYLE 청(靑)춘 시대	·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및 보급 · 청년 여가생활 활성화 · 청년 가정 육아/돌봄 지원 확대
성장시기(2022년)	청년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정주 공간 조성에 집중	STAY 정(停)주 공간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청년 주택 공급 · 청정밸리(영월위케이션) 시범사업 운영 · 청년 마음건강 강화
도약시기(2023년)	청년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	STUDY 지(知)식 청년	· 지역연계형 취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청년이 만드는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발전시기(2024년 이후)	정책 전 분야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LEADERSHIP 청년 대(代)표	· 맞춤형 창업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청년정책 네트워킹 활성화 · 영월청년종합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자료 : 영월군 청년사업단 누리집(<https://www.yw.go.kr/youth/>, 검색일자 : 2022.11.15.)

영월군 청년사업단 5대 추진분야는 ① 일자리 분야, ② 복지·문화 분야, ③ 주거 분야, ④ 교육 분야, ⑤ 참여·권리 분야가 있는데 2022년에는 1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월군은 민선7기부터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영월(이하 청정 영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형 콘텐츠 개발과 지역을 잘 알고 응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 취업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2-15) 참고).

① ‘여유가 있는 청년의 삶 보장’을 위한 소규모 네트워킹 활성화 및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힐링캠프, 창업자 네트워킹, 맞춤형 청년 강좌, 힐링캠프, 청년의 날 행사 등

② ‘만족이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행복주택 건립, 청정 밸리(청년창업 활성화 구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가구 이사 지원 추진

③ ‘성장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지원, 레지던스 인 영월, 영월창업허브, 청년창업 상상 허브, 청년 마을 지원, 청년 힘찬 카드(청년장기근속수당)를 통해 지역 청년은 물론 다른 지역 청년의 생활인구 위한 사업 추진

④ ‘영향력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정책위원회,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 리빙랩, 청년의 날 행사, 누리집 및 SNS 운영(유튜브, 인스타 등), 웹진 발간 등을 통해 청년정책 홍보는 물론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채널 운영

〈그림 2-15〉 강원도의 영월군 청정 영월 프로젝트 장면



자료 : 영월군 보도자료(2022.11.16.), 영월군,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영월로 거듭나다. : 청년이 희망이다, 청정 영월 프로젝트 추진

영월군은 청년정책을 위하여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군수와 부군수 직속으로 이어지는, 독립된 부서로 ‘청년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업단에서 청정 영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표 2-14〉 참고).

〈표 2-14〉 강원도의 영월군 청년사업단 조직도와 담당업무

부서명	직책	담당업무
청년사업단	청년사업단장	· 청년사업단 사업, 청년행사에 관한 총괄·기획·조정 · 대외협력 및 공모/신규사업 발굴 추진 ·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컨설팅 · 창업창업 현장배움 기술지원 · 영월창업허브 운영 등
	주무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2유형) · 청년창업지원사업 : 청년창업스케일업지원사업, 출향청년정착지원(창업, 주택수리비),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자체) · 영월군청년정책네트워크 총괄운영 · 청년인재육성프로젝트 · 사무(의회, 성과관리), DB관리
	주무관	· 영월 청년플랫폼(청춘 영월센터) 조성사업 추진 ·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균특), 청년상생기반구축지원 · 온라인마케팅활성화사업, 서울-영월 청년일자리 연계사업추진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창업(NEXT LOCAL) · 영월군청년정책위원회, 영월군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운영 · 청년클래스 운영, 청년마을만들기, 청년플리마켓 운영
	주무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기존 1유형, 1유형, 3유형) · 영월군청년정책네트워크 · 분과운영청년사업단 누리집, SNS, 웹진

자료 : 영월군청 누리집(<https://www.yw.go.kr/www/contents.do?key=517>, 검색일자 : 2022.11.15.).

영월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 자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청정영월 프로젝트 성과로 2021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가 둔화하였으며, 일부 25~34세의 청년층은 2021년 대비 소폭 반등하였다. 이는 고령인구사망자 수 증가와 학령인구출산율 감소로 볼 때 청년의 순 유입이 증가하였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년정책 추진 결과로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수여받았다.

3)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년키움 추진체계

청년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착안하여 곡성군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키움 지원체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서별 흩어져 있던 정책을 묶어서 “청년 채용청년돈움청년즐거움청년농부다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①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청년돈움), ②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청년채움), ③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청년즐거움), ④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청년농부다움)을 제공한다(〈그림 2-16〉, 〈표 2-15〉 참고).

2019년에는 4개 분야, 총 32개 사업에서 2020년에는 4개 분야, 총 40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키움 지원체계’는 곡성군청 미래혁신과에서 총괄운영하다가 2022년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개 부서(미래혁신과, 도시경제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 진행한다.

중요한 지점은 곡성군 내 청년들이 만든 팜앤디 협동조합과 같은 주체와 협업하면서 청춘작당, 농담 매거진 제작 및 홍보, 청춘 마을만들기, 워케이션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림 2-16〉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년키움 추진체계

<p>도시경제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돈움</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 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 1인 사업, 5,400만원 · 관공영 청년창업과 사업 : 2개 사업, 1억 5천만원 · 청년 마을로 사업 등주계 사업 205명 · 청년 행복마을 : 13개 읍면 70호 · 청년창업지원금 : 4개 읍면 57호 및 5명 · 청년창업 : 청년창업지원금 1,000만원, 10명 </div>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채움</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 주거 및 금융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 다양성 지원 : 12명, 1억 4천만원 · 청년취업특 장학금 지원 : 10명, 700만원 · 신용보증-다자녀가정 금융지원 지원 : 10명/1억 · 청년 창업보증금 : 3개소 · 청년창업 : 10명 </div> </div>	<p>미래혁신과</p>
<p>미래혁신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즐거움</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 문화활동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작당 3건 · 농담 매거진 1건(100부) : 100부, 100만원 · 청년마을 청년축제 1회 · 청년마을 청년축제 1회(100부) : 100부, 100만원 · 청년마을 청년축제 1회(100부) : 100부, 100만원 · 청년마을 청년축제 1회(100부) : 100부, 100만원 · 곡성군 청년문화 활동지원 </div>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농부다움</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영농창업금 지원 : 10명, 2억 4천만원 ·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 10명, 100만원 · 농촌창업 스타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2개소, 100만원 · 수확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10명, 100만원 </div> </div>	<p>농정과</p>

자료 : 1. 농담 누리집(https://nongdam.kr/issue01_policy, 검색일자 : 2022.11.01.).
 2. 곡성군 미래혁신과(2021),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보고회 발표자료.

〈표 2-15〉 전라남도의 곡성군 분야별 청년키움 지원사업 내역(2020년)

청년돌움 분야 (일자리, 15개 사업)	청년채움 분야 (자립기반, 11개 사업)	청년즐거움 분야 (청년문화, 4개 사업)	농부다움 분야 (청년농부육성, 11개 사업)
경력단절여성 역량강화 및 사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운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070 낭만공방 창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비밀언덕, 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 역량강화 아카데미	전남았어요.곡성공할거야 사업	환장할 청춘작당	청년 창업농장 조성지원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청년 챌린지 마켓	곡성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 운영
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조성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
도시청년 소환 프로젝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농공채 네트워크 추진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노동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청년창업 지원	청년대(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청년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구석구석 문화관광지 전문가 양성	옥과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청년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아트 팩토리 청년 도제 지원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적재적소 필수 청년 만들기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전남 청년일자리카페 '필립' 운영			

자료 : 곡성군 미래혁신과(2021),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보고회 발표자료.

4) 충청남도의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구축사업

홍성군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홍성군.예산군의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542백만 원 (국비 1,233, 지방비 309)을 지원받았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귀농·귀촌인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단기 교육과정과 농촌에 정착하고 독립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함에 착안하여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 6조(사업의 지원), 제10조(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귀농학교 운영)에 근거를 두고 청년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②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및 농촌형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③ 청년농부 홍보 및 초보농부 학교 운영, ④ 여성 귀농정착지원 ⑤ 거점형 팜 스쿨(쉐어농장, 쉐어하우스)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그림 2-17〉 참고).

홍성군의 주관 하에 예산군도 참여하여 ‘홍성·예산 생활권협의회’ 산하에 총괄조직으로 ‘중추도시 청년농부 TFT’를 구성·운영, 사업계획 공동기획-공동실행-공동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성·예산 「권역별TFT」를 구성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기술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과 민간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사업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정착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홍성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연계협력 코디네이팅 「중추도시 청년농부 TFT」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거점형 팜스쿨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단계별, 추진 주체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20대~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단·중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청년 초보농부 학교 운영, 마중물캠프, 도시청년 예비과정(농업·농촌 이해 및 진로선택) 운영,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대~40대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교육(1단계), 심화교육을 운영(2단계)했는데 지역 내 기관, 단체, 조합 등과 연계한 거점형 교육활동 지원, 농촌형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농촌형 일자리 개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동을 촉진했다.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농사 경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거점형 팜스쿨(쉐어농장과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초보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며 실습할 수 있는 공간과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교육 받는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안정 정착도 유도했다.

여성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홍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쉐어하우스 및 농지 임대비용 지원, 여성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활동 지원,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으로 청년 귀농·귀촌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2-17〉 충청남도의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자료 : 1. 홍성군청 누리집(<https://www.hongseong.go.kr/>, 검색일자 : 2022.05.01.).
 2. 우성희(2017), 청년+농촌×정책 :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컨퍼런스 발표자료, p.30.
 3. 더퍼블릭뉴스 누리집(<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 검색일자 : 2022.12.10.).

5)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일본은 우리나라 농촌현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2009년부터 지방창생을 목적으로 총무성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부흥협력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¹⁰⁾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는 도시지역에서 과소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동시키고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여 지역브랜드 혹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개발, 판매, 홍보 등 지역부흥 지원활동, 농림수산업 종사활동, 주민생활 지원활동과 같은 ‘지역협력활동’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주,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부흥협력대사업은 지방정부가 도시청년을 채용해 지역에 유입시키면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도시청년은 최대 3년간 공공 일자리를 얻고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지역에 정착해서 창업하면 창업지원금도 받는다. 현재 활동기간이 끝나고 지역에 정착 하는 청년 비율은 60%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역부흥협력대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18〉 참고).

〈그림 2-18〉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업무내용과 장면



자료 : 농민신문 블로그(<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804920&memberNo=36080930&vType=VERTICAL>, 검색일자 : 2022.12.04.)

10) 자료 : 1. 농민신문(2021.09.10.), 농촌에 청년 살게 하려면...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인프라 부족 해결 (<https://www.nongmin.com/344407>, 검색일자 : 2022.12.10.).
 2. 농민신문 블로그(<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804920&memberNo=36080930&vType=VERTICAL>, 검색일자 : 2022.12.04.).
 3. 농업농촌식품 블로그(<https://blog.naver.com/fun-fun-/222945938992>, 검색일자 : 2022.12.04.)
 4. 성주인(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KREI 주관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 (2020.09.14.).

2019년부터는 지역부흥협력대로 활동하기 전 일정기간(2박3일 이상) 동안 지역협력활동을 체험해보면서 지원할 지역을 찾는 '체험 지역부흥협력대제도'를 운영, 2021년부터는 2주간~3개월 동안 협력대의 실제 활동이나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부흥협력대인턴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대원을 모집하고 임명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데 임기는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 이고, 세부 활동 내용, 조건, 대우는 지자체마다 다양하다. 농촌마을 유지 및 기여 활동 정도에 따라 인건비는 연간 최대 400만 엔(4천만 원, 최근자료에는 480만 엔), 활동경비는 최대 200만 엔(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임기 후 창업, 사업계승을 희망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엔 추가 지원, 정주를 위해 빈집을 수리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6.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이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 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는 부재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청년 후계농 육성계획(충청남도)'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농업관점 중심의 정책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 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한다.

둘째, 상위계획 및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농식품부의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행정안전부의 청년 관련 정책(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중앙정부,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배려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앙정부는 주로 영농창업을 위한 생활비 지원, 농업취업지원, 보육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을 하지 않는 귀촌 청년, 농촌으로 이주해 온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다. 성과목표는 모두 영농 정착과 관련한 지표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지원은 물론 멘토링 등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충청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예산)·집행조직 현황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총 37개 사업 중 겸업농 대상은 9개 사업에 55.7억 원, 전업농 대상은 28개 사업에 472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

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 탐색, 준비 단계보다 유입, 진입, 정착, 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내 청년정책 추진부서 현황은 저출산보건복지실 5개 사업, 청년공동체지원국 32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6개 사업, 농림축산국 8개 사업, 농업기술원 8개 사업 등으로 개별적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의 사례를 정리한 결과이다.

전라남도의 단계별 지원정책 사례, 강원도의 영월군 청정영월 프로젝트 사례,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년기움 추진체계 사례, 충청남도의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구축사업 사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등을 소개하였다. 이들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정책 접근,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증시한 접근,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연계 고리를 찾고자 하는 접근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농업인 정책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전업 청년농업인만을 고려한 농업정책 영역 외에도 겸업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추이, 중앙정부가 농칠 수 있는 청년농업인만의 세밀한 특징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중요성,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충남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1. 충남 청년농업인 기초현황

첫째,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기초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황을 먼저 파악하기로 한다. 기초통계자료를 통한 분야별 현황 분석 결과이다(〈표 3-1〉 참고). 핵심내용은 청년인구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경험과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유입을 촉진시키기,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여가와 문화의 생성-소비의 순환구조 마련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1〉 기초통계자료를 통한 충청남도의 청년 분야별 현황분석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 청년인구는 감소할 전망,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증가할 전망 여성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19세~24세 연령 유출이 많고 그 요인은 일자리와 교육 천안시와 아산시 청년인구는 지속 유입, 지역별 청년인구 양극화 심화 전망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공급되는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공공아파트 조건과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 간 격차 발생 향후 이사 및 거주 원인 모두 일자리이므로 지역 내 청년 정착 및 유입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연계 필요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세대와 비교 시, 청년의 삶 만족도와 행복도는 높고, 걱정우울정도는 낮아 비교적 정신건강 측면의 우려스러움은 적음 스트레스에 대한 비율은 성별 크지 않으나 자살충동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정신과 진료는 여성의 접근성이 높음 자살에 취약한 청년(외로움, 고독, 경제적 이유 등)을 발굴, 장기적 관리 대책 필요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대학 졸업 전 조기개입(조기 목표 설정)을 통한 일자리 진입 역량강화 필요 진로 관련 상담, 지원제도 내실화, 실증 경험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청년은 상용직·전일제를 선호하지만 경험·학력·학벌·능력부족으로 선호하는 근로형태 구직에 어려움, 선호보다는 일자리 진입이 우선이라는 인식 발생 청년이 원하는 기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과 정보 구축 필요 일자리 진입 가능성 확대를 위한 일 경험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노동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취업직업 차이 및 구직신청은 여성이 높으나 실제 취업은 남성이 높은 현실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충남,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수도권 취업비율이 높음 취업방법은 지역 취업박람회보다 공채 및 인터넷 구직사이트가 많음.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일자리를 위한 외부유출 가능성 높음 · 취업자의 직업유형과 4년제 학생 간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해결 필요 · 충남 산업구조 특성(보편적 일자리 공급)을 통한 청년일자리 진입 촉진 필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을 위하여 일자리 진입을 우선 선택한 청년들은 첫 일자리 진입 후 기대했던 수준 및 환경에 대한 차이 발생 → 나은 일자리 준비를 위한 이탈 발생하면서 청년 간 경쟁 심화가 높 아지므로 지역 내 일자리 유입 촉진,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일자리 이동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 원인은 일(업무)에 대한 만족, 고용안정성, 일하는 시간, 개인발전 가능성,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율성 → 일 경험 확대를 통한 이탈 방지책 마련 필요 ·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원인은 결혼, 임신, 출산으로 여성의 구직신청, 고졸학력의 구직신청이 높은 것과 관련,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로 유입 후 이탈가능성 높음. · 청년창업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청년창업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여성의 경우, 시간활용 유용성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관계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여가활동 인식은 삶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부족 등의 사유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여가활동 선호 · 청년은 문화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 청년 문화컨텐츠 생성 → 청년 소비 선순환 구조 생성 필요 · 충남 청년이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제공 필요
	사회인식과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취약계층이 결혼에 대한 의향 낮음. ·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출산의향이 없는 주된 원인으로 20대는 자아실현, 30대는 양육비 부담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는 주로 자신+배우자의 근로 수입으로 월평균 '200~300만 원' 수준 · 연령과 소득은 비례, 30대는 소득만족도가 낮고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심각하다고 느낌 · 소득 증대보다 부채증가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과 관련한 사유가 많음
	※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충청남도, 2022 충청남도 청년통계(2021년 기준, 외국인 포함). · 충청남도, 2020 청년종합실태조사(2020년 기준). · 충청남도, 2022 충남 사회지표 분석(2021년 기준). · 통계청, 사회조사 : 2017년~2022년 각연도 원데이터(2017년~2022년 기준). · 고용노동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데이터(2017년~2019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데이터(2018년~2020년 기준). · 통계청, KOSIS 최신자료.

자료 :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수행, 연구용역 보고서(현재 미발간).

주 : 최근 충청남도 청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23.06.28.)**는 부록 참고바람.

둘째, 전국 및 충청남도의 **청년인구** 현황을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집계한 결과 이다(〈표 3-2〉 참고).

전국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연령인 34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9,734,438명(충남 전체 인구의 18.9% 차지), 충남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연령인 39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13,032,692명(충남 전체 인구의 25.3% 차지)으로 집계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연령인 34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352,317명(충남 전체 인구의 16.6% 차지), 충남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연령인 39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484,574명(충남 전체 인구의 22.8% 차지)으로 집계하고 있다. 전국 수치와 비교해보면, 충남의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전국 및 충남의 청년인구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법률 및 조례	연령 기준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총 인구수
전국	-	-	2,941,841	3,475,340	3,317,257	3,298,254	51,439,038
	청년기본법의 청년	19세 이상 ~ 34세 이하	9,734,438				전국 인구의 18.9%
	충남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3,032,692				전국 인구의 25.3%
충남	-	-	111,377	119,762	121,178	132,257	2,123,037
	청년기본법의 청년	19세 이상 ~ 34세 이하	352,317				충남 인구의 16.6%
	충남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484,574				충남 인구의 22.8%

자료 : 1. 행정안전부(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

2. 청년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3.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52호, 2023. 3. 10., 일부개정].

주 : 농림어업조사 통계수치는 20세~24세로 집계되므로 비교를 위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수치도 20세 구간의 나이부터 시작함.

셋째, 전국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을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집계한 결과이다(〈표 3-3〉 참고).

전국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연령인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29,64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0% 차지), 충남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연령인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66,553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7.7% 차지), 후계 청년농어업인법 및 충남 청년농수산인 조례 상 청년농업인 연령인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98,538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3.8% 차지)으로 집계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연령인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차지), 충남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연령인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차지), 후계청년 농어업인법 및 충남 청년농수산인 조례 상 청년농업인 연령인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차지)으로 집계하고 있다. 전국 수치와 비교해 보면,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가 전체 농업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전국 및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연령 기준)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40세 ~ 44세	45세 ~ 49세	총 농업인 인구수	
전국	-	-	42,679	47,612	39,356	36,906	50,881	81,104	2,165,626	
	청년기본법의 청년	19세 이상 ~ 34세 이하	129,647							전국 농업인의 6.0%
	충남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66,553							전국 농업인의 7.7%
	후계청년농어업인 법의 청년	50세 미만	298,538							전국 농업인의 13.8%
	충남 청년농수산인 조례의 청년	18세 ~ 49세	298,538							전국 농업인의 13.8%
충남	-	-	3,705	3,746	3,516	3,820	5,166	8,442	242,327	
	청년기본법의 청년	19세 이상 ~ 34세 이하	10,967							충남 농업인의 4.5%
	충남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4,787							충남 농업인의 6.1%
	후계청년농어업인 법의 청년	50세 미만	28,395							충남 농업인의 11.7%
	충남 청년농수산인 조례의 청년	18세 ~ 49세	28,395							충남 농업인의 11.7%
	참고 지표	(2020년)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1,259명(전국 12,426명) (2021년) 충남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신청인원 1,994명(계획인원 3,690명)								

자료 : 1. 통계청(2022),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성비.
 2.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08.), 충남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
 3. 청년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4.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52호, 2023. 3. 10., 일부개정].
 5.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2. 20.] [충청남도조례 제4456호, 2019. 2. 20., 제정].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정].
 주 : 농림어업조사 통계수치는 20세~24세로 집계되므로 18세~19세 구간의 나이는 미포함함.

넷째, 전국 및 충청남도의 연령별 농업인구 구조와 분포 현황이다(〈표 3-4〉 참고).

우선 전국의 경우, 2005년에는 60세 이상 농업인구가 39.2%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57.0%를 차지하였다. 충남의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구가 40.1%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61.9%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지점은 40대 농업인구 비중은 감소하는데 반해 70대 이상 농업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구 구조 분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전국 및 충남의 연령별 농업인구 구조와 분포(2005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20년			
	전국	비중	충남	비중	전국	비중	충남	비중
10대	492,877	14.4%	64,575	14.4%	159,647	6.9%	16,545	6.3%
20대	292,335	8.5%	34,424	7.7%	131,768	5.7%	11,619	4.3%
30대	247,850	7.3%	30,100	6.8%	103,814	4.5%	10,666	4.0%
40대	448,595	13.1%	58,612	13.1%	176,096	7.6%	18,415	6.9%
50대	600,863	17.5%	78,882	17.7%	422,407	18.3%	44,617	16.7%
60대	760,268	22.1%	97,553	21.8%	641,794	27.7%	74,327	27.9%
70대	468,221	13.6%	64,482	14.4%	465,588	20.1%	58,546	22.0%
80대 이상	122,564	3.5%	17,394	3.9%	212,950	9.2%	31,774	12.0%
합계	3,433,573	100.0%	446,022	99.8%	2,314,064	100.0%	266,509	100.1%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성비.

다섯째, 전국 및 충남 청년(19세~39세)의 산업별 취업자 및 구직희망 직종 현황이다.

① 충남의 청년 산업별 취업자 현황은 2021년 상반기 청년 취업자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의 취업자가 전체 3.8%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1.9%, 광·제조업 47.9% 등 산업별 직군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기피 직군의 하나로 청년들의 관심이나 유입에 대한 선호가 낮음을 반증하는 수치이다(〈표 3-5〉 참고).

〈표 3-5〉 충남의 청년 산업별 취업자 현황(2021년)

(단위 : %)

취업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00.0%	3.8%	47.9%	7.5%	27.3%	11.5%	51.9%

자료 : 1.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MDIS).

2.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청년통계(2022),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

(http://chungnam.go.kr/orga/board.do?mnu_cd=STAMENU00078, 검색일자 : 2022.12.10.).

주 : 1. 충청남도(시도별 집계) 기준으로 시군별 집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산업별 취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대분류 기준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제조업(B,C), 건설업(F), 도소매·음식숙박업(G,I), 전기·운수·통신·금융(D,H,J,K),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E, L~U)로 구분함.

3. 상반기(2021.4.15.), 하반기(2021.10.15.) 기준 만19~39세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함.

② 전국의 청년이 구직을 희망하는 직종에서도 농림어업 관련직 선호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 구직 희망 청년 79,412명 중 농림어업 관련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으로서 25순위 중 22위를 차지한 반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은 23,965명(30.2%)으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농림어업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표 3-6〉 참고).

〈표 3-6〉 전국의 청년 구직희망 직종 순위(2021년)

(단위 : 명, %)

순위	구직 희망 직종	구직 희망자 수(명)	비중(%)
1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3,965	30.2
2	보건·의료 관련직	5,862	7.4
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5,825	7.3
4	전기·전자 관련직	5,659	7.1
5	기계 관련직	4,963	6.2
:	:	:	:
22	농림어업 관련직	333	0.4
25	기타	17	0
	전체	79,412	100.0

자료 : 고용노동부(2021), 「구직신청자료」

주 : 1. 구직희망 직종은 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개정) 기준임

2. 기타는 분류불능 경우임

여섯째,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 및 연령 외 기준에 대한 현황이다.

①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 정의 중 연령 기준은 무려 18개 연령구간 범위를 보이는 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지역별, 일반 청년인과 청년 농어업인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연령구간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청년농수산인은 18세부터 49세까지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면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표 3-7〉 참고).

〈표 3-7〉 충청남도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기준

연령 구간	15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하한선 없음	없음	
	15세 이상 ~29세 이하	15세 이상 ~29세 미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5세 이상 ~39세 이하	18세 이상 ~34세 이하	18세 이상 ~39세 이하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만18세 이상~만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미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만18세 이상~45세 이하	18세 이상 ~49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만19세 이상~45세 이하	40세 미만	50세 미만
총합계	7	1	6	1	1	14	6	2	1	2	3	1	1	1	4	1	2	2
일반청년인	7	1	6	1	1	13	5	1	0	0	3	1	0	1	4	1	0	0
청년농어업인	0	0	0	0	0	1	1	1	1	2	0	0	1	0	0	0	2	2
청년기본법														●				
충남 청년기본조례															●			
충남 청년농수산인조례																		●
후계청년농어업인법(후계농어업인)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청년농어업인)																	●	

- 자료 : 1.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3. 청년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4.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52호, 2023. 3. 10., 일부개정].
 5.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2. 20.) [충청남도조례 제4456호, 2019. 2. 20., 제정].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정].
 7.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8. 아주경제 누리집(<https://www.ajunews.com/view/20220816145335248>, 검색일자 : 2022.08.16.)

주 : 총 48개 조례 및 법률을 검색한 결과로서 세부 조례 및 법률명은 참고문헌에 명시함.

② 연령 외 기준을 살펴보면,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 정의 중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지역 이주, 해당지역 생활, 해당지역 희망, 해당업종 경영(경력기간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별, 일반 청년인과 청년농어업인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에서는 연령 기준 외에 다른 조건들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표 3-8〉 참고).

〈표 3-8〉 충청남도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외 기준

구분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지역 이주	해당지역 생활	해당지역 희망	해당업종 경영 (경력기간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총합계	27	18	1	11	9	12	5
일반청년인	20	12	0	11	9	7	0
청년농어업인	7	6	1	0	0	5	5
비고							(5개 시군)

- 자료 : 1.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3. 청년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4.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52호, 2023. 3. 10., 일부개정].
 5.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2. 20.] [충청남도조례 제4456호, 2019. 2. 20., 제정].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정].
 7.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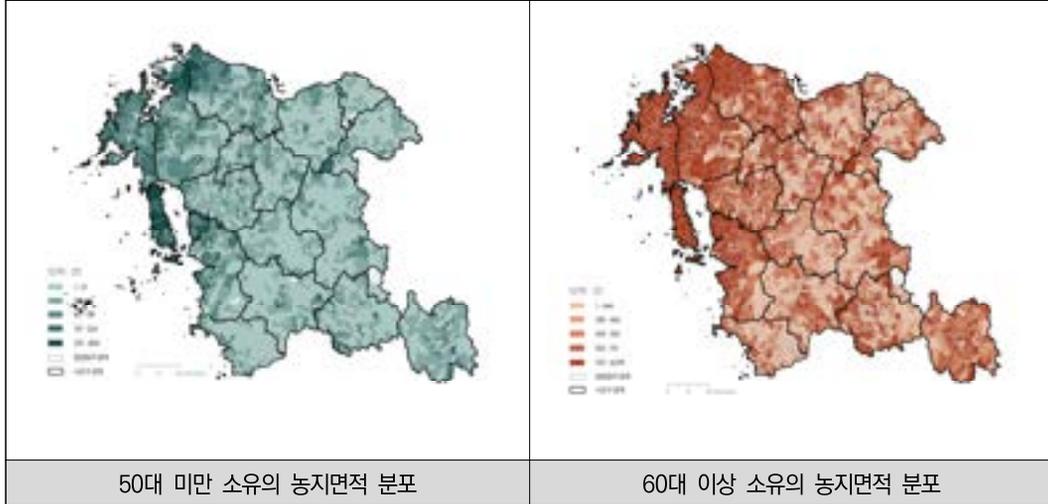
주 : 총 48개 조례 및 법률을 검색한 결과로서 세부 조례 및 법률명은 참고문헌에 명시함.

일곱째,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농지소유 분포 현황이다(〈그림 3-1〉 참고).

충청남도 농지면적 중 40대 이하가 소유한 비중은 전체 면적의 10.5%에 불과한 반면, 50대가 소유한 비중은 19.8%, 60대 이상이 소유한 비중은 69.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령 농업인 계층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청년농업인 계층은 농지소유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를 둘러싼 기존 농업인 세대와의 갈등이 존재하는 점,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용 여부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는 점 등은 주요 이슈이다.

〈그림 3-1〉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소유농지 면적분포(2022년 기준)

(단위 : 건)



자료 : 1. 강마야, 최돈정, 손성규(2022), 충청남도 농지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종합 실태분석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2. 강마야, 최돈정, 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통권 35호), 충남연구원.
 3. 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여덟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 현황이다(〈표 3-9〉 참고).

청년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은 대표적으로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등이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여부가 확인된다면 신청가능한 농업정책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중고 농기계 구입자금 등도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이 좀 더 여유로운 편이다.

〈표 3-9〉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 현황(2023년 2월 기준)

구분	대출대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핵심서류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	청년농업인	25년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상환)	농업창업자금(세대당) 최대 5억 원 이내	고정+변동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연납)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후계농업경영인	25년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상환)	농업창업자금(세대당) 최대 5억 원 이내	고정+변동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구분	대출대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핵심서류
		원금균등상환)	원 이내		(연납)	문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우수후계농업경 영인	15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최대 2억 원 이내	고정금리(연 0.5%)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매1년마다 납부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1년 (재해대책경영자 금은 최장 3년 연장가능)	1천만 원 이내 (단, 재해대책경 영자금은 5천만 원 이내)	고정+변동	일시상환 (연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사업대상자	15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 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	고정+변동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연납)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농업종합자금	농업인, 농업법인(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운전자금 : 2년 이내 -시설자금 : 13년~15년 -개보수자금 : 5년~10년	-운전자금 : 1 회전 소요 운전 자금 이내 -시설·개보수자 금 : 총 사업비 의 80% 이내 -개보수자금 : 5년~10년	-일시상환 -원금균등분 할상환	-운전자금 : 일시상환 -시설·개보수자금 :원금균등분할상환	
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 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12년 이내 (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농업인(개인사 업자 포함) : 20억 원 이내 -농업법인 : 30 억 원 이내	고정금리 연 1.0%	5년 거치 7년 원금균등상환 (연납)	
농촌주택개량자금	사업대상자	20년 이내 (1년 거치 19년 원금균등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금균등상환)	최대 2억 원(신 축, 개축, 재축) 또는 1억 원(증 축, 대수선) 이내	고정+변동	1년 거치 19년 원금균등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금균등상환 (연납)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인, 농업법인	5~8년 이내 (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농기계별 정부용 자지원한도 이내 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고정+변동	원금균등분할상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농업인, 농업법인	농기계별 3~8년 이내	중고농기계용자 지원기준에 의한 지 원한도 이내 구입 금액의 80% 이내	고정+변동	원금균등분할상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료 : NH농협 농·축협 금융상품물 누리집(<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60R.view>, 검색일
자 : 2023.02.03.)

아홉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거정책 현황이다.

①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개요와 선정된 지역현황이다(〈표 3-10〉 참고).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에 의거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만 40세 미만 청년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모집호수가 30호 이내라서 수혜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형 혹은 단독주택 유형도 포함되어 있어서 1인 청년 세대 혜택은 더 작아지게 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목적 : 귀농귀촌 청년층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농촌 출산율을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
· 선정대상 : 2019년 청년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시범사업 지구 4개 시·군 선정, 2022년 1개 지구 선정, 2020년까지 2년 동안 개소당 80억 원 지원 * (선정 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경남 밀양시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과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2019~2022년까지 지구당 총 80.2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혹은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
· 임대조건 :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자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의무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표 3-10〉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촌보급자리주택 현황(2022년)

선정시군	주택명	대상(공통사항)	대상(유형별)	모집호수	임대기간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급 자리주택	만19~39세 이하 세대주, 관외 거주자(공고일 기준)	-(단독주택) 취학아동을 한 명 이상 둔 가정 -(쉐어주택) 1인 청년 세대주	23호 - 단독주택 6호 - 쉐어주택 17호	단독주택_최초 3년, 갱신 2년(최대 취학 아동 졸업까지) 쉐어주택_최초 2년, 갱신 2년(최장 10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청년농촌보급 자리 주택	만19~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세대주(1981년 이후 출생자)	-(가족형) 미성년 자녀 세대 가정, 신혼부부 -(청년형) 1인 청년세대 주, 신혼부부	29호 - 가족형 15호 - 청년형 14호	최초 2년, 갱신 4회 (최장 10년 가능)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청년농촌보급 자리 임대주택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세대주	-(가족형) :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 -(공유형) : 청년 2명 이상이 팀 결성하여 신청 -(원룸형) :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 청년 1인 세대	12호 - 가족형 1호 - 공유형 7호 - 원룸A형 3호 - 원룸B형 1호	최초 2년, 갱신 2회 (최장 6년 가능, 다만 자녀 사별초등학교 재학 시 졸업년도 까지 갱신 가능)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청년 농촌보급자리 임대주택	만19~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세대주(1983년 출생자부터), 관외 거주자(공고일기준)	-(단독주택) 취학아동을 한 명 이상 둔 가정, 신혼부부 -(쉐어주택) 1인 청년 세대주	30호 - 단독주택 15호 - 쉐어주택 15호	최초 2년, 갱신 4회 (최장 10년 가능)

선정시군	주택명	대상(공통사항)	대상(유형별)	모집호수	임대기간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청년 농촌보급자리 임대주택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수료자 중 임대 형 스마트팜 입주자 -만 40세 미만 귀 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 농귀촌 신혼부부	(2022년 선정되었으므로 현재 계획 수립 중)	30호 예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02.06.),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② 그 외에도 주거와 직접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충남형 리브투게더(민선 8기 중점공약 과제), 충남 꿈비채(민선 7기 더 행복한 주택), 충남 빈집정비 시범사업(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빈집, 함께 써유’ 사업) 등이 있다.

-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농가주택)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리모델링 또는 이전 및 집적화를 도모하고 생활서비스 여건 확충을 통하여 청년 세대와 기존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 출발점이다. 조영재(2022)는 마을공동 생활형(단독입주형과 공동입주형), 마을재편형(마을리모델링과 마을재개발), 마을이전형(일부이전형과 집단이전형) 등으로 제안한 바 있다.¹¹⁾
- 충남 꿈비채(민선 7기 더 행복한 주택)¹²⁾는 입주대상을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으로 정하였다.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3가지 혜택인 ‘더 저렴한 주거비, 더 편한 주거환경, 더 안심되는 육아환경 조성’을 더해서 공급하고 있다.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충남 빈집정비 시범사업(‘빈집, 함께 써유’사업)은 도시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있는 빈집(4등급)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예산을 투입(총 예산 225백만 원, 도 30%, 시군 70%)하여 주차장, 쉼터, 텃밭 등 마을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으로 해당기간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및 빈집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공공 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11) 자료 : 조영재(2022),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 현안연구과제, 충남연구원.

12) 자료 : 충남 꿈비채 누리집(<http://happyapt.co.kr/site/>), 검색일자 : 2022.11.28.).

2. 충남 청년대상 주관식 의식조사

1) 조사 개요

충남의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현황 및 방향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자문을 염두한 주관식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명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서면자문의견서
- 조사목적 :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 청년세대의 특징,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 청취
- 조사기간 : 2022. 08. 22.(월) ~ 2022. 09. 02.(금), 12일 간
- 조사주관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조사방법 : 이메일 회신
- 조사대상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및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 등 10명
- 조사내용 : 3개 항목, 전부 주관식으로 구성
 - ① 지난 몇 년 동안 ‘청년육성, 청년농업인육성’ 등에 대해서 줄기차게 많은 얘기들을 해왔다. 많은 사업이 생겨났지만 왜 성과가 미흡했을까?(반성과 평가, 향후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제언)
예. 행정의 추진체계,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예. 영농정착지원금 등), 기타 자율의견 작성
 - ② 농업·농촌에서의 우리 청년 세대의 특징, 기성세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 설계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예. 주거 부문, 여가 부문(문화, 삶의 질 등), 농사(농업) 부문, 복지 부문, 공동체 부문, 마을주민과의 관계 부문, 기타 자율의견 작성
 - ③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2) 분석 결과

첫째,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 관련한 반성과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행정의 추진체계

-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 정책공급과 정책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 (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존재
- 단발성 정책이 대부분, 사후관리 부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전담 기구의 부재
- 행정의 순환보직 체제로 인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전문적 행정 담당자의 부재
- 당장 청년사업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 필요
-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음
- 농림부, 지자체, 농협 등 각 농업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필요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

- 경직된 행정집행방식 유연하게 풀고 지속가능한 청년농부 육성정책 기틀 마련 필요
-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사업비를 적기, 적재, 적소에 사용 불가
- 공급자(행정)에 맞춘 사업 진행이 아닌, 수요자(농업)를 고려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사업 집행 기간 조정 필요
- 사업비 집행 증빙에 대한 어려움(복잡한 서류처리와 제한적 사용 인정)
- 농촌에서의 역귀농 청년농업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필요
- 실제 청년들의 니즈를 조사하지 않고 先 정책지원사업 제안, 後 청년 모집의 시스템 구조로 인한 획일적이고 제약적인 사업방식
- 사업지원 후 사후 관리를 통한 단계별 지원과 패널티, 인센티브 병행

둘째, 청년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청년농업인”이라는 한 묶음의 집단 안에서 개인마다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어 천편

- 일률적인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역효과 유발
-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 권위에 대한 조심성 약화, 지역소속감 약화 등으로 긴밀한 지역 내 공동체 의식 부족
 - 1차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2차, 3차로의 농업활동 확장을 시도
 - 농사와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 다수
 - 농업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음
 -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다수
 - 다양한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촌에서도 여가문화 생활을 즐기는 지원사업 확대
 - 문화 소비가 필요하고 지출에 비중이 있음
 -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필수성을 느끼는 청년이 비교적 적음
 - 반농반X를 꿈꾸며 전업농이 아닌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농업인 증가
 - 농가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정착형 주거가 아닌 기간 임대형 주거방식을 선호
 -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보다는 느슨하고 사생활이 존중되는 관계 선호
 - 보장,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 높음
 - 청년농업인이라는 집단 내에서도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어 천편일률적인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역효과 유발 가능성

셋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 고려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주로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기존 농업정책에서 제기했던 내용(구조개선, 농업기반 분위기 조성, “돈”, 지역 거버넌스, 청년 네트워킹 등)과 매우 유사하였다. 요즘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이다(〈표 3-11〉 참고).

〈표 3-11〉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농업정책 지원 필요 · 구조개선 · 농업 기반 분위기 조성 · 농업(직업) 우려 · 농업에 대한 관념 전환 · 농업의 지속성 · 농업 필요성 인식 · 소외현상 개선 · 농업 체험 프로그램 · 농업관련 다양성 · 인식 개선 · 인프라 구축 · 일회성 지원방식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농장 시범 운영 · 기술교육 · 교육농가 인센티브 · 높은 생산성 · 승계농에게만 추천 · “돈” ·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구축 · 조기 청년 육성 정책 · 청년농업인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거버넌스 · 지역 멘토 · 지역 탐색의 기회 · 마을주민 인식개선 · 마을주민 환경조성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청년 · 지역의 명물화 · 청년을 지역 인구로서 보는 시각 탈피 · 청년에 대한 기대 버리기 · 새로운 직종 개발 · 자유로운 유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네트워킹 · 청년 문화 조성 · 청년 유출 방지 · 청년 인턴제도 · 청년활동 플랫폼 필요 · 청년농업인 인식 개선 · 청년들 공간 마련 · 정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어하우스 · 교통문제 해결 · 다양한 놀거리

주 : 저자 작성함.

넷째, 기존 청년농업인 관련한 정책과 사업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전체적인 사업평가

- 청년사업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 청년농업인 육성에 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
- 청년농업인을 위하여 초기 교육 및 생활비 지원 등 초기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미흡하여 청년들이 제대로 농촌지역에, 농업에 정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 현재 농업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영농 형태로 바뀌는 중이지만 행정 지원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②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 대다수 청년지원사업들이 양적 실적에만 맞춰져 있어서 육성도 필요하지만 성과지표 자체를 청년농업인 육성율이 아닌 농촌지역 정착률 등으로 변경할 필요
- 이미 지역에 정착한 청년에게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지원받은 청년들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 다양한 실패사례 공개를 통한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영농 기반이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활성화 필요

③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귀농 교육의 경우 정책 수립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교육 내용과 방식 필요
 - 농업법인, 영농조합 인턴 지원제도에서 청년이 원하는 직장, 법인이 원하는 청년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필요
 - 청년농업인들이 기성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실행하고 그저 교육 시간 채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같은 청년농업인 중 이미 정착하고 유익한 분들로 멘토로 삼는다면 공감대와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라이브 커머스 교육, 멘토링 교육 없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
- ④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농업 창업인에게 주택구매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 매매를 할 만한 집도 없고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
- ⑤ 농지확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농어촌공사의 청년창업농 토지임대사업, 농지은행사업은 양질의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
 - 청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순위와 상관없이 사실상 양질의 쓸 만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
 - 청년농업인의 토지임대사업(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직장은 논과 밭이며 양질의 토지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함.
 - 비축농지의 경우 배수불량이나 기타 농작업 형태로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가 대부분, 논의 경우 과잉생산 문제로 타작물(콩, 밀, 사료작물 등) 재배조건으로 임차 가능
- ⑥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일자리 지원 정책의 경우 선택지도 적지만 질도 낮고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보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대부분
 -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인건비 지원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그 외 정부지원 인건비 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되는데 같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라도 기간이나 혜택 차이를 고려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
 -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8개월,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년 + 자기계발비와 교통비 지원, 금산군청에서 제공하는 2년으로 지원 차이 존재
- ⑦ 영농정착지원금 및 영농종합자금(대출) 사업에 대한 의견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초기 농촌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많은 도움, 확대 필요
 - 청년창업농과 영농후계자 간 지원 측면에서 바우처 카드 지원금 여부 차이 밖에 없는 현실, 대출도 제한적이라 현재 농업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다수 존재
 - 80년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규로 최대 3억 원 대출을 시행해 주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즉, 2020년대 농업은 1980년대 농업과 달리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으며 토지 구입 후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
 - 실질적인 영농자재 및 영농행위 인건비 소모성 비용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한계
 - 토지구입 및 시설 자금의 경우(담보가능) 대출만 총 3억 원 상당의 대출 가능
- ⑧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청년농부들이 조직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단기적인 시설지원에 그치는 시스템으로 향후 육성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제약사항이 미비한 한계, 개선 필요

3.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충남의 청년후계농업인 중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중심으로 영농정착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명 : 충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심으로 한 영농정착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충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현재 정착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향후 정책실행 방안 의견수렴 등
- 조사기간 : 2022. 11. 18.(금) ~ 2022. 11. 27.(일), 10일 간
- 조사주관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조사방법 :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폼을 활용한 모바일 설문(URL)
- 조사근거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농수산인들의 실태파악) 에 의거
- 조사대상 : 충남 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846명(2018년~2022년) 중 200명 응답 완료(회수율 23.6%)
- 조사내용 : 3개 부문, 32개 항목,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
 - ① 인구학적 속성에 대한 질문(11개 객관식 항목)
 - ② 영농정착 실태에 대한 질문(20개 객관식 항목)
 - ③ 청년농업인 정책 관련 구체적인 해결방안(1개 주관식 항목)
- 조사한계 : 조사항목의 한계점으로 승계를 받은 청년농업인 외에 승계를 받지 않은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항목 부족

2)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의 실제 거주지역 및 영농활동 지역에 대한 결과이다(〈표 3-12〉 참고).

응답자의 실제 거주지역은 부여군이 22명(11%)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20명(10%) 순이었고 영농활동을 하는 지역 또한 부여군이 22명(10.9%)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20명(10%), 예산군 2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지역과 실제 영농활동 지역이 다른 경우는 총 51건(약 25.5%)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12〉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영농활동 지역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명)	응답률(%)	영농활동 지역(명)	응답률(%)	거주지-영농지 불일치(건)
① 천안시	20	10.0%	20	10.0%	3
② 공주시	11	5.5%	11	5.5%	2
③ 보령시	8	4.0%	9	4.5%	1
④ 아산시	14	7.0%	15	7.5%	8
⑤ 서산시	19	9.5%	19	9.5%	4
⑥ 논산시	19	9.5%	19	9.5%	5
⑦ 계룡시	0	0.0%	0	0.0%	0
⑧ 당진시	11	5.5%	11	5.5%	6
⑨ 금산군	16	8.0%	16	8.0%	3
⑩ 부여군	22	11.0%	22	10.9%	2
⑪ 서천군	8	4.0%	8	4.0%	2
⑫ 청양군	5	2.5%	5	2.5%	1
⑬ 홍성군	18	9.0%	17	8.5%	3
⑭ 예산군	19	9.5%	20	10.0%	8
⑮ 태안군	9	4.5%	9	4.5%	2
⑯ 기타(타시도)	1	0.5%	0	0.0%	1
합계	200	100.0%	201*	100.0%	51

주 : *는 한 개 이상의 지역에서 영농활동 중인 인원 포함하여 중복 집계한 것임.

둘째, 응답자의 유형, 성별, 연령대, 동거가족수에 대한 결과이다(〈표 3-13〉 참고).

응답자의 유형은 비승계형 창업농업인이 120명(60%)이었고 승계형 창업농업인이 80명(40%)으로 부모님의 영농을 물려받는 승계형보다는 귀농을 통한 비승계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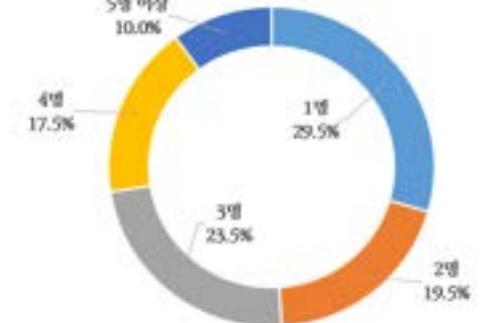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5명(22.5%), 남성이 155명(77.5%)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1세 이상~30세 미만이 112명(56%)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동거가족수는 본인만 포함하는 1인 가구가 59명(2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혼인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높았고, 본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3명의 가구원 수도 47명(23.5%)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응답자의 유형, 성별, 연령대, 동거가족수

(단위 : 명, %)

유형			성별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률(%)	성별	응답자 수(명)	응답률(%)
승계형 창업농업인	80	40.0%	여성	45	22.5%
비승계형 창업농업인	120	60.0%	남성	155	77.5%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연령대		동거가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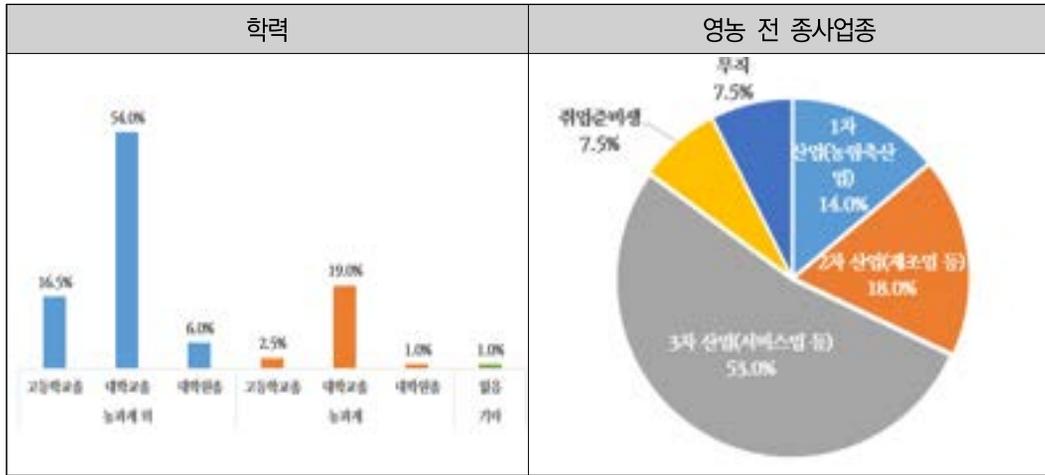
주 : 저자 작성함.

셋째, 응답자의 학력 및 영농 전 종사업종에 대한 결과이다(〈표 3-14〉 참고).

응답자의 학력은 농과계 외 대학교 졸업이 108명(54%)로 가장 많았고, 농과계 대학교 졸업 38명(19%), 농과계 외 고등학교 졸업이 33명(16.5%) 순으로 나타나 반드시 농업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영농 전 종사업종은 3차 산업(서비스업 등) 종사비율이 106명(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차 산업(제조업 등) 36명(18%), 1차 산업(농림축산업) 28명(14%)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응답자의 학력과 영농 전 종사업종

(단위 : 명, %)



주 : 저자 작성함.

넷째, 응답자의 현재 영농여부,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표 3-15〉 참고).

응답자 중 196명(98%)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75명(37.5%)으로,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03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표 3-15〉 응답자의 현재 영농·영농정착·생계유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합계
현재 영농 여부	196 (98.0%)	4 (2.0%)	-	200 (100.0%)
안정적 영농 정착 여부	73 (36.5%)	75 (37.5%)	52 (26.0%)	200 (100.0%)
농사만으로 생계유지 여부	71 (35.5%)	103 (51.5%)	26 (13.0%)	200 (100.0%)

주 : 저자 작성함.

다섯째, 응답자의 영농투자 금액과 연간 농업소득에 대한 결과이다(〈표 3-16〉 참고).

응답자들이 영농활동을 위한 평균 영농투자 금액은 2억 8,951만 원이었다. 구간별로 살펴 보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투자한 청년농업인은 107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이상 투자한 청년농업인도 41명(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년농업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다.

반면, 응답자들이 영농활동으로 벌어들인 연간 농업소득은 4,556만 원이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농업소득을 보이는 청년농업인은 103명(58.9%)으로 가장 많았다.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농업소득을 보이는 청년농업인은 39명(22.3%)이었고 1억 원 이상 농업소득을 보이는 고소득 청년농업인도 24명(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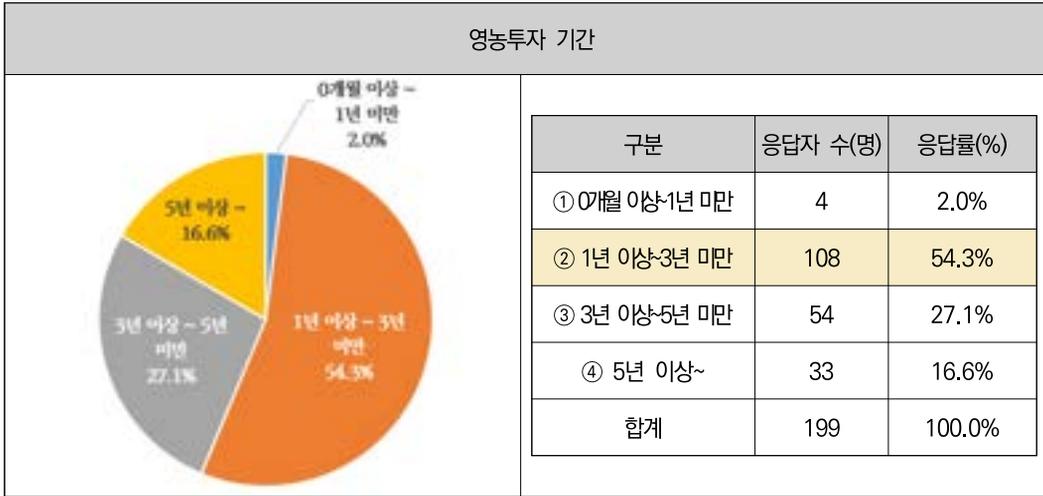
응답자들은 영농활동을 위해서 평균 3년이란 기간 동안 투자하고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이 108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5년 미만 54명(27.1%), 5년 이상 33명(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간 평균값으로 환산 시 연간 영농투자 금액은 14,772만 원, 연간 농업소득은 4,556만 원인 것으로 계산되어 이들 간 차액은 10,216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응답자의 영농투자 금액과 연간 농업소득

(단위 : 명, %)

영농투자 금액			(영농을 통해 얻는) 연간 농업소득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 5천만 원 미만	31	15.6%	① ~ 1천만 원 미만	9	5.1%
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	10.1%	②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103	58.9%
③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07	53.8%	③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9	22.3%
④ 5억 원 이상~	41	20.6%	④ 1억 원 이상 ~	24	13.7%
합계	199	100.0%	합계	175	100.0%
평균 영농투자연도(년)	3년		연간 농업소득(만 원)	4,556	
평균 영농투자금액(만 원)	28,951		연간 농업소득-영농투자 차액(만 원)	-10,216	
연간 영농투자금액(만 원)	14,772		월 농업소득 환산(만 원)	379.6	



주 : 저자 작성함.

여섯째, 응답자의 영농단계 위치, 정책이 집중해야 할 영농단계 및 영농영역에 대한 결과이다(〈표 3-17〉 참고).

본인 판단하기에 자신이 처해있는 영농단계를 ‘유입 및 성장단계’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15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영농정책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영농단계 역시 ‘유입 및 성장단계’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83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책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영농영역은 ‘영농자금’ 분야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4명(57%)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7〉 응답자의 영농단계 위치, 정책이 집중해야 할 영농단계 및 영농영역

(단위 : 명, %)

구분	본인의 영농 단계		정책이 집중해야 할 영농 단계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	응답률(%)
① 관심 및 결심 단계	5	2.5%	14	7.0%
② 준비단계	19	9.5%	51	25.5%
③ 유입 및 성장 단계	115	57.5%	83	41.5%
④ 정착단계	50	25.0%	34	17.0%
⑤ 자립단계	11	5.5%	18	9.0%
합계	200	100.0%	200	100.0%



주 : 저자 작성함.

일곱째, 응답자가 영농정착에 있어서 영농정착금 도움여부, 지원기간, 영농준비~영농정착 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소요 기간에 대한 결과이다(〈표 3-18〉 참고).

응답자들의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은 기간은 1년 차가 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2년차 53명(26.5%) 순이었다. 그리고 영농준비부터 영농정착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3년이 59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2년 47명(23.5%), 5년 이상(21.5%) 순이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년이 116명(58%)으로 가장 많았고, 2년이 56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정착에 있어 영농정착금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64명(82%)으로 가장 많았다. 영농정착금이 청년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농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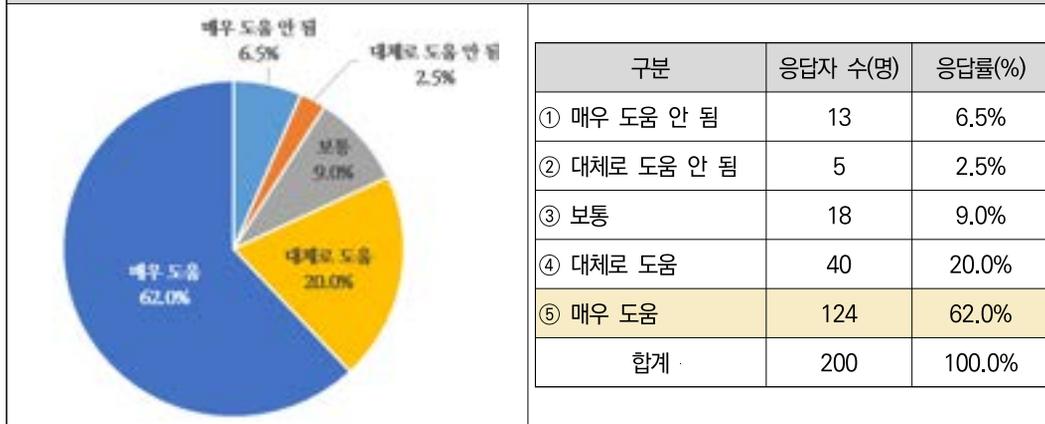
〈표 3-18〉 응답자의 영농정착금 지원받은 기간·영농준비~정착 기간·농업경영체 등록 소요 기간

(단위 : 명, %)

구분	영농정착금 지원받은 기간		영농준비~정착 기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기간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1년	65	32.5%	29	14.5%	116	58.0%
② 2년	53	26.5%	47	23.5%	56	28.0%
③ 3년	31	15.5%	59	29.5%	15	7.5%
④ 4년			22	11.0%	2	1.0%

구분	영농정착금 지원받은 기간		영농준비~정착 기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기간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⑤ 5년 이상			43	21.5%	11	5.5%
⑥ 이미 종료	51	25.5%				
합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영농정착에 있어서) 영농정착금 도움 여부



주 : 저자 작성함.

여덟째, 영농정착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 및 도움이 되는 주체·기관에 대한 결과이다(〈표 3-19〉 참고).

응답자들이 생각하기에 변화가 가장 필요한 주체·기관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라고 105명(19.3%)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지역농협’이라고 101명(18.6%),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라고 89명(16.4%)이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주체·기관 역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라고 139명(28.9%)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부모, 친척, 지인’이 70명(14.6%),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라고 61명(12.7%)이 응답하였다.

〈표 3-19〉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 및 도움이 되는 주체·기관(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		도움이 되는 주체·기관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89	16.4%	61	12.7%
②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105	19.3%	139	28.9%
③ 지역농협	101	18.6%	29	6.0%
④ 교육기관(농정원, 농진청 등)	61	11.2%	42	8.7%
⑤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69	12.7%	39	8.1%
⑥ 마을주민 및 마을이장	39	7.2%	30	6.2%
⑦ 지역사회단체 및 지원조직	21	3.9%	39	8.1%
⑧ 본인	44	8.1%	32	6.7%
⑨ 부모, 친척, 지인	15	2.8%	70	14.6%
합계	544	100.0%	481	100.0%

주 : 저자 작성함.

아홉째, 응답자의 과거 영농준비 및 현재 영농과정 상 어려운 점에 대한 결과이다(〈표 3-20〉 참고). 응답자들이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을 ‘영농자금 확보’라고 159명(28.4%)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농지확보’에 137명(24.5%), ‘판매처 확보’에 65명(11.6%), ‘농작업 인력확보’에 60명(10.7%)이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들이 현재 영농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 역시 ‘영농자금 확보’라고 153명(29.4%)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농지확보’에 104명(20%), ‘농작업 인력확보’에 99명(19%)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과거 영농준비 과정이나 현재 영농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영농자금 확보, 농지 확보, 판매처 확보, 농작업 인력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0〉 응답자의 과거 영농준비 및 현재 영농과정 상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		현재 영농과정에서 어려운 점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농사기술 습득 등 교육기회	51	9.1%	40	7.7%
② 영농자금 확보	159	28.4%	153	29.4%
③ 농지 확보	137	24.5%	104	20.0%
④ 농작업 인력확보	60	10.7%	99	19.0%
⑤ 재배품목 선택	25	4.5%	11	2.1%
⑥ 판매처 확보	65	11.6%	81	15.6%
⑦ 영농지역 선택	14	2.5%	6	1.2%
⑧ 가족과의 갈등	23	4.1%	10	1.9%
⑨ 마을주민 등과의 관계	25	4.5%	16	3.1%
합계	559	100.0%	520	100.0%

주 : 저자 작성함.

열째, 응답자의 영농포기 순간, 현재 영농실태에 대한 만족도,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표 3-21〉 참고).

응답자들이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라고 99명(49.5%)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이 안 될 때’라고 57명(28.5%)이 응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영농실태에 대해 ‘보통 만족’한다는 응답이 91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명(30.5%), ‘만족’한다는 응답이 48명(24%)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1명(80.5%)이었다.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것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이 ‘아니오’라는 응답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책관심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표 3-21〉 응답자의 영농포기 순간·현재 영농실태에 대한 만족도·향후 농사 지속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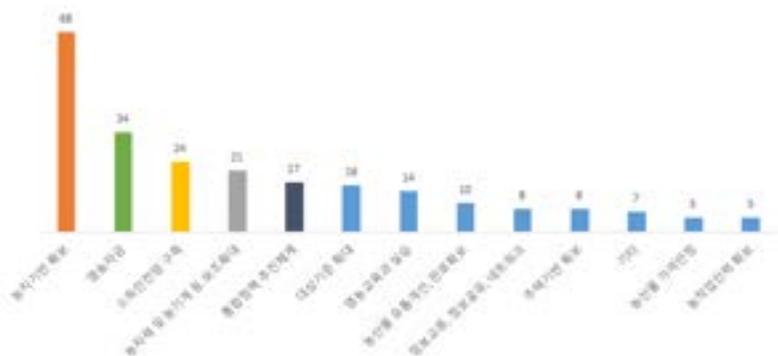
영농포기 생각이 드는 순간			현재 영농실태 만족도			향후 농사 지속 여부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①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	99	49.5%	① 매우 불만족	13	6.5%	① 예	161	80.5%
②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 안 될 때	57	28.5%	② 대체로 불만족	48	24.0%	② 아니오	0	0.0%
③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울 때	15	7.5%	③ 보통	91	45.5%	③ 잘 모르겠음	39	19.5%
④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때	10	5.0%	④ 대체로 만족	43	21.5%			
⑤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 때	19	9.5%	⑤ 매우 만족	5	2.5%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주 : 저자 작성함.

마지막으로,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이다(그림 3-2) 참고). 총 236건 중 농지기반 확보(68건, 28.7%), 영농자금 지원(34건, 14.3%),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정망 구축(24건, 10.1%), 농자재 및 농기계 등 보조사업 확대(21건, 8.9%), 통합정책 추진체계(17건, 7.2%), 연령기준 상향조정 등 대상 기준 확대(16건, 6.8%), 영농교육과 실습개선(14건, 5.9%) 순이었다. 농지, 영농자금 등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앞선 항목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3-2〉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관련 해결해야 할 부문

(단위 : 건)



주 : 저자 작성함.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현황 결과이다.

①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차지),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차지),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차지)으로 집계,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가 전체 농업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② 전국 대비 충남의 연령별 농업인구 구조와 분포 현황은 60세 이상 농업인구가 40.1%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61.9%를 차지하였다. 전국 비중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주목할 지점은 40대 농업인구 비중은 감소하는데 반해 70대 이상 농업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농업인구 구조 분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년의 산업별 취업자 및 구직희망 직종 현황(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의 취업자는 전체의 3.8%, 청년 79,412명 중 농림어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 수준에 불과), ④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연령기준 현황(빈도수가 높은 연령구간은 18세 이상 ~ 39세 이하), ⑤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연령기준 외 현황(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업종 경영(경력기간 포함), 해당지역 생활 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순), ⑥ 연령대별 농지소유 비중의 차이, ⑦ 청년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이 좀 더 여유로운 편, ⑧ 주거와 직접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충남형 리브투게더, 충남 꿈비채, 충남 빈집정비 시범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 대상의 주관식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① 행정의 추진체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정책공급과 정책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등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은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③ 청년세대의 특징으로서 개인

주의 성향의 강화로 긴밀한 공동체 의식 부족, 1차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2차, 3차로의 농업활동 확장을 시도, 농사와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④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으로서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기존 농업정책에서 제기했던 내용(구조개선, 농업기반 분위기 조성, “돈”, 지역 거버넌스, 청년 네트워킹 등)과 매우 유사하였다. 요즘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셋째, 충남 청년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영농준비부터 영농정착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으로는 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 여부에서는 37.5%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연간 투자 금액은 14,772만 원, 연간 평균소득은 4,556만 원으로서 연간 소득과 투자 차액은 (-)10,334만 원에 달했다.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로는 ‘유입 및 성장단계’,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로는 ‘영농자금’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판매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로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49.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영농실태에 대해 보통 수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다.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80.5%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하였다.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다.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아이디어)에 가장 많은 주관식 의견을 도출한 부분은 농지기반 확보, 영농자금 지원,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농업인 실태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역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수요 분야는 소득안전망 구축, 기존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농업정책을 현재 청년 세대의 수요와 특징에 맞도록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정책 추진 체계와 집행방식에서 유연성 발휘, 유형별단계별 정책대상자 기준 확장,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청년 수요(놀거리, 즐길거리 등)를 파악하여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농자주거기반 수요와 관련한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1. 접근관점과 방향

청년농업인을 유입, 육성, 정착 추진전략 도출에 앞서서 몇 가지 정책 접근관점과 방향을 짚어본다.

“현재 청년들은 농업과 농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것을 모든 청년관련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이민주, 2022; 임채섭, 2022)”

“산업육성 정책만 있고 ‘진짜로 살기 위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강보배, 2022).“

자료 : 1. 충남연구원(2022), 충남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테이블) : 충남 청년들 모여라, 농촌에 살래?, CNI세미나 2022-091(2022.11.25.), 충남연구원.

2. 충남연구원(2022), 제주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2022.11.02.).

첫째,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들 삶의 선택지에 귀촌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청년은 왜 지역에서 살기 어려울까?,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청년은 정작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있을까? 등의 원시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



자료 : 청춘작당 누리집(<https://springground.com/Prologue1>, 검색일자 : 2022.11.17.).

둘째,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농정목표를 경쟁력 강화로 앞세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조사업에 맞춘 농사활동, 보조금 수혜혜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개별지원으로 인한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파편화된 공동체 등 농정 보조사업 폐해는 많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각종 농업지원사업명, 농업보조사업명에 ‘청년’이란 글자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실패를 답습해서도 안 된다. 다만, 청년농업인은 기성세대 농업인과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 성향과 특징을 감안한다.

셋째,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도 설계한다.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 육성 접근전략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들, 기존 청년농업인도 유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생활 정착으로 이어지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사업, 정책, 제도 한계는 ‘농업’이라는 산업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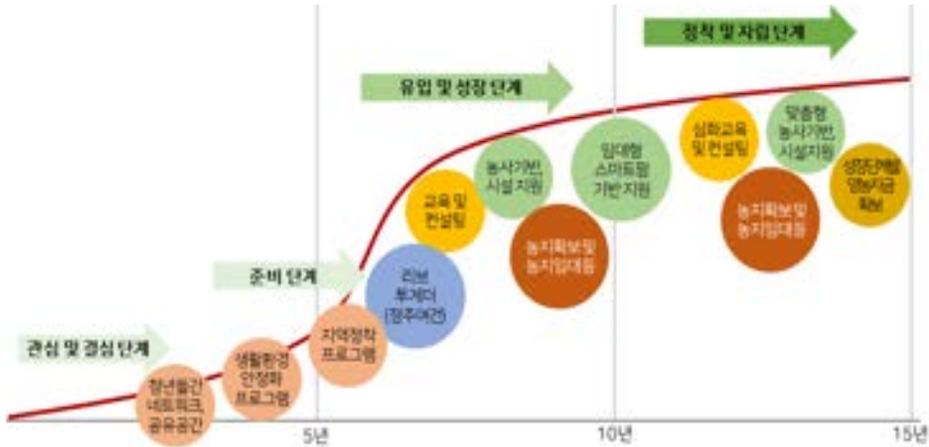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마을 선배 농민, 마을 이웃, 공동체 등 먼저 농사를 습득한 사람들로부터 들으며 익혀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실패 후에도 비빌언덕이 되어 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농업인이 농사일꾼으로서만이 아닌 마을주민으로서, 마을사람으로서 정착하도록 접근한다.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년이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 관점으로 접근한다(우성희, 2017).

넷째,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유형과 최종 목표에 맞는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이라는 사람을 놓고 개인의 전 생애주기(life-cycle) 중심으로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접근한다. 한명의 농부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그림 4-2> 참고).

청년농업인을 후계농업인 혹은 전업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인 육성, 정착 전략만을 펼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농업과 농촌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신규로 유입하고자 하는 이들, 농촌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들, 농촌지역을 한번쯤 기웃거리는 이들, 농촌지역을 일부러 사전에 탐색해 보는 이들, 대안적 삶을 꿈꾸고 생태적인 삶을 찾아 일부러 내려온 이들, 기존 농사에 희망을 품고 내려왔던 이들 모두를 농업과 농촌으로 이끌어야 한다. 즉, 전업 청년농업인만이 아닌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1종 겸업 청년농업인도

동시에 키워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이 지역에 내려와서 농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농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영역인 주거·복지·교육 부문 등도 동시에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2〉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단계별 추진전략 로드맵



주 : 충청남도(2023)의 '2023년 충청남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함.

다섯째,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충남 농업정책은 탐색단계의 사업이 없다. 농업·농촌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바로 ‘유입과 성장’ 단계로 진입하면 ‘정착과 자립’ 단계에서 실패사례 가능성이 높고 가용가능한 인력자원도 협소해질 것이다. ‘관심, 결심, 준비’ 단계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더 많아질 수 있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창업,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사회적경제 단체 실무자, 농촌 사업 실무자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초기 관심, 결심, 준비 단계에서는 농업 관점의 영역이 아닌 청년들의 생활 관점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정책대상 유형별 정책영역 예산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충청남도 사업들은 대부분 승계농(후계농) 대상으로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영농기반이 없는 비승계농, 지역연고가 없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촌에 기웃거릴 수 있는 예비 농부를 위한 사업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래야만 청년과 청년 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 시각에 입각한 수요 대응형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통합조직체계 내에서 정책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지원 매칭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단일팀(농업정책과 내 농촌복지여성팀), 분산된 기관(충남도청과 농업기술원) 조직 구조만으로 이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통합적인 조직관점으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민선 8기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은 유입 및 성장 단계, 정착 및 자립 단계에 초점에 맞춘 반면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관심 및 결심 단계에 대응하는 유입 전략, 준비 단계에 대응하는 정착 전략,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① 충남 (겸업, 전업) 청년농업인 모두를 위한 공통 전략, ② 충남 (겸업)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 ③ 충남 (전업)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그림 4-3> 참고).

<그림 4-3>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농지기반 확보
튼튼한 소득안전망 구축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영농자금 확보
정책 추진체계		주거기반 확보
정책홍보		

주 : 저자 작성함.

2.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 모두를 위한 공통 전략으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제안한다. 공통 전략의 주요 대상은 겸업 청년농업인, 전업 청년농업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해당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1〉 참고).

〈표 4-1〉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요약

전략	주요 내용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적용을 위한 과제 : 농촌 현실에 맞춰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청년농업인 관련 법률과 조례에 맞춰서 정책과 사업 집행, 홍보, 기존 청년후계농업인 지원사업에 40세 이상인 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 청년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이후 종료된 이들에게 연결가능한 사업 연계 · 농업인의 개념과 범위 확장을 위한 과제 : “농사를 짓는 자만이 아닌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마을일도 하는 이, 마을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모해가는 이” 등으로 설정, 정책과 사업 대상자 기준에도 확장된 개념 적용 · 정책 특성별단계별 대상자 기준 유연하게 적용하는 과제 : 자립정착단계를 거친 청년에 한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 준비유입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지역거주, 공동체 기여활동 등 다양한 기준 적용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소득 : 충남형 청년공익직불금(신설 도입), 충남 농어민수당, 국가 공익직불금(소농), 국가 공익직불금(면적),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 농업소득 : 연간 시설재배 작목을 통한 소득, 기초 자본시설 투자(무이자 융자) · 농외소득 : 마을 청년활동가 일자리로부터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모두의 공동 과제 : 기성세대나 마을주민과 함께 어울려야 지원 가능한 사업 발굴, 마을주민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함께 하는 지역에 지원 가능한 사업 발굴,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융합할 수 있는 사업, 청년들과 기존 마을주민에게 여러 가지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활동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 기존 마을주민, 중노년층에게도 사생활 존중, 기본 인권, 교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농촌지역 문화적 소외현상·성불평등·인종차별·치안개념이 없는 무법지대라는 이미지 타파 인식개선 캠페인,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청년멘토단 구성, 유대관계 형성 활동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선별 및 교육과정에 ‘마을주민과 관계맺기’ 커리큘럼, 청년농업인 단체 내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및 청소년 간 서로 돌봄문화 정착 지원, 조직 및 단체 활동 참여, 마을주민과의 협치구조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의 통합부서 설치 혹은 컨트롤타워 구축 : 청년농업인 정책의 전담 부서, 조직, 인력 배치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통합부서(팀) 설치 혹은 컨트롤타워 구축, 통합시범사업 실행 ·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애로사항 상담, 청취하는 소통 창구 마련 →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창농 상담 → 교육 → 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되도록 지역단위 맞춤형 지원 · 민간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체계 :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 각종 협업체, 농민 그룹과 비농민 그룹 간 연대, 선배농민과 멘토-멘티 그룹 형성, 연결고리를 제도권으로 진입하도록 정례화, 민관협치 체계 구축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홍보방안 예시 :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농부 양성과정 운영 · 간접적인 홍보방안 예시 : 성공과 실패 사례 소개 등 ·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통한 홍보방안 : 청년과 관련 모든 정보 모아놓은 통합플랫폼 구축과 운영 · 그 외 근본적인 홍보방안 : 지역자체의 명물화, 농업교육 확대 의무실시 등

주 : 1. 저자 작성함.

2. * 정책홍보를 포함한 이유는 충청남도의 정책수요에 의거하여 제시한 것임.

1)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OO농사를 지어야겠다.’, 내지 ‘나는 OO창업을 해야겠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귀농이나, 귀촌이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청년의 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움이라 할 것이다.(이연진, 2018)”

“지자체가 정한 선도농가가 일정면적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턴 시기가 끝난 뒤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농업으로 자립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적은 자금력으로 자립하고 있는 소농들이 청년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소농은 지자체에서 정한 선도농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젊은 귀농자들이 지역에서 다른 세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단순히 청년만이 아닌 귀농자 전체를 포함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는 농업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 청년후계농업인, 2022)”

“현재 고령화로 농촌 인재가 부족한 시점에서 만39세로 청년을 못박고 39세가 넘어가는 순간 각종 정책에서 소외시키는 현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후계농이되 청년이 아닌 그냥 나이 한살 더 먹었다고 배재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B 청년후계농업인, 2022)”

자료 : 1. 이연진(2018),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구축 사업’을 말하기, 2018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제4차 세미나 발표자료(2018.12.15.), 충남연구원.

2. 녹색사회연구소(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실태조사(2022.11.)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대상자로서 청년농업인 범위, 개념, 기준을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청년이, 청년농업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농민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청년이란 특정대상을 설정할 때 연령기준 외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라 무엇인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농업계에서도 합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화두가 지자체를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했고 바로 실행해버린 것이 근본 문제이다.

다음에서는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실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 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과제를 제안한다.¹³⁾

①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에 대한 접근방향

-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도 중요하지만 청년농업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농사짓는다고 바로 농업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경영주로서의 자격기준이 오히려 중요
- 정책지원 대상자가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의 경험이나 공동체 합의를 토대로 단계별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일괄적인 연령기준(만 39세)만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정책 문제점(소외감, 상대적 차별, 역차별)에 대해서 개선, 정책집행 시 유연성 발휘 필요
- 전업 청년농업인 외에도 겸업의 청년농업인 개념을 고려한 범위 확대 고민 필요
-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향조정 결과를 실제 사업에 적용, 실행
-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의 특성화, 범주 구체화, 유형화, 겸업·전업 등에 대한 정의와 충남만의 다양한 청년농업인 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

② 대상자 선정 시 연령기준 적용에 대한 정책현장 사례(〈표 4-2〉 참고)

-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 : 청년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 지원이 있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끼인 층은 사업지원 부재
-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 청년농업인의 A사업을 받으면 B사업은 받지 못하는 행정 구조 (현실적으로 사업 간 미연계)

〈표 4-2〉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 설정에 대한 정책현장 사례

구분	법률 및 조례 근거	실제 적용기준
국무조정실	·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	19세 이상 ~ 34세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후계농어업인은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법률 상 만 50세 미만 적용 가능 ↓ 사업집행 시 만 40세 미만 적용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년농수산인 등이란 충청남도 내에서 농수산업 등을 경영하거나 농수산인 등이 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도민으로서 18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	조례 상 만 50세 미만 적용 가능 ↓ 사업집행 시 만 40세 미만 적용

13)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요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사업집행 정책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상 정의와 달리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 40세 미만으로 설정, 집행 · 따라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국비 사업들이 40세 미만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구조 · 국비 사업 비중이 높고 지방비 사업 비중이 낮은, 국비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현실에서는 만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혜택 있는 정책과 사업은 부족, 인지도·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음 · 실제 연령 기준이 없는 사업도 많고 청년농업인 정책 영역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라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현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49세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50세 미만이기에 청년들도 신청, 50세 기준으로 설계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연령 기준만 있는 사업으로 인식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나 만 40세 이상의 후계농업인이나 기존 농업인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차별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비판 	<p>사업집행 시 만 40세 미만 적용 (연령설정에 따른 정책과 사업 차별성 부족, '연령 기준'만 있는 정책과 사업이라는 비판) * 대표적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은 '시행연도기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p>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주 : 1.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개수는 전체 사업 중 청년 타이틀에 넣어 청년만을 위한 사업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분야유망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등 몇 가지에 그침.
2. 저자 작성함.

③ 대상자 선정 시 연령기준 적용에 대한 현실 사례

- 단순히 20세~40세라는 나이로 설정을 했을 때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됨. 마치 나이로 제한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업을 만들다보니 행정에서 나는 청년과 비청년 간 차별로 지역사회에서는 차별과 소외가 빈번하게 발생
- 차별화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 기준으로만 사업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느끼고 상대적 차별감 유발한다는 우려
- 농업 육성 대상자가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르고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도 모두 다른데 연령기준으로 인하여 정책에 혼선 초래
- 마을별 상황은 다르지만 농촌사회에서는 사실 60대도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고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왕성한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40-60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 지자체별 연령기준 상이한데 상향조정으로 인한 지자체 '청년모시기 경쟁' 구도 양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령기준, 특히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 중립 의견이 팽팽함을 보여주고 있음(〈표 4-3〉 참고).

〈표 4-3〉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 설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찬성 의견	중립 의견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분야의 특성(농촌인구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연령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은 다른 직장생활을 경험한 뒤 농촌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0대와 50대 정책수요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지원사업 성격과 범위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 지자체별 연령기준이 상이한데 연령 기준을 전체 시군 공통으로 상향조정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예. 만 50세 미만으로 변경 통일). · 청년회 가입기준을 처음에는 40세에서 45세로, 현재는 50세로 상향조정한 만큼 고령화된 농촌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 청년농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준비단계를 제대로 평가하고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에 맞춰진 청년농업인에게 집중하다 보니 청년과 농업이라는 직업적 측면으로만 축약되어 버리는 느낌이 있다. · 연령기준이 오히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어울리게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농업과 농촌이 소멸되는 마당에 연령기준을 불문하고 농업을 해보겠다고,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상자 1순위가 40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농업에 스스로를 좁게 만들어놓는다. · 얼마나 농업을 준비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인지 여부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 귀농인 VS 귀촌인, 전업농 VS 겸업농 등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청년을 농사꾼으로서만 보는 것은 농업이란 길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볼 여유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개념과 의미를 농업이란 영역에 가두게 되면 우리 스스로 농업과 농촌영역을 축소할 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나이로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 일관적 연령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고 필요 영역에 따라서 연차나 경험이 있는 농업인을 우대하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 더 많은 청년농업인 발굴에 노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불필요하다. · 기존 청년농업인에게 다시 유리해져서 신규로 유입되는 연령, 계층에게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 충남 청년대상의 주관식 의견조사(2022.09.)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④ 대상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적용에 대한 현실 사례

- 예비농업인(실제 귀촌인구의 절반은 청년세대)의 경우 농사일은 항상 하지만 농지 300평 이상 소유 혹은 이용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귀촌인으로만 남아있는 청년이 다수
-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현재 농업경영체 제도의 여러 한계점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으므로 과도한 기준
-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조건인데 이를 위해서 농지 확보와 마을이장의 영농사실 확인도장이 필요,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최소 2-3년 소요됨에 따라 무연고, 무자본 청년농업인에게 높은 기준으로 작용
- 그들을 농업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인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⑤ 기타 대상자 선정에 따른 폐해

- 청년농업인 범위, 개념, 기준에 '농업'만을 고려함으로써 청년들의 삶, 생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예. 농사는 다년간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처음부터 어떤 작목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어떤 품목을 재배해야겠다, 어떤 품목의 전문 농업인이 되어야겠다 등의 결정을 내리지 못함. 전업 청년농업인을 제외하고 겸업 청년농업인 대부분은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하지만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견
- 농촌에 다양한 인적구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농업인 내부에서도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또 다른 갈등, 혐오, 배제 문제 존재
 - 예.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우선시 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금보다 제약조건이 더 강해야 하는데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정착 필요한 이들이 받아야 할 지원은) 계속 못 받는 실정, 정착 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토지 및 인력지원사업, 판매지원사업 등) 자체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의견

⑥ 정책과제

• 연령기준 적용을 위한 과제

- 상위법률(청년기본법 VS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지자체 조례(충남 청년 기본 조례 VS 충남 청년농수산인 조례) 등 해당부서의 집행지침 근거별 다른 연령기준을 선택하게 되면서 빚어진 혼선을 극복, 즉, 농촌 현실에 맞춰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한 청년농업인 관련 법률과 조례에 맞춰서 정책과 사업 집행, 홍보
- 기존 청년후계농업인 지원사업에 40세 이상인 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 청년후계 농업인 지원사업 이후 종료된 이들에게 연결가능한 사업 연계
- 예. 중장년 청년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준조건에 가까스로 맞춰 진입한 청년농업인은 선정 시 유예기간 부여 필요(예. 만 39세 청년농업인은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 속하지 않게 되는데 추가 3년 혹은 추가 5년이라는 정착기간 부여 필요)

• 농업인의 개념과 범위 확장을 위한 과제

- 전업하는 사람만을 청년농업인으로 볼 것인가, 겸업하는 사람도 청년농업인으로 볼 것인가 등 전업만이 아닌 겸업을 하는 농업인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기에 이를 포함한 정책 및 사업 범위 확대¹⁴⁾
- “농사를 짓는 자만이 아닌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마을일도 하는 이, 마을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모해가는 이”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 대상자 기준에도 확장된 개념 적용(농촌지역에 기반을 두고 시도되는 다양한 활동 전반을 청년 농업인 영역으로 인정)

- 예. 농사와 농촌지역을 컨텐츠로 하는 다양한 활동의 실례를 보여주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배치

• **정책 특성별·단계별 대상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과제**

- 자립·정착단계를 거친 청년에 한해서만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 준비·유입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지역거주, 공동체 기여 활동 등 다양한 기준 적용
- 예. 초보 청년농업인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농사경험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
- 예. 청년농업인 농촌정착지원사업(자신의 전문역량이나 재능을 농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회복에 기여하는 자에게 월 일정액 지원), 청년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무조건적 지원이라는 지적, 마을주민과의 역차별이라는 지적 등 논란 감소

14) 자료 : 통계청(2022), 2021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22.

주 : 1. 전업농가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함.
2. 겸업농가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함. 여기서 다시 1종 겸업농가와 2종 겸업농가로 나뉨.
· 1종 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2)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한계를 느낍니다.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C 청년후계농업인, 2022)”

“농업소득이 낮아서 계속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D 청년후계농업인, 2022)”

“청년농업인의 농촌으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지자체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E 청년후계농업인, 2022)”

주 :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2022.11.)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다음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조 만들기 방안을 제안한다.¹⁵⁾

소득구조는 ‘이전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년차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을 설계한다. 단, 이전소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은 3년 이후부터 가정하고 현재 제도 단가를 적용한다는 가정이다(〈표 4-4〉 참고).

첫째, 이전소득은 현재 3년 한도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과 별개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계없이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만 50세 미만 까지 지급되는 충남형 청년직불금 신설 도입을 가정한다. 충남형 청년공익직불금(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충남 농어민수당(예. 월 6.6만 원, 연 80만 원),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예. 월 1.7만 원, 연 20만 원), 중앙정부 소농 공익직불금(예.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혹은 면적 공익직불금(경작면적에 따라 추가 a)으로 구성된다.

둘째, 농업소득은 연간 안정적인 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연중 생산가능한 시설채소류 작목 재배를 가정한다. 예를 들면, 쌈채소류, 과채류 등 재배하는 것을 전제로 친환경청년농부 사업과 같이 약 4,000만 원 시설투자 지원(예. 시설하우스 2개동, 동당 200평, 시설채소 이므로 일년 내내 소득창출 구조)하고 부지런함을 가지면 연간 2,500만 원 농업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무이자 대출사업과 같이 빚을 만드는 구조는 가급적 지양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청년창업농을 위하여 도매시장 외에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유통채널 확보, 지역 공공영역(지역농협, 지자체 등)에서 공공먹거리 조달경로 연결, 판로 개척 활성화 등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농외소득은 마을 청년활동가 등 마을일자리(예.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등이

15)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요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시행될 것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활동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마을 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충남이 그리는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은 농가소득의 경우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연간 3,600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기초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4년차 이후 부터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므로 능력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 9급 연봉은 2,000만 원~2,300만 원 이내 수준이다.

〈표 4-4〉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소득안전망 시나리오 구성

구분	주요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전소득	충남형 청년공익직불금(신설 도입)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	●	●	●	●	●
	충남 농어민수당 (월 6.6만 원 / 연 80만 원)				●	●
	국가 공익직불금(소농) (월 10만 원 / 연 120만 원)				●	●
	국가 공익직불금(면적) (추가 α, 경작면적에 따라 상이)				●	●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월 1.7만 원, 연 20만 원)				●	●
	(월 이전소득 합계(만 원)A)	100	100	100	118.3+α	118.3+α
	연 이전소득 합계(만 원)B	1,200	1,200	1,200	1,420+α	1,420+α
농업소득	연간 시설재배 작목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	▲	▲	●	●
	기초 자본시설 투자(무이자 용자)					
	월 이전소득 합계(만 원)A'	50	50	50	100	100
	연 이전소득 합계(만 원)B'	600	600	600	1,200	1,200
농외소득	마을 청년활동가 등 마을일자리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	●	●	▲	▲
	월 이전소득 합계(만 원)A''	150	150	150	100	100
	연 이전소득 합계(만 원)B''	1,800	1,800	1,800	1,200	1,200
소득합계	월간 소득 총합계(만 원)= A+A'+A''	300	300	300	318.3+α	318.3+α
	연간 소득 총합계(만 원)= B+B'+B''	3,600	3,600	3,600	3,820+α	3,820+α
비고사항	2023년 공무원 9급 월급 (1호봉 시작, 매년 1호봉씩 상승)	168.6	170.9	174.8	180.2	187.2
	2023년 공무원 9급 연급(상동)	2,023.2	2,050.8	2,097.6	2,162.4	2,246.4

주 : 저자 작성함.

3)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우리는 일철(농번기)에 바쁘면 안방에서 신발신고 들어간다. 바쁘데 언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느냐, 또 농사꾼이 새까맣게 타는 게 당연한데 아침부터 살타기 싫다고 이것저것 다 바르고 일은 언제 할거냐라고 하셨던 분이 생각납니다.(F 청년농업인, 2022)”

“기존 농업인들로부터 귀농귀촌인 관련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랑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랑 행복하는 것도 틀리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G 청년농업인, 2022)”

“나의 경우 처음 마을에 정착할 때 쓸모가 적은 땅을 임대해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 마을분들에게 나눠 주었다. 마을의 인심을 얻고자 했던 행동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성실함이 보였는지 1년 뒤에는 마을 내 평판이 좋아지고 내가 필요할 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도 쉬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H 청년농업인, 2022)”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농촌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청년농과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하려며 마을주민들의 의식과 분위기 또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I 청년농업인, 2022)”

“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미지도 있어요. 지역에서는 ‘청년이란 늘 새롭고 신선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 부담을 너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천천히 도와주시면, 저희도 할 일을 적정없이 잘 찾을 수 있을거예요.(A 청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 활동가, 2022)”

자료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fo&wr_id=302, 검색일자 : 2022.09.10.).
주 : 충남 청년대상의 주관식 의견조사(2022.09.)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마상진, 김남훈(2019)에 의하면, 마을주민과의 갈등은 청년농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대와 관심, 멘토의 유무 등과 같은 청년농의 농촌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유동훈(2022a, 2022b)에 의하면, 농업이 청년 유입의 유일한 목적으로 귀결해서는 곤란하다. 마을, 주민,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지혜도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농업인 정착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청년의 삶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실행해온 귀농귀촌정책은 효과도 있었지만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 소지를 낳았고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는 장벽만 높아지게 만들었다는 한계도 있다. 농업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농촌지역 사회 분위기가 청년농업인과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연고없는 귀농귀촌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데 성차별적인 농업농촌지역 문화풍토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세부적으로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간 각자 입장, 시선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표 4-5〉 참고). 문제의 원인은 청년 관련한 정책에서 놓치는 부분은 이들에게 지원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청년들에게 ‘돈’을 주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원해주면 알아서 정착할 것이라는 착각이 지역사회 헌터(사업비만 쫓아다니는 이들)를 만들었고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표 4-5〉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간 각자의 시선에 대한 현실 사례

마을주민이 청년농업인을 바라보는 시선	신규 청년들이 마을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의 폐쇄성, 배타성, 보수성향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해 약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농촌마을 특성 상 마을주체들의 인식변화는 더디게 갈 수 밖에 없다. 이해해야 한다. · 유교적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성차별, 연령별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농어촌 지역의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시 감수성과 생활패턴만을 고집하는 청년에 대한 거부감, 낯설음이 있다. · 낯선 사람이 자기들의 동네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이슈를 만들고 민원을 넣게 되면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기존 농촌문화에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을 공동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심부름도 열심히 해야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아직 청년들은 젊어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폐쇄적 문화는 새로 유입된 청년들로 하여금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기존 농업인들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낯선이에게 먼저 다가와서 멘토 역할을 해주지 않고, 뒷짐 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 청년이 마을주민 협의체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기성세대 분들과 화합하기가 어렵고 의견 개진하기 어렵다. · 마을 내 조직 임원진 선출과정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 물리적인 체력으로 힘쓰는 일에만 동원되는 느낌이고 중요한 업무의 의사결정이나 관리업무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 기존 농촌문화에 청년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충돌만 발생하여 용화되기는 커녕 충돌만 생기고 이런 것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된다. · 마을주민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에 아직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청년회, 부녀회, 기타 노동을 하는 활동조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마을주민이 청년농업인을 바라보는 시선	신규 청년들이 마을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신경써 주는 것은 좋은 문화이다. · 기존 농업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을 말하기 쉽지 않다. · 기존 농업인들은 이미 농업농촌에 자리를 잡으셨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동네 어디에 누가 살며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 어느 논은 장마철엔 항상 침수가 된다든지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사생활을 서스럼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문화에 동조하지 못해 마을 내 심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해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 청년귀농인이 언어가 통하는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다(언어는 통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만 벗어나도 문의할 곳 모름). · 성차별, 텃세, 마을기금 요구, 노동력 요구, 농산물값 후려치기 등 차별요소와 부조리 만연하다. · 청년들의 커뮤니티는 기존 농업인들의 커뮤니티 성격과 유형에서 약간 다르다. · 커뮤니티가 없어서 농지문제, 장비문제 등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한다.

주 : 충남 청년대상의 주관식 의견조사(2022.09.)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다음에서는 청년세대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주체들의 인식 변화를 이를 유도하는 협치 제도화 방안, 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다.¹⁶⁾

① 청년 세대의 특징

- 청년이라고 불리지만 각 개인들이 너무도 다른 그 지점이 기성세대와 가장 다름. 공통 분모로 묶여지는 부분이 거의 없기에 청년 특징을 하나로 규정짓기에 위험
- 청년들은 어딘가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경험을 중시하며 스스로 만들어가며 자존감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
- 긴밀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편,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으면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편
- 하나의 공동체 조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면 잡음과 분쟁이 쉽게 일어나고 앞으로의 공동체 모습은 단일목적으로 움직이는 소규모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마을주민과의 청년농업인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아니라서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은 청년들에게 늘 숙제이고 가장 머리 아픈 일로 여겨지는 편
- 개인 공간, 사생활 침해 등 생활 측면 문제로 귀농귀촌 포기하는 경우 발생(예. 게임 등 이유로 늦은 취침, 늦은 기상 시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잔소리 등)
- 지역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적고 보호는 받고 싶지만 간섭은 받기 싫어하는 경향

16) 주 : 1.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2. '청년세대 특징'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사된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정량화되어 있지 않기에 청년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 내용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한계임(저자 주).

존재, 개인화된 청년들에게 마을주민들의 관심은 간섭처럼 느껴지는 편

- 기성세대들은 관계가 형성되면 선 없이 가족처럼 챙기고 가족같이 잔소리를 하는 순간 청년들은 회피하게 되는 경향
- 기성세대와 일정선을 유지하고 싶지만 사적인 부분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편
-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청년 개개인마다 편차가 큰 부분이지만 긴밀한 관계보다는 느슨하고 사생활이 존중되는 관계를 선호하는 편
-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권위에 대한 조심성이 적은 편
- 비혼인 상태의 청년농업인은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불필요한 감정 스트레스에 시달림
- 청년은 항상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과 시선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 있는 편
- 청년이 지역소멸 대안, 인구유입 수단, 고령화 해결 주체로서 언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②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모두의 공동 과제

- 강제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마을주민과 신규 청년농업인이 서로 마음을 트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수준의 인위적 노력 필요, 지역에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한 주변의 도움 필요
- 청년들 입맛에 맞게 지역사회가 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청년이 만들어져야 함. 농촌이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까 질문으로 접근
- 청년농업인도, 귀농인도, 기존 농업인도 틀린 게 아니라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문화정착, 지역 내 공동체 문화에 “#어울림”이라는 키워드 추가
- 마을주민과 청년농업인 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으로서 단기간 시행하지 않고 각종 마을 내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대끼는 과정부터 시작,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경청하는 것부터 협치의 시작
-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인이기 전에 지역주민이므로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농업인을 마을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함
- 마을, 주민,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지혜도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마을주민도 새로운 인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 새롭고 각기 다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청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나 마을주민과 함께 어울려야 지원 가능한 사업 발굴, 마을주민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함께 하는 지역에 지원 가능한 사업 발굴(예. 마을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조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계 가능)

-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융합할 수 있는 사업 만들기(예. 마을에 청년이 흥반장같은 역할을 한다면 지원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청년이 참여했을 때 사업 지원 등)
- 각자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을 일을 통한 상호 교류와 공동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마을 내에 새로 유입된 청년들과 기존 마을주민에게 여러 가지 인식전환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③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 마을주민은 청년들에게 농촌정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적응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되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환대 환경 조성,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청년들이 마을주민으로 우뚝 서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고민
- 청년농업인 세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위해서 마을주민들 의식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동시 진행
- 지역을 탐색하고 정착하는 청년들을 배타적인 시선보다는 환대하는 자세, 짧은 시간이라도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을주민 인식 변화를 위한 사업
- 청년농업인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나 캠페인은 많지만 기존 마을 주민, 중노년층에게도 사생활 존중, 기본 인권, 교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 청년여성의 진입 없이는 농촌지역 지속가능성은 희박한데 농촌지역 문화적 소외현상 개선. 성불평등, 인종차별, 치안개념이 없는 무법지대라는 이미지 타파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예. “농촌총각 결혼, 외국인 며느리 수입사업” 같은 악습 없애기)
- 마을에 청년이 정착하고자 할 경우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청년멘토단 구성, 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멘토와 멘티 간 유대관계 형성하는 활동(예. 마을주민은 청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들 지역살이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
- 마을주민과 이주청년들 사이에 중간다리(중간지원조직, 마을주민 멘토) 만들기, 이들은 서로의 다른 언어를 통역해주고 문화를 서로에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역할 수행

④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 청년농업인도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미덕을 보여줘야만 원만한 관계로 발전 가능할 수 있다는 상호 연대의식 필요

-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에 비해 처음 정착하려 하는 청년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자신의 현재 직업을 이어가면서 주말과 같은 시간 정도만 활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운영
- 청년농업인 선발 및 교육과정(귀농인은 필수교육)에 ‘마을주민과 관계맺기’ 커리큘럼 포함
- 청년농업인 단체 내 동아리 활동 지원(스포츠 등 취미생활, 봉사활동, 교육연수 등)
- 청년 및 청소년 간 서로 돌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예. 각종 소모임, 네트워킹 등)
- 청년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은 정착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농업관련 정보를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마을자치조직, 읍면 주민자치회, 농민단체’ 등의 활동에 참여(예. 청년농업인 단체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정착 및 교육 사업 등)
- 마을주체별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마을주민과의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 지속성 있게 가야하므로 마을주민과의 상호 교류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마을주민으로 인정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치구조를 제도화, 지역개발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연계를 제도화하면 일석이조 효과(정민철, 2022)¹⁷⁾
- 예. 기존 면 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을 통해 청년 유입 시 마을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서 마을에 청년인구가 얼마나 유입되었는지(청년유입 인구수),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청년정착 인구수), 얼마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지(청년농업인 인구수), 함께 협치 구조를 만들었을 때 가점 부여 등
- 정부나 기관 주도가 아닌 자발적인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에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받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등 청년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연계해주기(예. 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각각 주는 것보다 청년과 마을주민들 몇 명이 모였을 때 지원하는 방식, 청년 스스로 모여서 만든 자발적 사업 지원하기 등)
-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이들이 주체성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화
- 예. 지역농협의 대의원, 이사 등 임원진 구성 시 청년농업인에게 임원 기회 의무적으로 부여, 할당하는 제도 도입 등

17) 주 : 정민철(외부 전문가, 2022.10.~12.)의 서면자문의견서, 위탁원고, 심의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함.

4) 정책 추진체계

“부서별로 청년정책이 분산되어 실제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키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상호연계사업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관리하려고 합니다(곡성군청 미래혁신과장 이기문, 2019)”

자료 : 농담 누리집(https://nongdam.kr/issue01_policy, 검색일자 : 2022.11.01.).

정책 추진체계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 마을이장 권한으로 실행되는 현실, 이장의 주관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한 업무처리
- 정부, 지자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정원, 진흥청 등 주관기관들의 업무체계와 협조 정도가 지역마다 천차만별
-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책임소재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집행에 혼선이 빚어짐
-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니 사업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당초 사업목적이나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그냥 ‘눈먼 보조사업’으로 전락, 변질되는 경우 발생
- 청년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서로 쪼개서 진행되는데 내용이 비슷하고 특히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진행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 및 혜택 차이 발생
- 좋은 사업도 어떤 부서와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재적소의 행정부서, 인력 배치 시급
-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담하는 기구 부재한 경우 존재
- 인구의 양적 측면보다 인구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당장 청년사업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종합적인 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민하고 풀어가야 함
-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 정책실행과 집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정책실행력 높이는 역할
- 시군별 청년농업인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팀 부재한 경우가 다수, 부서별 중구난방으로 쪼개져서 사업 분산 실행, 중복사업 실행 등 행정내부의 조직을 책임지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기관, 부서)으로 재구축 필요
- ‘농지+소득+주거+문화+복지+경제+일자리+네트워크’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통합적 전략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필요

- 통합적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마을주민과 새로 진입한 청년과는 불가피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 역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부서와의 연계 필수
- 단편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하고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전의 행정보조사업의 틀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환 필요

이와 같이 청년농업인의 정책 추진체계가 기존 농정체계와 달라야 하는 이유는 결국 농촌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활동만으로는 소득창출이 어렵고 생활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 니즈는 농사 하나에만 만족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농업 외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모으는 구상이 필요한데 다양한 창직이 가능하도록 돕는 큰 그림의 접근을 말한다. 예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혁신기(로컬 크리에이티브) 사업,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농림축산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아우르는 접근이다. 농림축산국 사업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므로 충청남도 내 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유동훈, 2022a; 유동훈, 2022b).¹⁸⁾

다음에서는 통합적인 청년농업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체 추진체계를 제안한다.¹⁹⁾

①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방향

- 정책방향, 정책수요와 예산, 사업주체, 사업대상, 집행방식, 사업시기, 사업영역, 사업 이후 관리, 추진체계, 단계별 접근 프로세스, 대상별 접근 프로세스 등에 따른 현재의 상태, 미래의 계획을 토대로 최종목적을 구상
- 요약하면, 청년농업인을 ‘농업’이라는 직업 틀로만 고려하지 않고 농촌에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사람, 주체성·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정책, 개별적·단편적·분산적 정책이 아닌 통합적 추진체계,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 정책관리 시스템(〈표 4-6〉 참고)

〈표 4-6〉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재와 미래

구분	As Is(현재의 상태)	To Be(미래의 계획)	최종목적
정책방향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하니 경제적인 분야의 지원,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에만 초점	청년들이 농촌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고 살아가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농사, 지역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한다.

18) 자료 : 1.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2.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19)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구분	As Is(현재의 상태)	To Be(미래의 계획)	최종목적
정책수요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 실태파악 부족하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 예산의 테두리와 영역의 구분, 부서의 한계로 경계를 넘나들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수요 조사와 데이터 마련 청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만든 사업에 예산 반영 다양한 유형과 부류의 청년들을 고려한 사업 발굴, 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역, 정책수요에 맞는 영역에 예산을 배분한다.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특정조직과 특정단체에게 청년관련 사업과 정책을 맡기면 같은 실수 반복, 마을 내 갈등 반복 가능성 생산성 중심, 소득 중심,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다른 조직과 같이 결합, 현장에서 실제 살고 활동하는 조직이 사업주체로 선정 생산 영역 외에 다양한 영역, 지역 등을 고려한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사업, 청년정책은 결국 지역에 사람을, 주체를 남게 해야 한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연령,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자산규모, 농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청년들을 보조사업 헌터로 만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에게 지역살이, 농사경험을 가르쳐주는 선배교육자, 실천농장 발굴, 양성하는데 초점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공동체 단위로 발굴한다.
집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된 예산 범위 내 많은 사업 개수, 사업당 적은 규모 중복지원 불가, 나눠주기 배분 승인에 대한 어려움, 복잡한 서류와 절차, 외부컨설팅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폭적인 예산지원, 가시적 성과 창출 해당사업 성격, 특징에 맞는 대상자 선택과 집중, 맞춤형 집행 폭넓은 분야, 범위로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초기단계에 소규모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정착과 성장단계에 맞는 예산규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집행방식을 차별성으로 내세운다. 다만,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한다.
사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 농한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농번기에 사업추진 호흡이 짧은 단발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주기에 맞춘 사업 추진 호흡이 긴, 장기적 안목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년도 회계연도에 맞춘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육성, 식량생산, 생산성 증대 기술, 생산자 등 전업형 농업만 고려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살이, 지역커뮤니티, 지역사회 등 겸업형 농업, 농촌까지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다만, 특특한 생산자 조직기반, 노동투입 감소, 생산성 증대할 수 있는 기술개발 영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가치창출 영역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사업 이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부재 청년이 실제 수혜받고 있는지 여부 감시, 관리감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하는 곳은 계속 추가사업 배정, 인센티브 지원,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격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부서에서 제각기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보한 사업비를 총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조직 내 청년농업인 정책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한다.
단계별 접근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육성 단계에 집중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설 및 농사기반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대상의 교육과 훈련 지원사업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과 바우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입과 정착 단계도 집중 농촌거주 위한 정주여건 조성 농촌 공동체, 마을주민과 어울림 문화조성 현장농장, 실천농장 실습지원 문화, 복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하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이 농촌에 유입해서 온전하게 정착하는, 삶의 전체 단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별 접근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농, 승계농에 집중(경제적 기능 초점) 생산성을 향상하는 보조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 보조사업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청년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업농, 비승계농도 집중(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 초점) 사회적농업 장려 농업이 자신 적성과 맞는지 탐색 해보는 단기 프로그램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중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의 청년 키워드는 다양성과 자율성, 기성세대와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 :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② 청년 정책수요 실태, 정책공급 방향

〈정책수요 실태〉

-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지원사업은 획일적이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역 정착을 하려는 청년 또는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 필요한 청년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정책이 다름에도 하향식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정착 지역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 청년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행정의 수요나 행정의 입장이 아닌 정책 실수요자인 청년,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 그들 입장에서 수렴 필요

〈정책공급 방향〉

- 청년농업인은 MZ세대라는 특징(장점, 단점 등)을 먼저 파악하는 실태조사
- 청년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고 역귀농 청년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예. 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청년정책을 만들고 난 뒤 청년을 불러 모아서 의견수렴하는 방식은 지양,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먼저 조사, 공급과 수요 간 거리감 최소화
- 청년을 모집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③ 행정조직의 통합부서 설치 혹은 컨트롤타워 구축

-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한 정량 성과보다 청년들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심도있게 연구, 정책을 세우고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 중요
- 청년 농업인이 유입되어 농업과 농촌이 활성화 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현장에서 만족하는 정책 시행이 가능
- 청년농업인 정책의 전담 부서, 조직, 인력 배치(법 개정을 통한 부처 신설 후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원스탑지원센터, 지자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통합부서(팀) 설치 혹은 컨트롤타워 구축, 통합시범사업 실행
- 통합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으로 행정부서별 개별적·단편적·분산적 사업 지양하고 ‘청년 한 사람 삶의 주기’를 중심에 놓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관리 시스템, 단, 무조건 부서의 통합보다는 시범사업 수준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통합으로 접근
- 청년농업인 정책은 주택 혹은 숙소,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여건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므로 부처별·실과별 흩어져 있는 사업 -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과 더불어 청년공동체지원국(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다음의 대안을 구상하여 제안
- (i) 청년과 관련한 사업을 먼저 통합하여 실행, 공동의 정책 성과지표 적용, 공무원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성과지표와도 연계하여 통합 실행할 때 더 높은 점수 부여하는 방안
 - (ii) 청년과 관련한 부서와 정책은 11개 실국, 80개 사업, 1,120억 원으로서 충청남도 도지사 및 부지사 아래의 별도 조직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설립하는 방안
 - (iii)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정책 포함한 통합 추진 방안
 - (iv) 충청남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팀 단위 개편
 - (v) 충청남도 통합 TF, 시군 통합 TF, 최종적으로 읍면단위 TF(자치조직 활용) 구성
- 농림부, 지자체, 농협 등 각 농업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필요, 행정과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농업공무원과 기관직원들 간 적극적인 조력(기존 중장년 남성 공동체 중심의 조직구성은 청년농업인들의 소외감 유발, 신규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진입에 높은 진입장벽 존재)
 -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지역농협과 같은 주체가 되어야 함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전문화와 다양화, 청년농업인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무형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 확충
 -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와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 정확한 지침에 의거한 사업집행(사람마다 다른 해석 지양)
 - 지역단위 농업인력육성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지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육성 계획(목표와 달성전략)을 구체화하기
 - 마을이장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보다 읍면사무소 등 행정시스템에 의한 공식업무 처리

※ 참고 : 충청남도 추진현황(2023년 1월 기준)

- 충청남도의 사례는 2023년 1월 청년정책관을 신설, 조직 신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집행, 추진체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안) 제안(앞서 ③의 (ii) 항목 수행한 사례)

A. 현재 102개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관 실(부서) 역할은 무엇인가?

- 담당부서에 하는 개별사업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종 문서를 취합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 혹은 사업 진행 중간 과정에서 조율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도모할 것인가

- 청년 한 사람의 생애주기를 놓고서 전반적으로 케어 혹은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청년정책관 실은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인가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행단 사업(101개 사업)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행단 운영본-영국형 사업(구조해)17개 사업, 29개 부서, 861개 사업											
청년정책관	산업정책실	농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청년정책실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실국별 사업현황(2023년 기준) 분야별-실국별 사업 구조화(2023년 기준)

자료 :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B. 청년정책관 신설을 통해서 정책가능이 강화될 것으로 계획하는데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맞는가?

- 컨트롤타워라면,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년정책관 실과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가 혹은 기존 사업추진방식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C. 청년농업인 관련한 사업의 실행조직 이원화 문제 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예를 들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컨트롤타워 부재한데 이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D. 청년정책관과 시군 체계 간 유기적 결합은 되고 있는가?

- 충청남도 내 청년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생긴 만큼 시군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야 조직개편 효과가 있을텐데 현재 15개 시군도 유사한 구조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유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E. 성과관리지표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가?

-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지역에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하여 “마을주민”이 되는 것인데 현재 사업 성과지표는 기존 사업의 성과지표와 유사, 사업수행으로 예상되는 결과물을 지표로 반영해야 하지 않는가

- 예를 들면, 사업참여 인원, 스마트팜 조성 수, 사업만족도 등은 청년이 지역에 유입하고 정착하는 성과와 별개, 즉, 사업수행 결과로서 지역 내 청년농업인 정착율 등으로 교체 필요하지 않는가

F.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곳에 문의하면 종합적으로 설명 듣고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이 농업 부분 외에도 생활, 주거, 문화, 의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할 때 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원스톱으로 답변을 받고 지원안내받을 수 있는가

주 : 저자 작성함.

- 강원도의 영월군 사례는 군청 내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사업단’을 구성하여 ‘청정영월 프로젝트’를 총괄 집행, 초기에는 청년정책TF에서 출발하여 현재 군수와 부군수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되어 있음(앞서 ③의 (ii) 항목 수행한 사례)
- 전라남도의 곡성군 사례는 군청 내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혁신과’를 구성하여 ‘청년키움 추진체계’를 총괄 집행, 현재 인구정책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민선 7기까지 미래혁신과에서 청년정책 모두를 아우름. 추진과정에서 민간 청년조직(팜앤디 협동조합)과 협업한 것도 좋은 사례(앞서 ③의 (ii) 항목 수행한 사례)
- 앞서 ③의 (i) 항목과 (iv) 항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기존 부서들을 모두 통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부서 간 협업하는 사업모델, 부서 간 공동협업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기, 청년정책과와 농업정책과가 청년농업인 대상의 공동협업 프로젝트 구상 필요

④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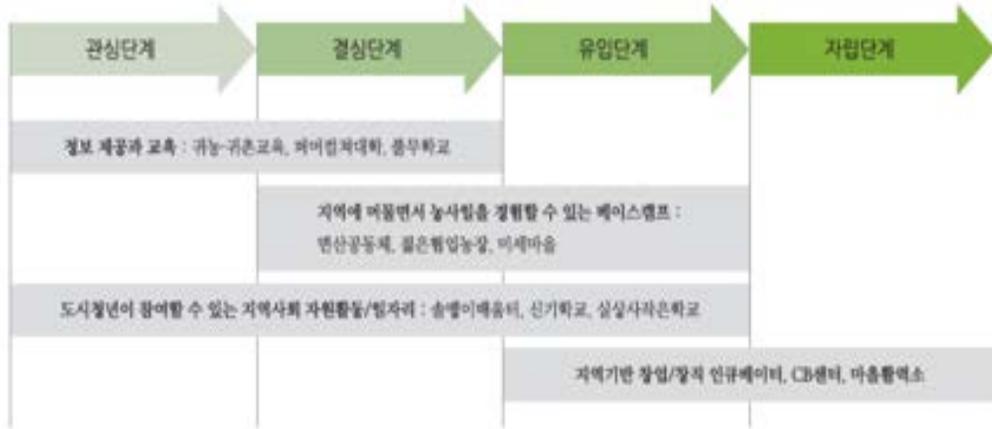
-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지자체별·행정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현실, 이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촘촘하고 통합적인 정보체계로 구축
-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애로사항 상담, 청취하는 소통 창구 마련 →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창농 상담 → 교육 → 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되도록 지역단위 맞춤형 지원

⑤ 행정부서 외 민간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방안

-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에서의 각종 협의체, 농민 그룹과 비농민 그룹 간 연대, 선배 농민과 멘토-멘티 그룹 형성, 이들의 연결고리를 일정부분 제도권으로 진입하도록 하여 정례화, 협업화, 민관협치 체계 구축
- ‘농촌탐색 단계-진로선택 단계-진입단계-정착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촌청년지원조직 필요,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체 사이클을 지원, 실행할 조직 필요(김귀영, 2018)
 - 예.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내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와 같은 민간차원의 조직 구성, 이들은 예산군청 간 민관협치 체계 구축
 - 예. 공주시 청년센터와 같이 시군단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역할 활용, 공주시 관내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학습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서 청년센터를 찾았고 지역 내 사람들을 연결, 동아리 이름은 ‘공주시 청년농업인 동아리 농UP’
- 지역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청년

센터(공주시, 천안시) 등 다양한 중간조직이 있는데 기능과 역할을 추가하는 방식, 청년만을 위한 신규 센터 설립보다 기존 조직 확대, 개편 제안(〈그림 4-4〉 참고)

〈그림 4-4〉 청년들의 농촌진입을 돕는 지원조직과 프로그램 사례



- 자료 : 1. 녹색사회연구소(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2. 우성희(2017), 청년+농촌×정책 :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컨퍼런스 발표자료.

5) 정책홍보

“청년들이 귀농에 관심을 끌도록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J 청년후계농업인, 2022)”

“청년농업인을 지방으로 유인하려는 것보다 청년농업인 성공사례가 많아지도록 지원하는 게 추후 청년들의 귀농정책에도 효과적인것 같습니다.(K 청년후계농업인, 2022)”

“아산제터머기가 지역의 콩을 수매하고, 콩나물도 키워요 지역에서 토종나물 콩을 생산하는 농부님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농사 짓는 곳으로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부는 농사만 열심히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연에 대한 공부, 식물에 대한 공부, 자연과 식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농사법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감명을 받았어요(B 청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 활동가, 2022)”

자료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_story&wr_id=92, 검색일자 : 2022.10.18.).

주 :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2022.11.)결과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함.

다음에서는 청년농업인을 현혹하는 과대 정책홍보는 지양하되 자연스럽게 청년농업인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홍보 방안을 제안한다.²⁰⁾

① 직접적인 홍보방안 예시 :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에서 농업 이외로 할 거리, 즐길 거리 등이 많다는 것을 홍보하기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예. 도시에서 청년들에게 농적 가치를 더 접하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농사일을 경험하는 선행 프로그램(예. 농작업 일손돕기 활동 등)
- 농업-농촌 정책 관련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 대회 개최, 채택
- 먼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나 도농유통 장터들을 방문해 보는 기회 제공
- 도심에서 진행되는 교육, 관련 커뮤니티, 도서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많이 접하게 하는 기회 제공(녹색사회연구소, 2015)²¹⁾
- 지역청년들이 직접 참여, 구상, 운영을 돕는 지역신문 혹은 마을신문 제작 프로그램

20)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21)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 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 마을지역기자단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콘텐츠 농부 양성과정 운영
- 청년정책, 청년이야기 등이 담긴 지역 매거진 발행※ 곡성군의 농담 매거진 제작 및 발행 사례, <그림 4-5> 참고

〈그림 4-5〉 전라남도의 곡성군 ‘농담’ 매거진 누리집 첫화면



자료 : 1. 농담 누리집(<https://nongdam.kr/about>, 검색일자 : 2022.11.01.)

2. 팜앤디 협동조합 누리집(<https://farmnd.co.kr/>, 검색일자 : 2022.11.01.).

주 : 곡성군의 ‘농담’ 매거진 제작 사례로서 농담은 2030을 위한 농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서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팜앤디 협동조합이 제작, 팜앤디 협동조합은 청년 곡성 100일 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청춘작당’), 26명의 지속가능한 곡성살이를 안내하고 지역 매거진 발간(‘농담 매거진’), 기업과 연계한 워케이션 모델 시험, 주거지장벽·경제활동장벽·다양한 관계의 장벽 낮추기 프로그램 운영(‘청춘’ 중에 있는 청년 협동조합 단체(저자 주).

② 간접적인 홍보방안 예시 : 성공과 실패 사례 소개 등

- 정착에 성공한 사례를 최대한 꾸밈없이 홍보하되 실패한 사례도 가감없이 노출시키기
- 타 지역으로부터 청년농업인을 유인하는 것보다 청년농업인이 지역 내 정착에 성공한 사례를 확산, 이를 정착홍보에 활용하기
-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해서 항상 좋은 우수한 사례들만 보여서는 안 됨. 실패까지 예상하고 간다면 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실패한 사례 모음 카테고리 만들기

③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방안

- 현재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지자체별, 행정부서별 산재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을 위해서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필수
- 청년정책, 청년통계, 지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플랫폼 구축과 운영(예. 농자주택문화네트워크 정보 등 업데이트, 플랫폼 구축은 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이 중요

하므로 전담 조직·인력·예산 중요 ※ 영월군의 청년사업단 정보공유 사례 참고)

- 정보를 검색하고 지역 알아보는 탐색기, 영농교육을 받거나 실험적 영농을 해보는 준비기, 다음 창농 결심을 하는 독립기 등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실행
예. 초기 탐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남 15개 시·군 정보를 모아 충남의 비교 우위, 특색과 장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담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미 귀농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선배 영농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유동훈, 2022a; 유동훈, 2022b)²²⁾

④ 그 외 근본적인 홍보방안 : 지역자체의 명물화, 농업교육 확대 의무실시 등

- 지금의 행정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 옛것만을 지역 명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지역 명물은 지역 특산품 또는 자연경관 외에는 없는 실정
-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들 개발 필요
- 새로운 지역 명물을 꾸준히 개발해서 그 매력에 도시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결심을 하도록 동기 부여 필요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농촌 유무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고취,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공교육 과정에 농업교육 확대 의무실시

⑤ 유사 사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가이드북' 발간, 그리고 귀농귀촌 플랫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귀농귀촌 준비 절차,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등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가 담긴 '2023년 귀농귀촌 가이드북' 발간 · 주요 내용 : 귀농귀촌의 이해(준비 절차), 정책 방향,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연락처(유관기관, 지자체), 청년 대상의 정부·지자체 지원정책은 별도 구성으로 소개 · 통합플랫폼 개설 : 2023년 7월 중 새롭게 선보이는 원스톱(One-stop) 귀농귀촌 정보 서비스인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개설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3.06.13.), 귀농귀촌의 길잡이 「2023년 귀농귀촌 가이드북」 발간.

22) 자료 : 1.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2.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3.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유입 전략의 주요 대상은 겸업 청년농업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참고).

<표 4-7>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요약

전략	주요 내용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분야 일과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과 마을주민들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지역에 스며들기 위한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돌봄반장 혹은 진행요원 역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외 집안 간단 수리 해결사, 문해교육, 놀이지원 활동 참여 - 독거노인 공동급식 및 방문배달 활동 참여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이나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는 일,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 - 게스트하우스, 카페, 민박집 운영과 같은 사업 참여 - 마을 경관 및 마을 환경 개선, 마을 내 주택 관리 등과 같은 공공 활동 참여 - 마을 주민, 마을 모습,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사진촬영 활동 참여 · 농업 분야 일과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 연결하는 유통지원 활동가 양성 - 지역 내 특화된 농림산물 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SNS활용 홍보 - 지역 내 농림산물 먹거리를 활용한 요리 식단 개발 - 지역 내 로컬푸드 레스토랑 창업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양성 - 지역산 농산물을 연결해주는 물류와 유통영역, 가공영역 지원하는 활동가 양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홍보 대사 활동 · 국비 유사사업 연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노인돌봄사업, 청년인턴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등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사회적농업과 청년농업인 연결 프로젝트 사례 : 사회적농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회적 실천 농장 발굴 목표, 신규 청년농업인(예비 농업인 포함) 중심으로 사회적농장 훈련과 기술 습득에 따른 지원(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활동비) · 관계인구 맺기 프로젝트 사례 : 농촌 한달살이, 농촌 100일 살이, 전라남도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 농촌탐색 프로그램, 창농취업귀촌 등 유형별 구분에 따른 진로선택 프로그램, 주거농지임대시설마련-협업농장 농사실습-창업연습-농촌사람들과 도농교류 기회 활동(농촌봉사활동, 농작업 일손돕기 활동), 도농상생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민과의 연대활동, 시민사회(활동가그룹)와의 연대 등 진입 프로그램, 초기 생활안정자금-독립경영-자립지원 등 정착 프로그램 · 중앙정부 프로젝트 사례 :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청년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농식품부의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탐색교육 프로그램(시골언니 프로젝트)’ · 지방정부 프로젝트 사례 :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춘작당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 청년허브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OO>’,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보농부 단기과정’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야 할 일들(H/W) : 지역 내 유희공간 실태조사, 유희공간 정보 수집-관리 DB 구축, 공간소유자와 청년농업인 간 매칭, 공동자산화를 통하여 청년농업인 간 협업하고 교류하는 공간 지원 · 해야 할 일들(S/W) : 청년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모임 지원, 플랫폼 역할 강화, 청년창업농 간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마련

주 : 저자 작성함.

1)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금산군) 협동조합인 들락날락*에서 하는 일은 밥벌이가 되지만, 단순히 돈만 받고 일하는 관계는 아니다. 일을 진행할 때,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략) ~ 여러 일을 통과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간다. 들락날락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조혁민, 2022).”

“지방에서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도보여행을 하러 왔다가 카페가 부족한 것을 보면 카페를 창업할 수 있을 테고 마을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각적 각도에서 접근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손대성, 2023).”

“생산공동체 등에서 청년귀농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 보장 등의 방식을 뒷받침해주는 방안, 그리고 청년이 생산한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생협 등을 통해서 유통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돕는 방안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자료 : 1.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2022.11.15.), 충남인스토리, 우리지역을 밝히는 NGO : 원하는 삶을 사는데 대학이 꼭 필요한가요?, 간디학교 출신 비진학 청년활동가 두루미 책방지기 조혁민(금산군 활동가 인터뷰, 출처 : 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_story&wr_id=99, 검색일자 : 2022.12.10.).
2. 연합뉴스(2023.05.22.), 지방소멸에 맞서다 :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기획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30522070245745>, 검색일자 : 2023.05.22.).
3. 녹색사회연구소(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 금산군 들락날락 협동조합은 '청년', '지역', '문화예술'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조직

농촌에서는 대부분 활동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된다. 즉, 사회적경제 영역 내 사회서비스이자 마을일자리로 연계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을 고려한다. 사회서비스와 마을 일자리를 연계, 농촌 주민에게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하고 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반없는 청년들이 서로 협동단체를 구성하여 도와가는 삶의 태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성주인, 2020;김정섭, 2020).²³⁾

23) 자료 : 1. 성주인(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KREI 주관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2020.09.14.).
2. 김정섭(2020), 농촌 사회혁신의 열쇳말 :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 KREI 주관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2020.09.14.).

그동안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이지만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농촌 지역사회의 민간부문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집행체계나 관행 측면에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김정섭 외(2021;2022)²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거리를 일자리로 전환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년이 참여, 청년들이 지닌 재능을 농촌사회의 수요에 접목시키고 일정한 수입을 얻게 하면 농민 아닌 청년이 농촌에서 정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것은 곧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를 연계한 구상이다. 그리고 이것의 실행주체는 청년농업인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촌 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마을 일자리를 연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²⁵⁾

① 일자리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향

- 청년이 모이면 분업, 협업 가능하고 서비스 시설, 편의 시설도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집적의 이익 발생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 직업 훈련을 포함하여 생활 기술 또는 적정 기술 교육 등 장려, 농촌에서도 기술을 통해 일거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들의 자녀세대를 위하여 질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 마을 외부로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지양하고 마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발굴하여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해서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조 만들기
- 농촌에서는 꼭 농업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농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24) 자료 : 1. 김정섭.김미복.김수린.허주녕.권오현.한인혜.남원호.오단이(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R9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정섭.김미복.김수린.김정승(2021),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R 9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자료 : 1. 임주환(2022), 소셜디자이너, 세계를 도발하는 이타적 유전자들, 희망제작소 칼럼(2022.11.30.).

2. 농민신문(2021.09.10.), 농촌에 청년 살게 하려면...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인프라 부족 해결.

3.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4. 우성희(2017), 청년+농촌×정책 :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컨퍼런스 발표자료.

5.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6.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7. 농민신문 누리집(<https://www.nongmin.com/344407>, 검색일자 : 2022.12.10.)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사업들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 영농 외 다른 소득원 창출, 고정 수입원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청년을 모이게 하면 혼자하기에 어려운 다양한 사업 구상 가능

② 일자리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

- 농업과 농촌으로부터 파생되는, 농업과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창의력, 상상력, 실천력으로 연결해주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소셜디자이너, 로컬크리에이터²⁶⁾ 등 활동가 양성(※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례 참고)
- 마을 내 일자리 파악하여 필요한 활동 도출,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서 실행
- 마을 내 일자리와 청년 특기 연결하여 지역 내 일자리 수요 창출, 시범활동 병행(주민자치회와 결합), 마을 내 일자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인건비 지원
- 돌봄과 같은 일은 그들의 자녀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아 수행,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 단순히 돈을 주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공간기회 제공하는 부분을 홍보하여 수요자 접근성 향상, 차량 없는 경우 고려하여 교통문제도 아울러 해결

③ 일자리 및 농외소득 활동 예시 : 농촌 분야 일과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 청년들과 마을주민들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지역에 스며들기 위한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돌봄반장 혹은 진행요원 역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외 집안 간단 수리 해결사, 문해교육, 놀이지원 활동 참여
- 독거노인 공동급식 및 방문배달 활동 참여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이나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는 일, 교통약자 돕는 이동수단 지원
- 게스트하우스, 카페, 민박집 운영과 같은 사업 참여
- 마을 경관 및 마을 환경 개선, 마을 내 주택 관리 등과 같은 공공 활동 참여
- 마을 주민, 마을 모습,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사진촬영 활동 참여

④ 일자리 및 농외소득 활동 예시 : 농업 분야 일과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26) 자료 : 1. 임주환(2022), 소셜디자이너, 세계를 도발하는 이타적 유전자들, 희망제작소 칼럼(2022.11.30.).
2. 정보라(2022), 로컬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정책 : 지역기반 혁신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희망이슈 제66호(2022.04.14.), 희망제작소.
3. 모종린(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기.
주 : 1. 소셜디자이너란, 상상을 무기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임주환, 2022)
2. 로컬크리에이터란, 환경문화역사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을 뜻하는 말, 지역기반 혁신가(정보라, 2022)로서 로컬크리에이터 청년은 귀농 목적으로 지역을 찾던 이전 세대와 달리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역으로 향함(모종린, 2021).

- 지역 내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 연결하는 유통지원 활동가 양성
- 지역 내 특화된 농림산물 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SNS활용 홍보
- 지역 내 농림산물 먹거리를 활용한 요리 식단 개발
- 지역 내 로컬푸드 레스토랑 창업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양성
- 지역산 농산물을 연결해주는 물류와 유통영역, 가공영역 지원하는 활동가 양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홍보 대사 활동

⑤ 유사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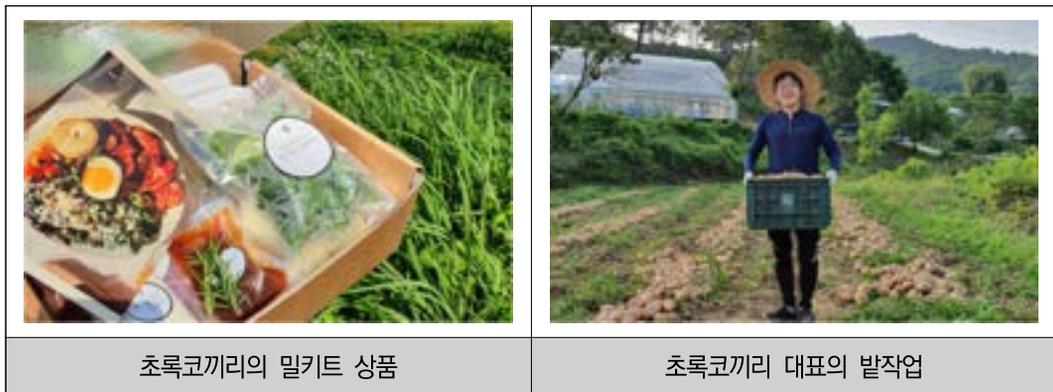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활용하여 마을 관리하는 청년활동가 육성(시군당 3명, 1명당 최소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 노인돌봄사업을 활용하여 마을환경관리단 만들어서 ‘마을 나무, 꽃 식재와 관리+마을 경관가꾸기 + 마을길 풀 깎기 + 예초활동(벌초, 농지 잡초제거 등)’ 활동
-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하기, 특히 인턴 지원사업은 농업법인, 영농조합 인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직장이나 농장, 법인이 원하는 청년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자율성 부여
- 청년일자리 사업은 선택지도 적지만 질도 낮고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보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많다는 비판, 정부인건비 지원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그 외 정부지원 인건비 사업에는 참여 제한을 둔다는 한계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내 관련 조직이나 협동조합을 구성, 청년의 다양한 재능과 활동을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하면 활동가에게 인건비성 채류비와 활동비 지원하기
- 같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라도 기간이나 혜택 차이를 고려할 때 보완 필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8개월,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년 + 자기계발비와 교통비 지원, 시군에서 제공하는 2년 등 지원 차이 발생

⑥ 국내외 현장 및 정책사례

-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초록코끼리(김만이 대표)’ 사례이다(〈그림 4-6〉 참고). 지역 농산물과 유통을 연결하는 청년사업체, 로컬스타트업(농산물 유통)으로 시작해서 홍성군 관내 건강한 원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밀키트 상품으로 제조하여 및 유통하고 있다. 밀키트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시 거래하는 농가는 5곳,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 물량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유

공간인 '잇슈창고'에 입주한 기업 중 와우네(친환경 채소로 만든 샐러드 정기구독)와 협업하여 비수도권 로컬푸드 새벽배송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연령이나 SNS를 통한 판로 등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로컬스타트업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이유는 마을주민 농가의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구매 시 농가에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4-6〉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록코끼리 상품 및 활동



자료 : 경향신문 누리집(<https://v.daum.net/v/20210820181010131>, 검색일자 : 2022.11.10.)

-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사업' 사례이다. 지방정부가 도시 청년을 채용해 지역으로 유입 시키면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최대 3년간 공공 일자리를 얻고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지역에 남으면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아일랜드의 '농촌 사회적 일자리사업(RSS)' 사례이다. 농촌 취약계층에게 환경 관리, 경관 조성, 돌봄 등 농촌 지역사회에 편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좋은 예이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²⁷⁾에서는 농촌에서 수자원·환경 보전, 주민 생활 지원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할 청년을 유치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협력단'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부터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참신한 사업을 적극

27) 자료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0), 제6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 심의안건 : 청년농업인 의제.

활용해보면 좋겠다.

<p>※ 사업명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농식품부, 2023)</p>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지역 밀착·수요맞춤형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혁신성장 기반 마련, 농촌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읍·면 마을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 인적자원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라고 함)의 체류비, 활동비 등 지원 <p>·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를 가진 자- 지원기간 동안 해당 읍·면지역 체류하는 자(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p>· 지원대상 :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운영형 : 지자체에서 활동인력(활동가)을 직접 공모·선정하여 사업 추진- 조직연계형 : 관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p>· 지원규모 : (2023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5~10개 시군 내외(시군당 지원활동가 최소 5명~최대 15명 구성)- 900백만 원(국비 80%, 지방비 20%), 내역 : 62.5명 * 9개월 * 2백만 원*80%=900백만 원* 2022년 1,000백만 원, 활동가능 기간 단축하여 당초 10개월에서 9개월로, 100백만 원 감액 <p>· 자금용도 범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하는 인력(활동가) 1인당 월200만 원 수준 체류비·활동비-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활동비, 재료비, 회의비(다과, 식대, 장소임차료 등 포함), 교통비, 홍보비, 기타비용 등 별도 사용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협업농장의 모델은 좀 더 느슨하게, 혹은 좀 더 실천 지향적으로 확실한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운영방식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중략) 전문성 있는 농사멘토가 좀 더 농장에 참여하여 농사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한다. 기존의 멘토멘티 사업, 농업법인 취업, 농어촌 청년일자리 정책 등과 비교했을 때 청년협업농장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돈을 벌거나 기술을 배운다고 봤을 때 경쟁력이 없다. 자율성, 주체성,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중요하다. 단순 사업 대상으로서가 아닌 농촌을 살아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연대로 봤을 때는 지역에도, 개인에게도 매력적이다(김현희, 2018).”

자료 : 김현희(2018), 순창 청년협업농장, 1년차 농업실천체험기,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제4차 세미나 발표자료.

청년농업인 유치만이 대안이 아니라 농촌에 내려와서 정착 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귀농·귀촌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에 따르면 역귀농률은 8.6%일 정도로²⁸⁾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현재 청년관련 정책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단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필요한데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충남 농업정책은 탐색단계의 사업이 없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하려고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여 도움을 받게 되는 곳은 마을주민, 마을공간, 지역이다. 그래서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현장 농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 ‘이 낫설고 어설프고 서툰 과정’은 불가피하게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것이다. 청년농업인은 ‘즐거움, 재미, 신선함, 다양함’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세대이므로 이에 맞춰서 농촌 문화 및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 협업농장·실천농장과 같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곳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방안을 제안한다.²⁹⁾

28) 자료 : 농업인신문 누리집(<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13>, 검색일자 : 2023.01.06.)

29) 자료 : 1. 충청남도(2022), 충남형 사회적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안).

2. 정민철·신소희·구본경(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00> 확대 및 발전방안,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보고서.

3.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4. 우성희(2017), 청년+농촌×정책 :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컨퍼런스 발표자료.

① 충청남도 사회적농업과 청년농업인 연결 프로젝트 사례

민선 7기 충청남도는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사업, 실천농장(인큐베이팅) 발굴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충청남도(2023)는 사회적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농업이란, 취약계층에 농업을 바탕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농장을 선정, 개소 당 연 6,000만 원을 최대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취약계층의 자활은 물론 고용, 나아가 사회통합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사업이다.

사업 취지는 청년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사회적 농업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 특히 농업과 농촌에 관심결심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농업에 참여시켜서 지역과 농업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2023년은 청년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라기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활동비와 농장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사업명 : 충남형 사회적농업(2022년 구상안)
· 주체별 역할 : - 사회적 농장 : 사회적 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중점 - 마을주민 : 청년농업인 교육 참여 활동으로 사회적농업 사전 체험기회 제공 - 청년 농업인 :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 특징 : 단계별, 시기별 적응 프로그램 개발하여 단기(1달 이내), 중기(3~6개월), 장기(1~2년) 진행 · 대상 : 청년 교육농장(스마트팜), 청년조직(4H, 청년모임), 농업단체, 지역조직(주민자치회 등) · 유형 : 전업형·겸업형 청년농업인(농촌기획가형, 코디네이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반장) · 성과 : 읍·면 협의회를 갖춘 지역사회 신규 농업인으로 지속적 마을에 정착



※ 사업명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농업(2023년 발표안, 2023-2026)
· 목적 : 사회적농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회적 실천 농장 발굴 · 주요 내용 : 사회적농장 청년농업인 훈련, 기술 습득 지원 · 규모 : 6개 농장, 청년농업인 640명(12.8억 원, 청년농업인 월 80만 원, 사회적농장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특징 : 농창업 희망자 영농실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지원 대상으로 확대 - 현행 : 발달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교육대상 한정 - 개선 : 신규 청년농업인(예비 농업인 포함) 중심으로 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활동비 지원

자료 : 1.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농업 지원 지침.
 2.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건의,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② 관계인구 맺기 프로젝트 사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농촌살이를 해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다.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 직접 부딪쳐보며 성장하라는 것은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른 환경에 진입하기 전 일정한 적응기를 두고 지역 내 삶의 방식, 농적 가치, 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통해서 본인과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경직되지 않게, 유연성을 가지고 거주하고 살아보는 기간도 최소 2주부터 시작하여 자율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낫다.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 사는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짧은 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농촌탐색 단계-진로선택 단계-진입단계-정착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심과 결심단계 접근 시 지원을 집중한다. 자연스러운 도농교류의 기회, 관계인구 맺기 기회를 자주 갖는 것부터 시작한다. 농촌에 머무르면서 지역을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경험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이 때 거주공간 및 생계비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유입 촉진하는 요소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 한달살이, 농촌 100일 살이, 전라남도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과 같은 농촌탐색 프로그램, 창농취업·귀촌 등 유형별 구분에 따른 진로선택 프로그램, 주거·농지임대·시설·마련·협업·농장 농사·실습·창업·연습·농촌사람들과 도농교류 기회 활동(농촌 봉사활동, 농작업 일손돕기 활동), 도농상생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민과의 연대활동, 시민 사회(활동가그룹)와의 연대 등과 같은 진입 프로그램, 초기 생활안정자금·독립경영·자립지원 등과 같은 정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다(김귀영, 2018).

③ 중앙정부 프로젝트 사례

-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청년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³⁰⁾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이 더 많은 청년을 지역으로 모으고 있고 사업성과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로컬창업, 귀촌 또는 농촌 정책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경로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충북 괴산의 ‘머하농’의 사례도 등장하고 귀촌이나 로컬창업을 목적으로

30) 자료 : 청년마을 누리집(<https://localro.co.kr>, 검색일자 : 2022.12.30.)

참여하였다가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농식품부의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탐색교육 프로그램(시골언니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청년여성들이 농업농촌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프로그램 · 목적 : 청년여성들이 지역살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여성 당사자들이 상호교류 및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 · 주체 : 지역과 연계하여 청년여성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 관련 시설 구비하고 있는 법인·기업단체 등 현장운영기관 · 내용 : 청년여성이 지역을 탐색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단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1주 과정, 2주 과정)과 지역 정착 청년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네트워크형) · 차별지점 : 농촌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여성의 농촌정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기준 : ① 농업·농촌살이에 관심가진 자, ② 농촌지역의 삶·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자, ③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여성 	 <p>시골언니 프로젝트 지도는 전국 주요 농촌지역을 표시하고, 각 지역에 위치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시골언니 프로젝트' 로고와 '2023년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현장운영기관 모집 계획'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p>
---	---

자료 : 농사펀드(2023), 2023년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현장운영기관 모집 계획.
출처 : 시골언니 프로젝트 누리집(<https://www.sigolunni.co.kr/>), 검색일자 : 2023.04.25.)

④ 지방정부 프로젝트 사례

-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춘작당 프로젝트’³¹⁾

청춘작당 프로젝트는 지역살이를 체험해 볼 사람을 폭넓게 공략한 곡성 100일 살기를 진행하였다. 반면, 청춘 프로젝트는 당장 곡성에 와서 살 사람으로 대상을 좁혀서 참가자들이 지역 내에서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청춘작당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5명씩 한집에 살며 100일 간 지낸다.

첫 20일은 ‘쉽과 만남’의 기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다음 50일은 ‘지역과 일’의 기간으로 지역 현안이나 기업과 농가, 상가 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별로 ‘퀘스트 깨기’를 진행한다. 그렇게 마을주민과 밀착한 활동을 50일간 하면 자신만의 지역 네트워크가 생겨난다. 나머지 30일은 ‘진로와 정주’의 기간으로 그동안 활동을 정리해 마을주민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전시회를 열고 후속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팜앤디 협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고 취향 취미에 따라 다양한 연결점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만들어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31) 자료 : 희망제작소(2022), 곡성군 팜앤디 협동조합 사례 : 마을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공동체.

• 서울특별시의 청년허브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OO>’³²⁾

청년에게 지방에서 자기 삶의 경로 탐색과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이주농부>’에 이어서 2019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OO>’를 진행하였다. ‘별의별 이주OO’은 청년들의 숙식비와 교육비를 서울시가 지원한 것인데 현재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삼선배움과나눔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현장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³³⁾을 포함하여 전국 5개 현장(홍성, 옥천, 영광, 춘천,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청년은 수도권에 있는 단체가 모아서 현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보내주는 구조이다. 2명에서 10명까지 현장의 조건에 맞춰 청년을 받아 농촌의 삶을 경험시킨다. 이 활동 역시 농업을 하는 농장이 참여하는 사례는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이 유일하다. 그만큼 농업을 경험시킬 수 있는 농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충청남도의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지역 네트워크와 활동 내용



자료 : 정민철,신소희,구본경(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OO> 확대 및 발전방안,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보고서, p.50.

32) 자료 : 정민철,신소희,구본경(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OO> 확대 및 발전방안,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보고서.

33) 주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은 2012년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2리 하우스 1동으로 시작한 농장,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환경농업 전공부 졸업생 2명, 교사 1명이 창립 멤버다. 풀무학교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안에서 교육 역할을 하는 농장이나 농업 집단을 만들어보자는 시도였다. 현재 시설하우스 8동에서 쌈채소를 재배, 논 3,000평에서 쌀농사를 짓는다. 2013년 조합원 43명, 배당 없이 일한 사람에게만 수익 나눈다(출처 : 정민철 외(2019)).

•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보농부 단기과정’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2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별의별 이주 OO’ 사업을 경험한 청년을 포함하여 농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청년이 3달 이내로 농촌에서 생활하며 농장에서 일을 경험해 보는 과정이다. 이 경험을 통해 청년농부사관학교나 청년귀농장기교육 사업을 받는 단체에 참여할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공간을 활용한 실천농장(인큐베이팅)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농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곳의 농장과 강의를 위한 공간, 그리고 강사 그룹이 연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전반적인 삶을 경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특징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빅텐트 사업 구조로 진행되었다(〈그림 4-8〉 참고). 5개 농장, 3개 공간, 4개 교육단체가 연계하여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림 4-8〉 충청남도의 홍성군 초보농부 단기과정 사업 구조 : 지역 네트워크 조직



주 : 정민철(외부 전문가)의 위탁원고를 토대로 작성함(2022.12.).

3)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누군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L 청년농업인, 2022).”

“진짜 청년20대 친구들이 즐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업농촌에 청년들이 즐길 거리 놀 거리 양질의 일거리가 많다면 청년들은 스스로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황선덕, 2022)”

“청년들에게 재미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미는 문화를 낳고 문화는 일자리를 낳는다. 함께 있어야만 재미가 생긴다. 서비스 산업도 문화도 모여야 생긴다. 청년농업인 각자가 도생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을 지역별로 한군데 모으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구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유동훈, 2022a; 유동훈, 2022b).”

자료 : 1.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2.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주 :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

네트워크는 차치하더라도 농촌에는 청년농업인들이 모일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공간이 주는 의미는 인적 교류활동을 통해서 여러 유용한 정보가 소통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끈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종종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정책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공간부재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에 있어서 관건은 청년이 모여야 한다는 것, 농촌에서 다양한 놀거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영농 외 소득원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심리적 안전판이 되는 것, 새로운 농촌의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젊은 농촌과 젊은 농부는 함께 아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먼저 귀농한 지인이나 선배 농업인과 같은 ‘비빌 언덕’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물리적 공간일수도 있고 심리적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마을주민과의 소통창구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할 기회를 주는 공간, 초기

심리적 안전판 역할하는 공간, 청년들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표 4-8〉 참고).

〈표 4-8〉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시행주체	주요 내용
농식품부	· 네트워크 : 선후배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구성, 활동 지원, 청년을 농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주체로 육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커뮤니티(동아리)
충청남도	· 도내 농창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2. 충청남도(2023), 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다음에서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공간 조성 사례를 통해서 정리한 청년농업인의 플랫폼 이자 공유공간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³⁴⁾

① 청년농업인에게 공유공간이 주는 위상과 의미

- 공유공간은 보조적 역할로서 기존 농가와 연결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 수단
-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으로서 가교(중간지원조직) 역할, 즉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
- 청년이 유입되었을 때 농업, 서비스업, 가공업, 판매업 등 다양한 경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의 장으로 활용
-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 느낌보다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기에 이러한 유희공간 설립도 의미
-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
- 공유공간이 창업공간이 될 때 창업을 통해 시골마을(농촌)이 성장하는 보람 느낌

34) 자료 : 1. 김기흥(2021),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특성, 농촌사회 31(1), 한국농촌사회학회.
2. 마상진·김남훈(2019),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경제 4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기흥(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한국농촌지도학회.
4. 마상진·김경민(2018), 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6.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농촌에 청년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놀이 문화, 농촌만의 행복한 기억과 추억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공간

② 네트워크 구축 접근방향

- 네트워크는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함.
- 대부분 선 H/W 구축, 후 S/W 구축 순서로 진행하니 예산은 사용되지만 입주할 사람을 못 구하거나 시설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선 S/W 구축(입주업체 선정), 후 H/W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
- 형성된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 기반없는 청년들이 서로 안정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며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조성하여 도와가는 삶 지원

③ 해야 할 일들(H/W)

- 지역 내 유휴공간(농협창고, 농업인회관 등) 실태조사, 유휴공간 정보 수집·관리DB 구축, 공간소유자와 청년농업인 간 매칭
- 유휴시설 및 유휴공간의 공동자산화 통하여 청년농업인 간 협업, 교류, 공유하는 공간 지원

④ 해야 할 일들(S/W)

- 지역 내 청년사업가,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 등 청년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모임 지원, 플랫폼 역할 강화
- 청년창업농 간 커뮤니티 활성화, 작목별 커뮤니티 활성화(정보교류 장), 판매처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 인적 네트워크, 정보교류의 장, 각종 보조사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알림 시스템, 귀농인 간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농업관련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 지역사회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마련
-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강화를 통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정착
- 원거리 농촌의 경우 공유공간에서 정기 모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현실적 지원

⑤ 네트워크와 플랫폼 조성 사례

<p>※ 사례 1 : 전라남도의 곡성군 '청농공채 네트워크'</p> <p>'청농공채(靑農共彩)' 네트워크는 "청년농업인 모두 함께 빛나자(성공하자)"는 의미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함께하는 모임을 말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간담회, 성공사례 발표 워크숍, 선진농가</p>

견학 등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청년공채 네트워크를 통해 곡성군에서는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 수요와 알맞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2020년에는 청년농업인 68명이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였다.

※ 사례 2 : 일본 가미야마정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스’

일본 가미야마정의 경우 지역의 문제였던 빈집을 활용해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위성사무실을 조성했고 관심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실험의 장으로서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스’를 조성하였다. 이 공간은 주로 위성사무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나 아주 이주 전에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의 오래된 봉제공장 건물을 보수하고, 공공(면사무소),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조성했다. 관리는 민간이 맡으며 라우지 겸 사무공간, 분리형 사무공간, 다용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 공동부엌,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 사례 3 : 충청남도의 홍성군 ‘잇슈창고’ 공유공간, 플랫폼

홍성군에 위치한 ‘잇슈창고’는 2022년 5월에 개소하여 6개의 서로 다른 예비창업가 업체가 입주해 있다(잇슈창고는 6개 업체 외 카페 업체명). 입주한 6명 대표들은 ‘잇슈창고를 통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또 다른 청년을 유입하여 지속하자’라는 신념으로 업체를 운영, 잇슈창고를 통해 시골에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H/W가 마련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입주한 업체는 아이템과 성격이 상이한 업체이지만 내부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 ① 와우네: 홍성의 유기농 채로고 마든 샐러드 정기배송 서비스 운영
- ② 채소생활: 농업농촌에 기반한 다양한 생태교구 컨텐츠 생산
- ③ 초록코끼리: 홍성의 건강한 원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밀키트 제조업체, 이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로컬푸드 새벽배송
- ④ 유어리틀포레스트: 아름다운 농촌을 배경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 ⑤ 플로우 온 플로어: 홍성의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지역 고유한 역사공간 전통을 현대생활에 어울리는 제품 제작(ex.산 명칭을 딴, 향이 다른 룸스프레이 제작)
- ⑥ 흥브가기가막하: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활용하여 특별한 토핑 제공하는 흥성브라우니(=흥브)개발
- ⑦ 여기잇슈: 홍성의 관광명소를 담은 카페메뉴, 소품, 공간 조성



〈좋은 점, 이로운 점〉	〈불편한 점,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김(구심점) · 시골에서 청년이 모일 수 있는 H/W 마련되어 있는 점(공과금, 임대료 등 운영비 무료) · 지역청년 고용창출을 통해 파급효과 기대 · 공유공간에 카페를 개소하면 주이용객은 중장년층, 노년층인데 유입된 청년들의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동네주민 및 마을주민 활용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주가 공공일 경우 유희공간의 자유로운 활용과 투자에 어려움 · 입주청년 모두 읍 지역에 거주(정주, 주거 문제) ·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수익구조 창출 어려움 · 청년들의 단합, 의견일치에 어려움 · 위탁공간이 농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 · 정보수집의 어려움

자료 : 농담 누리집(https://nongdam.kr/issue01_policy, 검색일자 : 2022.11.01.).

4.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한다. 정착 전략의 주요 대상은 전업 청년농업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9〉 참고).

〈표 4-9〉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요약

전략	주요 내용
농지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전수실태조사, 연령대별 편향된 농지소유 재배분 사업,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개정 등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임대차 및 매매 정보 수집·관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 장기임대사업 확대, 임대기간 연장, 농지원금 거치기간 확대, 농지 공공임대 비중 한도 확대 등 · 충청남도와 시군 : 지역별 유휴지·공유지·임대농지 등 활용하여 개인, 법인 모두에게 저렴하게 임대, 지자체 공유지(시군유지) 공공 장기임대용 농지사업, 공공 임대형 농장 운영, 공용농지 매입 지원사업, 시설 장기임대사업, 농지업무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확충, 지역단위 마을사람-농지위원회(‘지역 농지-사람 거버넌스 구축’) 등 · 마을 내 자구책 : 청년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협업농장 확대, 청년농업인에게 마을주민이 농지 알선해주는 ‘마을 자체농지DB 가동’, 읍면 주민자치회 조직 결합 등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방향 :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비빌 언덕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 지원을 동시에 하는 교육 · 교육강사 : 청년농업인끼리의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매칭 시스템 구축 · 교육방식 : MZ세대에 맞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화된 교육방식 도입 · 교육내용 : 이론교육 외 현장실습 교육,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경영비가 덜 들어가는 농사교육 등 · 그 외 지역경험을 연결하는 실천농장 교육,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교육, 기타 생활교육(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농촌생활 기술교육 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농자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 절감 방안 : 고투입·고비용 농사방식에서 저투입·저비용 농사방식으로 유도, 지자체 단위의 농작업 인력지원 정책,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자재 가격 상한제 도입 등 · 영농자금 확보 방안 : 이자율 인하·차보전무이자, 거치기간 확대, 담보대출 규제 완화, 행정의 과대광고 및 과대홍보 지양, 지역농협 영농자금 담당자 전문성 교육 ·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 보전방안 : 기초 생활비 지원 강화, 다른 일자리와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농사활동에 최저시급제 적용하여 생활자금 지원 · 기타 사회적 금융 도입 방안 : 충남청년사회적금융연대기금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이용
주거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수요(형태와 위치) :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지역을 탐구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주거형태, 경작지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위치, 가족 단위는 도시 입지 선호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1인용 혹은 소가족 임대주택 보급 확대, 공공임대용 주거단지 대량 확보, 농촌주택정보 수집관리 DB 구축, 농촌주택소유자와 청년농업인 간 주택 매칭하는 주체 결정, 가족 단위 장기임대차 농촌주택 지원방식 다각화 ·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설계 : 청년세대의 주거수요 및 특징 파악하기 →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모여 살게 하기 → 20-30 가구 수준의 단지 조성 적절 → 주변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농사기술 등 포함), 플랫폼 공간, 농장(경작거리 1-3km이내) 등 배치 → 청년과 마을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 조성

주 : 저자 작성함.

1) 농지기반 확보

농사는 여러 가지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첫번째 장벽이 농지확보이다. 농지라는 물질 기반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한데 농촌 현실은 신규 청년농업인 등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청남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표 4-10〉 참고).

〈표 4-10〉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농지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시행주체	주요 내용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농지 공급 : 비축농지 임대(매입범위 확대, 매입규모 확대, 임대기간 확대), 청년 농 농지 매입(자부담분 농신보 보증 가능, 지원단가 증액) 등 임차매매농지 공급 확대 · 임대수탁농지 공급 : 임대수탁농지 임대(청년농업인 우선 지원)
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대-후매도 사업(지원단가 및 규모 확대) : 청년농 희망 농지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후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총 20ha 범위 내 · 농업스타트업(새싹기업) 단지 조성사업 : 유휴농지 등을 매입, 스마트팜 시설 설치 후 최 장 30년간 임대, 스마트팜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매도, 총 6ha 범위 내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비닐온실 설치 임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농어촌공사 소유 공 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하여 청년농 장기 임대, 총 6ha 범위 내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농 은퇴지원 및 경영이양 분위기 확산 : 제도 홍보 및 전문강사 홍보요원 육성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비축농지 임대 우선권 부여, 농지임대료 50%, 최대 200만 원 지원/인 ·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 자료 : 1. 충청남도(2023), 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2.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2023.02.08.), 농지은행,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3.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2023.02.06.), 농어촌 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조 4천억 원 투입.
 4.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기반 확보를 위한 주체별 역할에 맞춘 방안을 제안한다.³⁵⁾

① 농식품부의 대응과제

- 중앙정부는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전수실태조사, 실태조사 통한 연령대별로 편향된 농지 소유 재배분 사업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개정
- 고령화 문제에 따른 상속농지 미 경작 시 농지이양을 의무화 제도 마련
- 고령농 및 은퇴농으로부터 농지매입지원 확대, 농지연금 확대하여 경영이양 제도화,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 제공
- 절대농지 가격안정화 제도,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의 농지 단지화, 임대분양 방식 도입
- 농지 관련 각종 지원금을 통합 농민수당 및 기본소득 지급

②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대응과제

- 지역단위의 농지지원기구로서 농지은행이 농지임대차 및 매매 현황 정보를 수집·관리,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와 기존 농지 소유자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 수행
- 농지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 장기임대사업 확대, 임대기간 연장, 농지원금 거치기간 확대, 농지 공공임대 비중 한도 확대
- 청년농업인을 위한 비축 임대농지에는 시설물을 지을 수 없기에 도 농어촌공사와 행정에서 협의하여 비축농지에 처음부터 시설물(온실하우스, 노지관정시설 등)을 지어서 맞춤형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예. 최근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짓고 임대해 주는 사업 참고)
- 농지은행 농지임대 시 재배품목 조건 완화(현재 임대농지의 경우 벼재배 금지, 발작물 재배 의무)에 앞서 발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농기계와 판로개척 등이 필요한데 현장의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서 유지 또는 전환 할 수 있는지 고민과 협의 필요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과 물량에 맞추어서 농지 공급,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인상 필요

35) 자료 : 1.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기홍(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3.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4.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5. 한국농정 누리집(<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6>, 검색일자 : 2023.02.05.).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일괄적으로 벼 재배 금지가 아닌 농지 특성에 맞게 적절한 재배품목 농지매칭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재촌지주 임대수탁 활성화 및 임대차 허용, 실시간 농지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시도 필요

③ 충청남도 및 시군의 대응과제

- 소수의 정착을 위한 고가 스마트팜 시설보다 다수의 자립을 위한 공용농지 확보, 농지 매입 지원사업 확대
- 충청남도, 15개 시군 내 지역별 읍면동에 있는 유휴지, 공유지, 임대농지 등을 활용하여 개인, 법인 모두에게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재원은 지자체 마련), 지자체 공유지(시군유지) 공공 장기임대용 농지사업, 공공 임대형 농장 운영, 다수의 자립을 위한 공용농지 매입지원사업, 시설 장기임대사업
- 지자체의 농지업무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확충, 지역 내 농지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제도화
- 고령농 및 은퇴농으로부터 농지매입지원 확대, 추가 농지연금 확대하여 경영이양 제도 뒷받침, 다양한 형태의 복지혜택 제공
- 재배품목에 맞는 적정한 농지를 매칭하기 위하여 농지정보 및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농지거래에 대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범위의 농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예. 실제 거래되는 농지는 대규모이므로 초기 청년농업인 부담 큼)
- 농업인의 고령화로 신규로 시설을 지원하기보다 기존 농지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사업
- 신규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 임대료 지원 혜택 부여, 농지비용 등 관련한 정보를 멘토링 상시 지원 혜택
- 지역단위 마을사람-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농지 문제 관련 논의 하고 신규 청년농업인에게 경작가능한 농지를 연결해주는 것 제도화, 소위 '지역 농지-사람 거버넌스 구축', 특히 친환경농지보전 및 승계 계획 수립 진행(예. 일본의 마을농지-마을사람 플랜 제도화 벤치마킹)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농지임대사업의 유연한 기준 적용(예. 귀농인·후계농·창업농 등, 원예시설·축사시설 등)
- 가족으로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농이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제3자 승계를

하는 방안(예. 농지 등 영농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경 영노하우, 인맥과 같은 무형 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양되므로 기반이 없는 청년의 영농정착에 보다 효과)

④ 제도권과 별개로 마을 내 자구책

- 청년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협업농장 확대
- 지역에서 청년과 마을사람이 어울리게 되면 점차적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알선해 주기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주게 됨. 빌려줄 수 있는 '자체 농지DB'를 가동하게 된다는 것,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과정
- 예를 들면, 읍면단위 주민자치회 조직 분과와 결합하던지, 지역 내 사회경제적 조직과 결합하던지 하여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유입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농지가 유희농지인지, 어떤 농지가 경작 가능한지 등을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게 됨.
- 이때 조건은 농장(농지)과 정주공간은 분리, 단, 기존 선배 농장주로부터 농사기술 교육, 현장 코칭 및 멘토링 등이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입지에 농지를 잡도록, 이들이 결국 마을로 스며들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상과 같이 제도권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경작할 수 있는, '농지 유동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설정한다. 조사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비축해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순위에 상관없이 양질의 쓸 만한 농지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양질의 농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그 외에 정부나 지자체는 청년농업인이 농지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노력은 물론 국유지나 공유지를 농지로 확보하고 이를 장기임대를 제도화하도록 노력한다. 충남에 가용가능한 모든 농지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창농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맞춤형 정보지원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2)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우리나라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실습해가는 공식 교육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년농업인에게 당장 농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청년농부사관학교,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교육과정 등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교육방식, 교육시기, 교육내용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것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그동안 교육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점은 “청년들이 교육받을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 교육별 차등화가 부족하다, 청년에게 맞는 (지역살이) 교육받을 내용 없는 것 같다, 취미수준 교육은 많지만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교육·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은 부족하다, 보조사업 수혜에 따른 의무교육은 그저 교육 시간 채울 정도로만 생각한다, 초기 교육 및 생활비 지원 등 초기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청년들이 제대로 농촌에 특히 농업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인터넷 강의를 밤새 틀어놓기만 한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필수교육이수를 핑계로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 등이었다.

‘관심, 결심,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사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운영의 ‘청년농부사관학교’ 운영사례가 있다.³⁶⁾ 6개월 간, 총 704시간 동안 기숙사 합숙 생활을 하면서 실습 위주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농업기초교육, 농가현장파견 인턴과정, 비즈니스플랜(사업계획서 작성, 비닐하우스 시공, 아크 용접, 농기계(드론트랙터·굴삭기·지게차 등)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 또 다른 사업사례는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청년귀농장기교육 사업이다. 전국 14개 농장을 선발하여 청년(개소당 5~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청년입장에서 농업이 나의 적성과 맞는지, 농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농촌 생활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농업에 투신할 용기가 있는지 등을 실제로 확인할 단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관심, 결심, 준비’ 단계이다.

36) 자료 : 농협창업농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학교 누리집(<https://nhparan.nonghyup.com>, 검색일자 : 2023.05.0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의 경영실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표 4-11〉 참고).

〈표 4-11〉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

시행주체	주요 내용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 : 농업계 학교 창업률 제고, 예비농업인 실습교육 강화, 영농창업특성화대학 규모 확대, 마이스터대학 활용한 청년농업 CEO양성과정 신설,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강화, 청년실습전문교수 양성 · 융복합화 : 지역기반 융복합 창업 커뮤니티 지원, 유망경영체 인증하여 컨설팅 지원 · R&D : 청년농의 현장 실증과제 참여기회 확대, 농업기술 실용화 및 특허출원 지원, R&D 성과 활용한 창업활성화 지원 강화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단계별, 품목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지원 · 농업계 청년 대상 : 농업 교육기관 연계 지원, 도내 청년 농창업 지원,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 비농업계 청년 대상 : 창업 보육 프로그램(도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군의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회적농장 영농실습 지원 · 예비 귀농인 대상 : 도내 농창업 예비 귀농인 실습교육 지원, 4-H양성 및 교육지원, 청년 농부되기 진로교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 정착한 자 대상 :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영농정착 기술지원, 품목별 연구동아리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 전문농업인 대상 : 품목별 우수 청년농업인 선발 지원, 멘토 및 현장강사로 육성

자료 : 1. 충청남도(2023), 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³⁷⁾

① 영농실습과 교육의 접근방향

- 장기적 안목에서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시키는 교육,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양시키는 교육, 예비 창업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교육과정 지양,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교육
- 정책수립자 입장이 아닌 교육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한 내용과 방식을 전환한 교육

37) 자료 : 1.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마상진·김남훈(2019),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경제 4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4. 마상진·김경인(2018), 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6.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7. 한국농정 누리집(<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6>, 검색일자 : 2023.02.05.).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로를 탐색할 기회 제공하는 교육
- 귀농·귀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먼저 귀농한 지인이나 선배 농업인이므로 지역 내 '비밀 언덕'과 같은 플랫폼 활용, 지원을 동시에 하는 교육
- 대안학교나 협업농장과 같은 곳에서 실험적 영농을 시도하는 교육
- 신규 청년농업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향상시키면서 감성적 케어까지 하는 교육

② 교육강사

- 농업에 관심이 있으나 농지가 없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후계농업인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 청년농업인끼리의 멘토-멘티 시스템 구축
- 2년~3년 이상이 지나야 농사를 따라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론상 이 시기에 정착 가능하므로 가능하게 하려면 멘토와 멘티 관계 형성하는 농업심화 교육 필요
- 기존 지역 내 선도 청년농업인, 지역에 먼저 정착한 농업인들을 연령대가 비슷하도록 구성하여 신규 농업인들과 멘토-멘티 매칭 운영.(예. 지역 선도 청년농업인과-신규 청년 농업인 간의 멘토-멘티 컨설팅을 통한 보완 운영)
-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인력 증가

③ 교육방식

- 과거의 청년농업인을 교육하는 방식이 아닌 MZ세대에 맞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화된 교육방식 도입(예. 현재 1년에 200시간 과다하므로 필수 교육시간 하향 조정)
- 교육내용과 교육방식도 청년농업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접근

④ 교육내용

- 단순히 농사만을 위한 투자 강요하는 교육내용 질적인 변화와 개선 필요
- 경영비가 덜 들어가는 농사교육,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농촌생활 기술교육 과정 필요
- 이론교육 외 현장실습 교육, 농기계 등 전문지식 교육, 품목별 영농심화 교육 강화
- 4주 이내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⑤ 지역경험을 연결하는 실천농장 교육

- 실천농장(인큐베이팅) 발굴하여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마을이 함께 청년들에게 농촌과 농업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농장, 서로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 있는 농장
- 충남의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하여 이와 같은 농장에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사 경험, 농촌 경험, 마을 경험, 지역 경험하게 하는 학습과 교육 기회 마련

- 마을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가 네트워크로 엮여서 소규모 교육농장 시도(예. 지금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농부들은 필연적으로 소규모 농장 조성 필요)
- 마을 내 공공 임대농장 조성, 마을 내 경영실습 임대농장, 마을 내 교육농장 조성(예. 재배품목별 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보, 시설하우스 온실 임대농장 확보)
- 마을주민 스스로 청년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협업농장 제공, OJT방식 농사실습, 교육, 지역정착, 어울림 통합지원

⑥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교육

-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준비기간 동안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전 과정에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지원
- 실습기간 동안 기술교육, 주택, 농지 제공하여 영농 정착하는 준비단계 지원
- 청년들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실습농장에서 농사를 경험,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창업에 이르도록 연계 지원
- 청년창업농 컨설팅 관련지원의 경우 컨설팅 이후 컨설턴트(멘토)에 대한 평가가 없기에 추후 멘토링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진행하기, 단, 앞서 나가는 성공실패 사례를 선배 농업인이 컨설팅 해주고 선배 농업인 또한 컨설팅 자격취득하여 연계 지원

⑦ 기타 생활교육

- 신규 농업인의 농업기술력 보급뿐 만 아니라 면단위 규모 연계를 통한 생활기술학교 운영, 생활정신건강 관리·정서 유대감 조성 지속(예. 유럽의 life skill education)

농업교육의 기본은 계절과 함께 작기를 경험하고 식물의 특성, 환경과 병충해, 영양관리 등을 경험하면서 농부의 역할을 체득하는 것이다.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은 창업조건이 아니라 농부라는 직업을 체험하는 조건을 장기간 경험하게 한다. 지역 내에서 내려오는 농사기술, 기후환경, 자연환경, 사계절 변화 등을 몸으로 익히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영농 실습을 하면서 몸으로 익힌 체험이 이론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다 대학교 농촌봉사활동 동아리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도농교류나 체험활동 참여 경험한 청년들 모두 그러한 과정이다. 현장 농사실습과 교육을 동시 병행하는 협업농장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3) 영농자금 확보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비단 농지 문제만이 아니다. 농지를 어렵게 구해도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등이 없어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 및 자본의 초기 투자비용이 존재한다. 그만두더라도 구매한 장비 및 기구 처분 또한 어렵다. 농기계 가격이 최소 몇 천만 원대에서 최대 몇 억 원대에 이르다 보니 구입 자체가 힘들고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도 쉽지 않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안전 및 관리 문제 등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후순위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농사하려는 시도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승계농이 비승계 농보다 조금 더 앞서나간 출발지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농사를 제대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농기계, 농사기술과 노하우, 농지 소유여부'이다. 그렇기에 전업농이 되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아서 해매는 겸업농이 되는 것이다.

영농자금대출사업은 1980년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토지구입 및 시설 자금의 경우(담보 가능) 최대 3억 원 대출 한도이지만 영농자재 및 영농행위에 따른 인건비, 소모성 비용은 최대 5천만 원 대출 한도이다. 토지를 구입하고 나면 대출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 달라진 농업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자금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표 4-12〉 참고).

〈표 4-12〉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영농자금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시행주체	주요 내용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후계농자금 금리인하 추진(2% → 1.5%) · 후계농자금 한도 상향 추진(3억 원 → 5억 원) · 우수후계농자금 금리인하 추진(1% → 0.5%) · 경영회생자금 기준 확대 : 생산량, 매출액 등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10% 이상 감소
농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력이 미약한 청년농업인의 생애 첫 농지취득 시 자부담분 지원 · 장기임대농지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농신보 보증 제공 · 영파머스펀드 조성 규모 확대 : 생산 외에 가공, 유통 포함, 1,000억 원 추가 조성 · 정부 직접투자방식 : 생애 최초 투자유치 희망 청년농 대상 직접투자(무담보, 최대 2억원) · 정보제공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실시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국비사업), 승계농 세제 지원

시행주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스마트팜 임대 및 보급사업 · 신규 창업농업인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등 신규창업자(독립경영 3년 이하)에게 창농기반 시설 및 장비,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영농정착 디딤돌 : 전문경영체로 성장하려는 자(독립경영 4년 이상~10년 이하)에게 농업신 기술 도입, 디지털 농업, 융복합 등 영농업그레이드 기반 구축 및 장비 지원, 신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유통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등 · 농어촌진흥기금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 등 우대조건 개선 : 융자한도 및 농신보 보증액 상향 조정(5천만 원 → 1억 원),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5년 상환 → 3년 거치 7년 상환),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

자료 : 1. 충청남도(2023), 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자금 확보를 위하여 영역별 방안을 제안한다.³⁸⁾

① 영농자금 확보를 위한 접근방향

- 영농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투자와 빚으로 시작하는 관행 지양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단계별 자금지원, 조건 차등화, 초기단계는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하도록 유도
- 소득이 불안정한 초기 진입시기에 안정적 영농활동과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다각적 방안 모색 요구
- 김귀영(2018)이 제안한 것처럼 귀농을 결심한 청년에게는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산비가 최소로 투입되는 환경농업을 지향하게 하고 생활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농촌생활기술교육 또는 적정기술교육에 투자
- 정책자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 방지, 보조사업 폐해(예. 무이자 혹은 저리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자금 투자,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모가 대출수혜 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격심사 요건(예. 충분한 영농경력과 일정 규모이상 되는 자), 철저한 현장 실사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비

② 생산비 절감 방안

- 쌀 외에 타작물 재배 시 안정된 가격으로 매입, 농작업자 인건비와 농산물 가격에 대

38) 자료 : 1. 남원호·장지연·박정환·이상은·김미복(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R954 연구자료-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3.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4. 한국농정 누리집(<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6>, 검색일자 : 2023.02.05.).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하여 생산비를 반영한 기본지침 마련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극 시행

- 고투입·고비용 농사방식에서 저투입·저비용 농사방식으로 유도하고 전환하는 정책

〈인건비〉

-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농촌인력 전담부서 설치하여 탄력적 인력 운용 및 지원 체계 마련
-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의 농작업 인력지원 정책 실행, 인력보급지원사업 확대
- 지자체 주관으로 외국과 협력해 단기비자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 정부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출입국사무소 등)를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한 절차 간소화
- 여성청년농업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 다양한 밭작물 농기계 개발, 노동력 절감과 비싼 농기계 가격절감을 위한 정부지원

〈농자재 및 농기계〉

- 농지소유 유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임대농의 경우 직불제 등 현금지원 사업보다 농자재 등 현물지원 보조사업 수요가 큰 현실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예. 대상자 기준 확대, 청년농업인 우선순위 배정, 농기계 안전 사용지킴이 매칭 등)
- 각종 농자재, 재배시설, 농기계 보조사업 확대(예. 금액 상향 조정, 대상자 기준 확대, 자부담율 완화 등)
- 농자재 가격 상승폭 완화, 상한선 제도 도입
-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확대(예. 자금, 기술력 등)
- 시설원에 재배온실 임대사업 확대 혹은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농장 확대(예. 초기 대규모 투자 지양, 경험 축적 후 실행)

③ 영농자금 확보 방안

- 귀농자금, 후계농자금 등 정책자금 상향조정(예. 3억 원 → 10억 원 무보증 대출)
- 귀농자금, 후계농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예. 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시 이차지원보다는 거치기간 확대 필요
- 이자율 인하 혹은 이차보전, 무이자(농어촌진흥기금, 시군별 기금 활용), 시설건립 및 장비구입 시 저리자금
- 담보대출 규제 완화(예. 청년창업농의 경우 농지가 없을 때 대출시행이 안 되는 문제)

- 행정 과대광고, 과대홍보 지양(예. 농신보 업무규정에 입각하여 홍보 필요)
- 영농자금 대출정보 및 관련 지원사업 정보알림 시스템, 소급적용, 정책자금 확대
- 애초에 부채와 책임을 감당할 자산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규모 시설중심 지원사업의에 대한 불신과 의존을 회피하는 경향 존재(예. 대규모 시설중심 지원사업 받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라도 원하는 분야에 투자, 지원 절실)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별 대출업무 세부지침에서 차이가 있어서 대출창구 문을 두드려 보면 계약서 체결 이전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현실, 비승계농의 경우 대출하기가 힘든 현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발맞춘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이해와 협조 역할, 정책자금에 대한 지역농협 영농자금 담당자 전문성 교육

④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 보전방안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과 같은 현금성 직접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확대, 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지원금액 확대를 통하여 기초 생활비 지원 강화
- 농한기 및 영농으로 생계가 어려울 시기 다른 일자리(부업)와의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 농업소득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 발굴, 농외소득 교육 투자(예. 지역특산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 등)
- 농사활동에도 최저시급제를 적용하여 안정적 농업기반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⑤ 기타 사회적 금융 도입 방안

- 남원호 외(2022)가 제안한 것처럼 지역단위 사회적 금융 도입 검토³⁹⁾, 충남도 청년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정착하기 위한 ‘충남청년사회적금융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어려움에 처한 청년농업인이 적극 이용하게 하는 방안 모색 필요

39) 주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말함.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 넓은 의미로는 투자.융자.보증 뿐만 아니라 보조금, 자선금도 포함, 지배구조가 우수한 곳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도 포함(출처 : 남원호 외(2022)).

4) 주거기반 확보

예비 청년농부들은 편의시설과 교통에 대한 욕구 외에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영역 확보에 대한 욕구도 많다. 일정수준 정착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주한다는 것은 “올해 살았던 집에 내년에도 살 수 있길 바란다. 적어도 해마다 새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바란다.”를 의미한다. 청년농업인 정착 여부는 주거공간의 안정성에서 비롯된 안정감의 차이이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지역에 있을 것 같다는 안정감 차이가 큰데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은 결국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주거기반 해결을 위해서 충남 꿈비채 같은 청년임대주택을 지었지만 도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정착 청년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충남형 리브투게더와 같은 사업은 기획과 구상 측면에서는 좋았으나 실현가능성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특히 청년 의견을 반영한 논의구조가 아니라 정책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구조였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농업인의 주거현실은 1인 가구의 경우, 농지가 가까운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농촌에 빈집을 약간 개조하여 지내거나 오래된 집을 빌려서 지내거나 2~3인이 공동 홈에서 공동거주를 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 많다. 반면, 가족이 같이 살게 되는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거주는 주택 외에도 육아, 의료, 문화생활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도시권의 주택 단지로 결정하되 농지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많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위는 귀농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기반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의 주거기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표 4-13〉 참고).

〈표 4-13〉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주거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시행주체	주요 내용
농식품부 등	· 주거보육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공간정비 : 농촌공간정비사업 통해 농촌주거여건 조성,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와 환경개선 지원 확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등 모니터링체계 기반 구축(관계부처 합동)
충청남도	· 농촌협약사업 : 주민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 난개발 요소 철거 및 안전으로 농촌주거공간 개선 ·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로 정착 지원 · 읍면 소재지 생활 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자료 : 1. 충청남도(2023), 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06.08.),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의 주거기반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⁴⁰⁾

① 주거기반 확보를 위한 접근방향

- 청년세대는 일터와 삶터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일터인 농장과 삶터인 정주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기반 입지 선정 중요, 입지는 면 단위 소재지에 위치
- 주거기반 위치 자체가 면 단위 소재지라는 것은 청년농업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도록 하면서 소재지 활성화와 함께 마을에 이들이 진입하는 새로운 경로로 활용
- 주거기반은 마을로 스며들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입부분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
- 청년농업인들의 꾸준한 지역 유입을 위해서 정주환경 개선은 중요한 전제조건
- 주거기반을 제공하는 단기 유입전략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진정한 길라잡이 역할과 정책적 관심

② 주거수요(형태와 위치)

- 신규로 진입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존재,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지역을 탐구할 수 있는 쉼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같은 형식의 주거형태 필요,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 살더라도 어르신들처럼 정원을 가꾼다는 일은 거의 없기에 관리 하기에 쉬운 쉼어하우스 형태 선호
- 농작지 위치 상관없이 주거지는 변화가 아파트, 농가주택보다 아파트 선호하는 경향
- 자녀 학업을 위해서 도시에 주거지를 정하는 경우 주거지와 농지 간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면 큰 문제를 겪기에 가족이 있다면 도시에 주거를 결정하는 편
- 주거지의 입지조건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도심지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 면 지역보다 읍 지역, 지역의 활력과 다양한 기회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열려 있는 지역, 주택 및 근린의 질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
- 일터와 삶터의 구분 간 분리일 뿐이지 원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1인 가구가 자가소유 차량이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작지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워야 하는 위치 고려(이유는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가소유 차량 비율이 낮기

40) 자료 : 1.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지원 방안 연구, 전략연구 2020-16, 충남연구원.
3. 황정임,최윤지,최정신,정용경(2019),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6(4), 한국농촌지도학회.
4.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5.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주 : 그 외에도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한 각종 서면자문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대화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때문에 주거가 안정되려면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하는 조건, 버스노선이 불편하고 다른 도시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 발생)

③ 주거공급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이라 해도 읍면 기본 인프라가 있는 곳에 살기 위해서 주거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거부담 덜어주는 게 급선무, 읍면 소재지에 조성한 주거는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청년 셰어하우스 외 혼자 지낼 수 있는 주택 건립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월세 또는 전세 지원금 필요
- 충남개발공사에서 1인용 또는 소가족 임대주택 보급 확대, 도·시군 공용지 활용 검토, 공공임대용 주거단지 대량 확보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연결
- 지자체가 지역 내 주택 혹은 매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청년농업인 공공주택조성사업, 공유주택조성사업 실시
- 충청남도, 15개 시군 읍면동에 있는 유휴 주거시설 정보, 임대가능한 농지정보 활용하여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 재원은 지자체에서 마련
- 주택공공매입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차로 농촌주택 지원 방식 다각화, 맞춤형 주택 지원체계 제공, 귀농인의 집 수리비 지원(주거 지원)
- 청년창업농업인에게 주택구매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촌에 매매할 만한 집도 없고 찾기도 어려워서 미스매칭 현상 발생하므로 농촌주택정보 수집·관리 DB 구축
- 농지에서는 건축 불가능하고 결국 연고나 빈집이 있거나 본가가 있지 않으면 귀농귀촌의 터전 찾는 것 자체 어려움. 농지와 농촌주택 묶음 공급하여 주거탐색비용 감축
- 빈집매입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가족단위 장기임대차 농촌주택 지원방식 다각화
-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변 인프라(정주환경) 투자 확대, 폐가 및 빈집실태 조사 후 제대로 된 행정관리, 마을 내 경관 조성
- 마을 구성원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검토, 마을 내 협의회 구축하여 농촌 주택 소유자와 청년농업인 간 주택 매칭하는 주체 결정
- 마을마다 청년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면소재지 근처에 1-2년 살도록 하다가 마음에 드는 마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④ 충남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설계

- 일터인 농장위치는 기존 선배 농장주로부터 농사기술 교육, 현장 코칭, 멘토링 등이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입지

- 삶터인 주거위치는 청년들의 안락한 생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생활을 고려, 면 단위 소재지에서의 생활이 결국 농외활동 및 일자리 창출 연결, 지역경제 순환 활성화 연결
- 읍면 단위 청년농업인 주거단지 조성(충남형 리브투게더, 농촌 주거공간 개선사업 등) 시 입지여건은 마을 한가운데도 아니고 구석진 곳도 아닌 중간쯤 위치 적절⁴¹⁾, 전제조건은 교통이 편한 곳 선호, 자가용이나 전기자전거 이용하기에 정류장 근처 불필요
- 접근 프로세스는 “청년세대의 주거수요 및 특징 파악하기 →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모여 살게 하기 → 20-30 가구 수준의 단지 조성 적절 → 주변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농사기술 등 포함), 플랫폼 공간, 농장(경작거리 1-3km이내) 등 배치 → 이 단지에 청년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노인들도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노인돌봄시설 등을 구비해서 마을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 조성”

⑤ 기타 농촌빈집에 대한 현실

- 2022년 기준, 충남의 빈집 실태는 도시지역 622호(전국 중 1.5%), 농촌지역 3,901호(5.9%), 어촌지역 1,115호(4.7%)로 조사⁴²⁾
- 농촌 빈집이 많을 것이라 하지만 청년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곳 부재, 찾기 힘든 실정
- 시골주택 빈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설인 실내화장실,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 통신 등이 고장 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낮은 편
- 청년들이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예. 귀농귀촌한 청년은 아파트에 익숙해 주택관리가 되지 않아서 겨울철 보일러나 수도가 얼고 여름철 뒤통은 풀밭으로 엉망이 되는 경우가 흔함)

41) 주 : 서면자문의견서에 의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왔을 때 홀로서기, 독립을 꿈꾸며 오는데 마을회관과 같이 마을 한 가운데 어른들이 들여다보는 곳은 선호하지 않고 반대로 구석진 산근처나 가로등 조차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도 무섭기 때문에 주거단지 조성 시 적절한 중간위치가 좋다고 응답함(저자 주).

42)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06.08.),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5. 통합 시범사업 예시

1)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⁴³⁾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 것, 청년농업인을 길러내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한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정책 연속성을 발휘해야 한다.(김기홍, 2022; 정민철, 2022)”

주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함.

친환경 청년농부 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된 바 있다(김기홍, 2018)⁴⁴⁾. 즉, 친환경농업 실천 청년 육성과 정착이라는 큰 역할에 대한 인식 필요, 체계적인 단계 및 과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권역 단위를 넘어선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단위 논의 기반 조성, 충청남도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정착 비전과 기본 계획 구상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선 8기 탄소중립선언을 계기로 충남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 청년농부 프로젝트’로 재정비하여 진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연동한 육성을 한다.

세계 추세에 맞추어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 및 비전 아래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보다도 선제적으로 충남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유기농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해가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충남이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충남의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전략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일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친환경청년농부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실천에 대한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지의 보전과 전수를 위한 친환경농지 DB화 기반을 마련한다.

43) 주 : 김기홍(외부 전문가)의 위탁원고를 토대로 작성함(2022.10.~12.).

44) 자료 : 김기홍(2018),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현안연구과제, 충남연구원.

친환경농업 분야만큼이라도 지역 내 친환경농지 리스트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는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제 되어야 충남에서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친환경농지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서라도 농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지역 내 임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에 친환경농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적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의 전체 친환경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는 농지는 보다 선제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친환경청년농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사례로서 부여군은 2022년부터 ‘친환경 농지에 대한 임차료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를 빌릴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임차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2014년 지정, 2022년 현재 2차 3년 연장)로서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5개 법률의 규제 특례를 받아 왔다.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과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2022년도 연장 시기에 맞춰 농지법 특례를 친환경농업 농지에 대해 적극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사례는 지역 내 경작되어 온 친환경농지를 다음 세대인 청년농부에게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임대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어렵게 유지해 온 친환경농업 실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지역 차원의 농지 논의를 위한 (가칭)지역 단위 농업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 단위의 친환경농지가 데이터베이스(DB)화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농지를 친환경청년농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지역단위 농업위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보전, 전수를 위한 임대 및 매매와 관련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친환경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로서 일본에서는 지역 농가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지와 접목하여 고령화된 농민들의 농지를 청년들에게 잘 넘겨줄 것인지 계획하는 ‘사람농지플랜’을 대대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사람농지플랜’을 주축으로 하여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지역 농지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지역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문화, 농촌경관 등을 다음 세대에 잘 전승할 수 있을지 하는 지역농업·농촌의 미래상을 그려가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시정촌(지자체)과 농지뱅크(우리의 농지은행과 비슷한 역할), 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 개량구, 지구배분과 관련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지역농협(JA지정촌공사), 그리고 농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농지 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농업 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모여 농지이용 관련 현황을 지도화하고 5~10년 후 이 농지를 맡아갈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나가고 있다(김기흥, 2019).⁴⁵⁾

행정 차원에서 마련된 친환경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이후에는 지역 차원에서 농업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내 친환경농지가 친환경청년농부에게 전수되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한다.

넷째,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착을 포함한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한다 (〈그림 4-9〉 참고).

친환경농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이고, 이를 실제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지역 주체까지 마련된다면, 이제는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을 포함하는 지역 단위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청년농부를 포함하여 청년 농업인들은 보통 준비 과정에서 귀농 상담을 진행하고 단기, 중기 교육 등을 받고 1~2년 정도 경험과 기술을 쌓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실천농장이 마련된다면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촌 생활에 정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난 후에 지역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농사짓는 청년 농부가 될지, 농사는 자신이 없어 농촌 청년으로 남게 될지 결정되는데 농부가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자금과 용자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농사를 짓기로 준비했고 지역정착을 막 했거나 이미 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지역의 지인이나 관공서의 소개를 받아 우연한 기회에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을

45) 자료 : 김기흥(2019), 충남의 청년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신청하게 된 친환경청년농부들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이 수반된다. 그리고 지역에 새롭게 정착할 당시의 어려움이나 친환경농업을 접했을 당시에 주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던 경험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지역 정착과 관련한 과정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청년농부를 맞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계획 로드맵 가운데 친환경 청년농부를 육성,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위원회(혹은 농지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차원에서 논의된 계획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4-9〉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맵



자료 : 김기흥(2019), 충남의 청년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다섯째, 친환경농업 기술 및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친환경청년농부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는 친환경농업 기술에 관한 부분이다. 친환경농업을 해보려 하지만 관련한 교과서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다. 혹여 여러 문헌들을 통해 습득하였다 해도 실제로 이를 실천해볼 곳도, 배울 곳도 많지 않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실천농장 형태의 농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역 차원에서 마련된 실천농장을 통해 지역에서 실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김기흥, 2018, 2021). 현재 광역법인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과정이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친환경농업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정책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 관행농업에 비해 잡초나 병해충 관리에 훨씬 어려움이 많은 친환경농업을 청년들이 선택하도록 하려면 더 많은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보에 대한 갈증이 크기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친환경농업 소개하기, 각종 친환경농업 지원제도 및 정보 공유 활성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지원제도 마련, 학교급식 참여방법 등 친환경 판로 안내 제도화, 친환경 자재 정보 공유, 친환경 자재 개발과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⁴⁶⁾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기반 사업에서 나아가 후계 연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부터 다시 1기 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시설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선발이 이루어졌다. 초기 시설기반에 더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시행된다면 청년농부들의 성장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가 사업과 더불어 밀도 높은 친환경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추진 및 해외 선진지 연수 등 이들 친환경 청년농부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친환경청년농부 육성과 정착을 위해서 도는 물론 시군 차원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역 현장의 친환경농업 그룹, 당사자인 친환경청년농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친환경청년농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다시 마련되어야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결국 충남의 친환경농업 발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미래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6) 자료 : 한국농정(2023), 친환경농업,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6>, 검색일자 : 2023.02.05.)

2)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47)

융복합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배경 및 필요성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우선과제는 새로운 젊은 인구의 유입,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농업 분야 관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관점이 농촌 공간에서 융복합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안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10) 참고).

청년농업인의 관심, 유입, 결심, 준비, 정착, 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 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한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연계할 사업을 찾는다. 예를 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계정 신규사업,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청년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식품부의 농촌 사회적경제서비스기반조성 사업,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례 등과 같은 것이다.

〈그림 4-10〉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안) 구성



주 : 저자 작성함.

47) 주 : 정민철(외부 전문가)의 위탁원고를 토대로 작성함(2022.12.).

청년농업인 육성,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통합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통합은 선주민과 후주민, 노인과 청년, 주민과 농민, 농업과 농촌, 전통과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속적이라 함은 탐색 단계부터 유입, 성장 단계를 거쳐 정착단계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주거 분야이다.

대부분 청년 주거 위치는 단지 농지만 연결하여 고려하였다. 농지나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유효농지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청년 주거 단지를 함께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는 예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의 방식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청년의 삶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존 주민 및 농민과의 단절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 저하 -모든 문화, 경제, 사회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로 인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농촌에서 농민을 포함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은 면 소재지이다. 면 소재지는 읍내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면사무소와 농협 등 생활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으로 농림부의 기초생활거점사업 역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 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도의 136개 면의 인구수 중간값인 3,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농촌이라고 해야 대표성을 있는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면 소재지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있는 없는 곳은 새로운 청년의 이주 자체가 주택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면 소재지에 주거 단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청년 이주에 의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면 농촌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만이 아니라 주민들 역시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초기 미입주에 의한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농지는 대략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서 구할 수 있다면 면 소재지의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배후 마을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청년을 통해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까지 함께 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농지 분야이다.

인위적으로, 단기적으로 농지의 재구조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이고 자연스럽게 농지가 청년농업인에게 경영이 넘어가야 한다. 이 둘의 상호 관계에서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즉, 준비된 청년농업인이 있어야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고령농의 농지를 물려 줄 수 있지만 청년농업인 입장에서 물려받을 농지가 생길 때까지는 소규모로 어려움을 버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안은 대부분의 농지 임대 및 판매는 마을 사람(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청년에게 더 많은 농지를 제공하는 마을과 마을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농지를 확보하여 청년에게 일정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충남 정주환경개선 및 공동체활성화 시범 사업”이나 농림부의 “취약지구개선 사업”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진입을 도와 주는 것이 바로 마을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2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조건으로 청년에게 저수지 주변 지역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현재 농림부와 환경부는 저수지 주변 지역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에 대해 경작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저수지 오염의 중요한 비점오염원이 저수지 인접 농지(많은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의 경작에 따른 비료 유출이라 보기 때문에 기존 농지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주변 농지는 싼 임대료로 인해 마을의 대규모 농가가 대부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곳은 친환경농업을 전제하므로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셋째, 농사 기술 분야이다.

농사 기술은 농지나 시설 규모 그리고 작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승계농의 경우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 받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이 우선이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소규모 농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창업농은 3개의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농사라는 육체 노동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대략 1~2년이 소요되며 이 단계에서는 고도화된 기술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숙달되고 과학적인 재배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농사일에 대한 숙련 그리고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재배 기술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이 단계를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현장 농기이다. 현장농기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오랜 농사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농사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농사 일을 경험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교육장이지만 WPL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한 농장 수준이면 된다. 1단계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겸업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2단계는 자기에 맞는 작목을 찾거나 작목을 변경하는 단계이다. 1단계를 거쳐 2단계가 되면 자기에 맞는 작목을 찾게 된다. 물론, 선택한 작목을 재배해보고 다른 작목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자기 농사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대학을 다니

면서 작목에 따른 재배 기술을 이론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3단계는 농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단계이다. 현재는 이러한 필요한 농업기술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 그리고 WPL수준의 재배 기술만 알려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 및 농지 구입 등의 지원은 2단계를 넘었을 때 지원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현재 2단계부터는 많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1단계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농촌 일자리 분야이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형태는 3가지이다. 전업농, 1종 겸업, 2종 겸업으로 나누어진다. 60~70대로 갈수록 전업농이 증가하고 30대로 갈수록 1종 겸업과 2종 겸업이 증가한다. 승계농의 경우 농지의 규모화와 더불어 기존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추가적인 농업 수익원을 발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외 농업 수입을 포함하면 전업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청년농업인을 전업농으로 육성,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에서 창업농의 경우 1종 겸업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농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농업만(전업농)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

농촌에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현실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농촌에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창업만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촌마을을 벗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읍내로 가게 된다. 2017년부터 시작한 농림부의 사회적농업 사업 중 “서비스공동체형”과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업” 사업은 필수적으로 1명의 코디네이터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모니터링반장과 회계 등을 두게 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이나 단체는 그 역할을 맡을 적절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농업도 알아야 하고 사업대상지인 농촌지역사회도 알아야하며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일은 전업 청년농업인의 경우 농사 일이 많아 참여할 수 없지만 1종 겸업을 하는 청년창업농업인의 경우 중요한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고 이 소득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와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행정작업과 사업진행을 대행하는 마을구성원으로서 청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공유공간 분야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업 및 혁신공간의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정수희 외, 2020)이다.⁴⁸⁾ 청년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단순히 공간 임대 개념을 벗어나 크기나 임대 기간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업무활동을 지원

하는 서비스 등 공간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다.

홍성군 장곡면의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역시 유사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마을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2016년 신축 당시 사무동 공간을 만들어 단체들의 입주를 유도하였다. 이는 단지 임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모여 있음으로써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연대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시작하였다. 유사한 시기에 숙소로 예절교육관을 만들고, 협동조합행복농장이 행복부역을 신축하면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단체가 입주하여 월례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면소재지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농협 창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공간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설계와 진행에서 기존 마을과의 관계성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없어 존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주민 단체들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 스며들기와 소득안전망 분야이다.

마을로 스며들기와 소득안전망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유는 마을로 스며들어야 소득이 안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진입을 지원하는 주체는 기존 마을 주민 그리고 기존 마을 단체가 네트워크화가 진행된 곳이어야 한다. 귀농자가 귀농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귀농자를 받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신규 청년농업인이 참여함으로써 스며드는 밀도를 높여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득안전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연속되어야 한다. 단지, 1회성 또는 단편적인 지원은 사업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연속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8) 자료 : 정수희, 허동숙(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한국경제지리학회.

6.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관점과 방향이다.

①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②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③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도 설계한다.

④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⑤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⑥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둘째, 제안한 추진전략이다.

①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으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제안하였다.

②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③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하였다.

셋째, 예시로서 통합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①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연동한 육성, 친환경 농지의 보전과 전수를 위한 친환경농지 DB화 기반 마련, 지역 차원의 농지 논의를 위한 (가칭)지역 단위 농업위원회 구성,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착을

포함한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하기, 친환경농업 기술 및 후속 연계 지원, 충청남도는 물론 시군 차원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역 현장의 친환경농업 그룹, 당사자인 친환경청년농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②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이다. 청년농업인의 관심,유입,결심,준비,정착,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 서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한다.

- 주거 분야는 면 소재지에 주거 단지를 위치,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청년 이주에 의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도록, 면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활성화 등 농촌 경제활성화에 직접적 영향
- 농지 분야는 1안으로서 대부분의 농지 임대 및 판매는 마을 사람(이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년에게 더 많은 농지를 제공하는 마을과 마을 사업 연계, 2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청년에게 저수지 수변 지역의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
- 농사 기술 분야는 소규모 농지로 시작하는 신규 청년창업농업인은 3개의 단계(1단계는 농사라는 육체 노동에 적응하는 단계, 전업 혹은 겸업 판단 실시, 2단계는 자기에 맞는 작목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단계, 3단계는 농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단계)에 맞는 적응
- 농촌 일자리 분야는 농업만(전업농)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1종 겸업을 하는 청년창업농업인의 경우 보조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되면 중요한 농외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이 소득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와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
- 공유공간 분야는 청년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공간,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을 벗어나 크기나 임대 기간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업무활동 지원하는 서비스 공간,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커뮤니티 강조,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연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공간
- 마을 스며들기와 소득안전망 분야는 마을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진입을 지원하는 주체는 기존 마을 주민, 그리고 기존 마을 단체가 네트워크화가 진행된 곳, 소득안전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연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을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 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한다.

그리고 상위계획 및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중앙정부,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배려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 지원은 물론 멘토링 등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예산)집행조직 현황은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 관심. 탐색.준비 단계보다 유입.진입.정착.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여러 부서가 사업을 개별 분산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정책 접근,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증시한 접근,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연계고리를 찾고자 하는 접근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전업 청년농업인만을 고려한 농업정책 영역 외에도

겸업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추이, 중앙정부가 농칠 수 있는 청년농업인만의 세밀한 특징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중요성,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불균형적인 농업인구의 분포, 충남 전체 농업인구 중 낮은 비중의 청년농업인 인구(2022년 12월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농업임업어업 산업의 취업자는 전체의 3.8%, 농림어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 수준에 불과, 연령대별 농지소유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년대상으로 주관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로서 ① 행정의 추진체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정책공급과 정책 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등이 존재,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은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는 문제 등을 제기, ③ 청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은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충남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는 '유입 및 성장단계'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영농자금' 분야로 나타났다.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판매처 확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로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가장 높았다.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높아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하였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을 보았다.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농지기반 확보, 영농자금 지원,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역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수요 분야는 소득안전망 구축, 기존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농업정책을 현재 청년 세대의 수요와 특징에 맞도록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서 유연성 발휘, 유형별·단계별 정책대상자 기준 확장,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청년 수요(놀거리, 즐길 거리 등)를 파악하여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농자주거기반 수요와 관련한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 방식에서의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근관점과 방향으로 “①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 ②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③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 설계, ④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 ⑤ 진입을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 ⑥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추진전략은 ①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으로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②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 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③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통합 시범사업 예시를 제안하였는데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이다. 청년농업인의 관심, 유입, 결심, 준비, 정착, 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표 5-1〉 참고).

〈표 5-1〉 전략연구과제 내용 요약 및 활용계획

연구 구분 일련 번호	전략과제 2022-22	도 관련부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연구 연도	2022년	연구 책임	강마야
연구 제목	충남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연구의 목적	·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제시		
연구의 내용	·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 분석 ·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분석 ·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		
정책 제안	·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 든든한 소득안정망 구축 -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 정책 추진체계 - 정책홍보 ·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사회경제적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 ·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기반 확보 -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 영농자금 확보 - 주거기반 확보 · 통합 시범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 - 충남형 젊은 농부 젊은 농촌 프로젝트 		
정책 활용 내용	·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및 중점과제 추진사항 반영		
정책 활용 유형	① 국비확보 ② 중앙정부 역제안 ③ 신규 정책(사업) 발굴 ④ 기존 정책(사업) 개선 ⑤ 정책참고 자료 ⑥ 법·조례 제(개)정 논리개발 ⑦ 비용절감 ⑧ 편익증대 ※ 해당사항 표시		

주 : 저자 작성함.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기존에 제시해왔던 부문별 정책 문제와 정책대안을 구조화하였고 체계화하였다.

둘째,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정책대안 도출 과정에서 현장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문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농정에서 시행착오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넷째, 다양한 연구방법과 실험(부문별 현장조사, 집담회/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도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민선 8기 동안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도출하여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핵심 공약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현재 민선 8기가 수립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은 유입 및 성장, 정착 및 자립 단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번 연구는 무연고, 무기반 청년들을 지역에 유입시키고,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져서 결심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를 하였다.

여섯째, 그동안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사업, 정책, 제도 한계는 ‘농업’이라는 산업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으로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부문별 선행연구라기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내용을 연구했기에 세심한 부문별 추진전략 내용은 부족하였다.

둘째, 청년농업인 유입, 육성, 정착을 위한 세부 전략과제 도출이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농업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서 청년의 삶과 생활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라는 직업군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청년 개인, 청년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이 여전히 부족했다.

넷째, 충청남도가 시범적으로라도 민선 8기 내 청년농업인을 위하여 실행하면 좋을만한

핵심적인 사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향성에 그친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청년농업인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농촌을 떠나가지 않고 농업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며 삶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정책관심을 적극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청년세대, 청년농업인 세대가 “농업이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길 주저하는가?”, “도시가 아닌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왜 살기를 주저하는가?”는 결국 현재 농정이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고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우리 농정 모습이 투영된 현상, 미러링의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현재 농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 고찰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농사짓는 사람을 존중해야 청년세대가 농업과 농촌으로 유입될 것이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만한 직업이라고 인식해야 청년세대가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것이다.

향후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방향은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구분하지 말고 통합적 시각(예. 겸업농 포함)에서 수요 대응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이들은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시켜 마을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 행위를 지속하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불안한 미래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낙오되는 사회 속에서 어렵사리 선택한 ‘농업과 농촌의 삶’ 경로로부터 후회하지 않도록, 농업인으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들의 하는 활동이 의미가 있도록 정책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이 농업과 농촌을 보는 인식변화의 중요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부록1.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지

ID

충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세부 전략 연구를 위해 『충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영농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근거는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농수산인등의 실태파악) 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 34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설문조사에 성심성의껏 끝까지 응답해주신 분들에게는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 제출방법 : 온라인 구글폼
- 제출기한 : 2022. 11. 18. ~ 2022. 11. 23.
- 주관기관 및 조사기관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문의처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강마야(041-840-1210)
연구원 이도경(041-840-1185)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성인(041-635-4015)

I. 영농정착 실태에 대한 질문(20개 항목)

질문	답변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④	⑤
귀하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귀하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했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귀하는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귀하가 지금까지 농사를 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예. 5,000만 원/총 기간)	() 만 원/총 기간				
귀하가 현재 농사를 통해 얻는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예. 2,000만 원/연간)	() 만 원 / 연간				
귀하의 현재 영농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관심 및 결심 단계	② 준비단계	③ 유입 및 성장 단계	④ 정착단계	⑤ 자립단계
귀하는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단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① 관심 및 결심 단계	② 준비단계	③ 유입 및 성장 단계	④ 정착단계	⑤ 자립단계
귀하는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① 교육	② 영농자금	③ 농지	④ 주택	⑤ 복직,의료 등 정주여건
귀하는 영농준비부터 영농정착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귀하는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은 지 몇 년차 되었습니까?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이미 종료, 졸업	
귀하는 영농정착에 있어서 영농정착지원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 안 됨	② 대체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대체로 도움	⑤ 매우 도움
귀하가 보기에 변화가 가장 필요한 주체,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만 선택)	①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②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③ 지역농협	④ 교육기관(농정원, 농진청 등)	⑤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⑥ 마을주민 및 마을이장	⑦ 지역시민 단체 및 지원조직	⑧ 본인	⑨ 부모, 친척, 지인	
귀하가 보기에 정보를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는 주체,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만 선택)	①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②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③ 지역농협	④ 교육기관(농정원, 농진청 등)	⑤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⑥ 마을주민 및 마을이장	⑦ 지역시민 단체 및 지원조직	⑧ 본인	⑨ 부모, 친척, 지인	
귀하가 과거 영농준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	①	②	③	④	⑤

질문	답변				
분은 무엇이었습니다? (*3개까지만 선택)	농사기술 습득 등 교육기회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농작업인 력확보	재배품목 선택
귀하가 현재 영농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3개까지만 선택)	① 농사기술 습득 등 교육기회	② 영농자금 확보	③ 농지확보	④ 농작업인 력확보	⑤ 재배품목 선택
귀하가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①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	②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 안 될 때	③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울 때	④ 지역사회 정착하기 쉽지 않을 때	⑤ 건강에 이상신호 가 올 때
귀하의 현재 영농실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귀하는 향후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아이디어)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주관식 응답, 예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시군유지 장기임대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주관식 의견이므로 가감없이 적어주세요. 글을 적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II. 인구학적 속성에 대한 질문(11개 항목)

질문	답변				
1-1. 현재 실제 거주하는 시군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공주시)	(시군명 기재)				
1-2. 현재 실제 거주하는 읍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우성면)	(읍면동명 기재)				
2-1. 현재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시군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청양군)	(시군명 기재)				
2-2. 현재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읍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목면)	(읍면동명 기재)				
3. 귀하의 연령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예. 39세)	만 () 세				
4. 본인의 유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승계형 창업농업인	② 비승계형 창업농업인			
5.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자	② 남자			
6. 귀하의 학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농과계 외 고등학교졸	② 농과계 고등학교졸	③ 농과계 외 대학교졸	④ 농과계 대학교졸	⑤ 농과계 외 대학원졸
	⑥ 농과계 대학원졸				
7. 귀하를 포함하여 동거하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8. 귀하의 영농 전 종사업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1차 산업(농림축산 업)	② 2차 산업(제조업 등)	③ 3차 산업(서비스 업 등)	④ 취업준 비생	⑤ 무직
9.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작성 ▶ ex. 010-1234-5678)				

부록2. 충남 청년농업인과의 대화마당 회의록

일시 및 장소	2022년 07월 15일 (금) 10:00~12:00, 충남도청 304호 소회의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충남 내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 한국유기농업연구소, 충남 농업정책과, 충남농업기술원 등
주거와 농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은행에서 임차하는 토지에는 시설을 지을 수 없으므로 농지은행에서 시설을 지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안 제안 · 유휴지(도/시군) 활용하여 저렴하게 임차 제공 필요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시 쌀 때문에 발작물(타작물)의 제한이 있음(강제성). 발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기계와 판로 등의 고민이 필요한데 현장의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서 유지 또는 전환 할 수 있는 고민과 협의 필요 · 읍면동에 있는 유휴 주거시설과 농지 대여하고 임차하는 방안(재원은 지자체에서 마련) · 충남 꿈비채 같은 청년임대주택은 도시 근처에 있어 청년농업인은 혜택 받지 못함. · 대부분 농지가 가까운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현실 · 귀농한 1인 가구 주거에 대한 고민 필요
영농자금	·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시 이자 지원보다는 거치기간 확대가 필요함
인구 유지와 연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유치만이 대안이 아닌 농촌에 와서 정착 후 안정적 삶 이어가는 것이 핵심 · 현재 정책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유치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단기정책에 불과 · 청년농업인 정책은 유입에만 집중되어 있음(2020년 역귀농의 8.6%가 청년농업인) · 중장년 청년층에 대한 계획마련이 필요함. 현재 기준조건에 턱걸이로 맞추어 들어온 청년농업인은 선정 시 유예기간을 부여 필요
교육, 관계, 그리고 주체	· 농업에 관심이 있으나 농지가 없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후계농 간 파트너십 구축(연령대가 비슷하도록 청년농업인끼리 멘토-멘티 시스템 구축)
플랫폼 및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내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필요, 공급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농업 인력과 정보를 제안하면 수요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과 관리는 충남에서 하기 · 물리적 공간 문제로서 시군에 청년들이 모일 공간이 없는 게 문제
스마트팜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온실보다는 비닐온실과 같이 충남에 맞는 기초적 스마트팜 도입 제안 · 스마트팜이라 하면 이상적이고 쾌적한 시설과 높은 눈높이가 존재하지만 현실 농업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 발생(숙소/원자재/농지문제가 해결되면 스마트팜 가능) · 스마트팜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가가 맞는가 제고 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스마트팜을 맡겼을 때 유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고민,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 필요 · 지역별로 특성을 파악한 후에 숙소, 자재, 농지 등을 지원 필요
그 외 사업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사업은 마케팅/수출/SNS 활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1차 농업 집중하는 게 필요 ·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사업수혜 시 5년 동안 타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패널리타 존재하는데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은 필요 · 충남 농사랑 택배비 지원은 입점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시 받아주지 않는 현실, 청년농업인들이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 시 택배비 자가부담 하게 됨 · 청년후계농사업의 경우 2018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6년차 사업이라 곧 1차 수요자가 배출, 이 사람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장치 부재 · 청년농업인의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신규 진입장벽 기준이 너무 높음

부록3.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회의록

일시 및 장소	2022년 08월 23일 (화) 14:00~20:00,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젊은협업농장 사무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등
총론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실과별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집행, 투자함이 중요, 조직도 통합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도청 통합TF → 시군 통합TF → 읍면 TF(자치조직 활용) 만들어야 한다. 청년농업인 정책과 사업을 위한 장기간의 최소 15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거주해본 경험이 없는 행정 공무원이, 농촌에 살아보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므로 포커스가 맞지 않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분야의 확장, 시각의 확장, 영역의 확장, MZ세대에 맞추는 집행방식으로 전환, 청년농업인도 MZ세대라는 특징(장점, 단점)을 파악한다.
분야별 방향 : 교육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교육방식/교육시기/교육내용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농협중앙회 청년 농부사관학교,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교육 실태파악 필요하다. 농사기술을 교육시켜주는 것만으로 이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리 해서도 안 된다. 기존 선배 농장주로부터 농사기술 교육, 현장 코칭/멘토링 등이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입지에 일터를 잡도록 한다. 마을로 스며들게, 들어갈 수 있다.
분야별 방향 : 주거와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소재지 중심으로 모여 살게 한다. 20-30가구 수준의 단지 조성이 적절하다. 면소재지에 조성한 주거는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줘야 한다. 주변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농사기술 등 포함), 플랫폼 공간, 농장(경작거리 1-3km 이내) 등 배치한다. 청년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노인들도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노인돌봄시설 등 구비해서 마을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MZ세대는 일터와 삶터 구분이 명확해야 하므로 농장과 정주공간은 분리되어야 한다.
분야별 방향 : 농지와 주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청년과 마을사람이 어울리게 되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알선을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빌려줄 수 있는 농지DB 가동하게 된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사회경제적 조직 등이 마을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게 된다.
분야별 방향 : 연령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 기준 상향 조정 필요, 연령 중요하지만 경영주로서의 자격 연령 중요하다. 청년농업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농사짓는다고 바로 농업인 자격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직되지 않게, 유연성을 가지고 거주하고 살아보는 기간도 자율선택에 맡긴다.
단계별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들이 진입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 관련한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 정책과 사업의 단계별 위치 모식도(진입, 준비, 성숙, 안착, 정착, 마을주민화)필요하다. 누가 이 사업을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누가 이끌것인가, 바로 지역농협이 본 사업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 기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현장에서 실제 살고, 활동하는 조직이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 청년사업은 지역에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다른 조직들이 같이 결합하여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읍면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등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사업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는 곳은 계속 추가 사업을 주면서 인센티브 지원, 시너지 창출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 잘하지 못하는 곳은 패널티 부과, 사업 중단도 시킬 수 있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부록4. 제주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02일 (수) 오후 15:00~17:00,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3층 회의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시 연합회 부회장, 4-H 제주시 회장, 제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등
지역살이 과정에서 청년으로서 느끼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농촌으로 갔을 때 지역사회 커뮤니티 적응이 어렵다. · 문화적 차이도 크고 어울리는 방식도 잘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다. · 마을주인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는 물리적 체력, 힘쓰는 일에만 동원되는 느낌이 있다. · 정착 청년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고 관리하고 분담해주지 않는다. · 짧은 시간에 많은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고 변화했기에 세대 간 인식차이도 큰 편이다. · 현재의 청년은 마을에서도 융화되지 못하고 기존 생산자와도 분리되어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반성과 평가, 향후 시행착오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농업인 자격기준 요건을 적용하니 청년 농업정책에 차별성이 없거나 늘 부족하다. · 산업육성 정책만 있고 “진짜로 살기 위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해가는 “단계별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 농업 육성도 대상자가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르고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모두 다른데 정책에서는 한데 묶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경향이다. · 보조사업 통합시스템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고 나눠주기식 지원으로 가고 있어서 정착 농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자체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다.
청년농업인 정책 실행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육성 중심의 청년농을 만들 것인가? VS 대안적 삶을 놓고 청년농을 만들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즉, “농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로 귀결된다. ·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농업육성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경계한다. 다른 카테고리 주제에 산업적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섞어서 논의하면서 대책이 엇박자를 낸다. · 농대 졸업생, 농고 졸업생 등 수많은 인재를 우리 농업계는 잘 모르고 지나쳐왔기에 우리 스스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농업을 노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 창업농업인과 후계농업인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진입기, 정착기별 다른 지원과 접근이 필요한데 초기 진입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나중에는 점차 줄여나간다. 연착륙 및 경험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
청년농업인 정책 실행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을 길게 하고 정책 소요기간(최소 15년 소요)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 영역별 필요에 의해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농업 외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필요하다.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정책은 장려되어야 한다. · 생산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지역살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 소득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으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나눠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하는데 진짜 농업으로 직업할 사람이 필요하다. 직업군으로서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들에게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 ·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고려한 정책, 귀농귀촌을 구분하여 달리 접근하는 정책, 이들 중 육성할 대상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전공을 살려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 농업인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진짜 농업인, 진짜 법인은 육성하고 가짜 농업인, 가짜 법인은 양성하지 말아야 한다.

부록5. 충남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테이블) 회의록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5일 (금) 10:00~14:00, 공주시 청년센터 2층 세미나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충남 농업정책과, 공주시 청년센터, 충남 내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 등
“우리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은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 · 농사를 하고자 해도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사기술, 각종 자본투자, 남성중심의 농촌사회 등과 같이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는 인식 · 농촌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 농사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미지
“이런 것을 헤아리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사짓는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큰 고민거리 ·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지 기반 부족, 제대로 농사기술을 익힐 교육환경 열악, 영농자금 부족, 관련 정보 부족 등이 큰 고민거리 · 농촌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블루오션 · 농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관련 정책 발굴 필요
“이런 정책은 진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양적 중심, 결과 중심의 관리만 하였다면 향후 청년농업정책은 질적 중심, 과정 중심으로 전환 · 청년 한사람만이라도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기. · 청년이 일상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한 열린 공간을 내어주는 등 작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소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 갖기 · 현재 청년수요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과 컨설팅을 먼저 지역에 정착한 선배로부터 농사를 짓는 법,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전환 · 농촌에서 청년이 농업으로 성공하는 민간 모델 만들고 확산하는 시범사업 구상 필요
“청년농업인 정책 실행의 최종 방향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부들을 육성하는 정책 못지않게 농촌에 유입하는 정책도 관심 기울이기 · 첫째, 농업 중심의 전략만이 아닌 농촌(공간)중심의 전략 ·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만이 아닌 유입 전략 · 셋째, 청년농업인을 시기별·단계별·유형별 전략 · 넷째, 승계형 창업농만이 아닌 비승계형 창업농인과 겸업농 고려하는 전략 ·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층위의 정책과 사업 도출,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현장 실행조직·지원조직 등 추진체계



부록6. 과제선정위원회·착수연구심의회·최종연구심의회 심의의견 회의록

일시 및 장소	(과제선정위원회) 2022년 08월 16일 (화) 13:30~16:00,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착수연구심의회) 2022년 09월 16일 (금) 14:00~15:00,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충남 농업정책과,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전북연구원, 원내 내부 연심위원
연구제목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전략 연구”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충남 정책에 실효성 있는 결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범위 한정하여 실질적인 연구 · 타 시도 청년농업인 정책 분석 및 충남도민만의 특징점 활용, 차별화 전략 추가 필요 · 성공사례 분석, 청년농업인 실태사례 분석, 예비청년농업인 육성(귀촌인) 분야 대책 · 미래 “농업인”의 상을 먼저 제시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 청년농업인 특성화·유형화,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구체적 형태 규명 필요 · 농업인보다는 농촌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인식
연구의 결과	· 민선7기 청년농업인 정책 평가 통해 수요자 간 괴리 최소화,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 · 9월 발표되는 농식품부 청년계획 참고하여 정부의 정책방향, 도내 청년농업인 수요 등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실천과제 발굴에 초점 · 청년농업인 정의와 특성에 따른 성장단계별 분류(관심, 준비, 성장, 자립 등)에 따른 기존 정책 들 체계화와 세분화에 따른 매칭, 효율화와 효과성 극대화의 전략 제안 ·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전업농인 청년농업인과 겸업농인 청년농업인 특징이 다르므로 차등적인 육성방안 제시 · 도농복합도시 농촌(청년) 인구와 소규모 농촌지역 청년 인구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 ·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실성 타진하는 정책제시, 실행가능한 정책제시 필요 ·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명확화 등 정책대안 제시
연구의 방법	· 도농복합도시 농촌(청년) 인구 리빙랩, 소규모 농촌지역 청년 인구 리빙랩 구분 실행 · 청년농업인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채택 · 현장에서 정책 실행과 집행을 위한 청년농업인, 주민공동체 조직, 영농인, 마을청년, 관련전문가 등 다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하고, 청년농업인 TF 통해 논의

일시 및 장소	(최종연구심의회) 2022년 12월 06일 (화) 14:00~16:00,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석자	충남연구원, 충남 농업정책과,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전북연구원, 원내 내부 연심위원
연구의 목적	·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지 유입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적 모호 · 보다 넓은 분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범위와 자율성 확대 필요
연구의 내용	· 영월군 사례는 괜찮은 사례, 충남의 리브투게더+스마트팜의 정책연계 가능성 의문 · 청년농업인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과 농업이라는 직업적 측면으로 관점 축약되어 버림
연구의 방향	· 영농정착지원금지원사업 수혜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수요에 적합한 지원 필요 · 농업인의 겸업과 같은 지향점에 대한 개념 확대 필요 · 마을주민과의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 지속성 있게 가야 할 필요
연구의 한계	· 승계농업인가와 농업 중심으로만 내용의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 · 양쪽 모두 포괄적 방식으로 내용 담는 것이 필요
연구의 결과	· 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제시 필요 · 거버넌스는 비승계농과 승계농이 상호교류하여 시너지 낼 수 있는 방향 제시 필요 · 정책대상자가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 경험이나 공동체 합의를 단계별 제시 필요
정책 활용	· 청년농업인 유입단계(초기 진입단계), 탐색단계는 없는데 유입목표 300명만 있는 현실 · 마을주체별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의 면단위 사업, 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 유입 시 마을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필요, 예, 지역개발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연계

부록7.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2023) 결과 요약

분야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결과 및 시사점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청년 구직/취업의 어려움을 일경험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생각(67.9%) ⇒ 민간주도 청년일경험 제공프로그램(머물랩, 인턴캠프) 공공분야로 확대 필요 ·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가 적정하다고 응답(45.5%) ⇒ 미취업자(대학생, 졸업예정자 등) 뿐 아니라 고등학교 시기부터 일경험 필요 · 주요 창업 업종은 도소매업(29.9%), 숙박 및 음식점업(16.3%), 희망 분야는 요식업(31.4%) ⇒ 청년층 창업수요 반영, 생활밀접업종(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으로 지원 확대 · 청년 창업·영농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습득(52.1%), 전문교육 및 실습 희망(30.5%) ⇒ 시설조성·지원 외에도 영농에 가장 필요한 교육·기술 전수지원 강화 필요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42.9%), 전세자금 대출(32.6%) 지원 순 ⇒ 기존 국가시책(버팀목전세자금, 디딤돌대출 등)과 연계, 도 지원정책 효과성 제고 필요 ·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2.67점(4점 만점), 전국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 ⇒ 대중교통(2.48점), 보건의료(2.34점) 등 만족도가 낮은 주거환경 부문 개선 필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적성 파악에 필요한 도움은 취업·진로상담 멘토링(25.3%), 인턴십(21.2%) 순 ⇒ 실무자·재직자와 구직자 연결, 고교 진로결정 상담 등 지원필요(교육청 협업) · 정규교육 외 희망하는 교육분야는 취미·자기개발(30.9%), 금융교육(26.6%) 등 ⇒ 청년들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복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나 받지 못한 비율 6.3%, 비용부담 주요 원인(23.1%) ⇒ 정신건강 취약 청년 선제적 발굴·관리체계 강화, 각종 지원사업 홍보 필요 ·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40.8%), 시간이 부족해서 문화여가활동을 안하는 청년(57.3%) ⇒ 청년 맞춤 트렌디 관광코스, 시간적·경제적 접근성 쉬운 콘텐츠 개발 필요
관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정보 입수방법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37.1%), 가족·지인(18.6%) 순 · 평소 대면·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17%), 소통·교류 등 네트워킹 지원 희망(45.7%) ⇒ 비대면 참여 등 소통채널 확대, 도·시군 청년센터 기능 강화로 네트워킹 활성화

자료 : 충청남도(2023), 제39차 실국원장 회의 실국원 주요업무계획 : 8. 청년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중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보고 추진경과'(2023.07.10.).

참고문헌

〈국내외 문헌자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청남도 농지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종합 실태분석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통권 35호), 충남연구원.
- 김귀영(2018),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 김기홍(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기홍(2018),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현안연구과제,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9), 충남의 청년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 김기홍(2020),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지원 방안 연구, 전략연구 2020-16, 충남연구원.
- 김기홍(2021),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특성, 농촌사회 31(1),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민정(2019), AHP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 김정섭(2020), 농촌 사회혁신의 열쇳말 :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 KREI 주관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2020.09.14.).
- 김정섭.김미복.김수린.김정승(2021),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R 9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김미복.김수린.허주녕.권오현.한인혜.남원호.오단이(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R9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희(2018), 순창 청년협업농장, 1년차 농업실전체험기,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제4차 세미나 발표자료.
- 남원호.장지연.박정환.이상은.김미복(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R954 연구자료-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녹색사회연구소(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 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 마상진,김남훈(2019),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경제 4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김경인(2018), 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모종린(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기.
- 배균기,조원지,이병훈(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1-21, 전북연구원.
- 성주인(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KREI 주관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2020.09.14.).
- 유동훈(2022a),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2), 충청투데이 칼럼(2022.09.05.).
- 유동훈(2022b),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칼럼(2022.08.08.).
- 우성희(2017), 청년+농촌×정책 :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컨퍼런스 발표자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1),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이 농촌지역의 세대갱신·지역발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이연진(2018),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구축 사업'을 말하기, 2018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제4차 세미나 발표자료(2018.12.15.), 충남연구원.
-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주환(2022), 소셜디자이너, 세계를 도발하는 이타적 유전자들, 희망제작소 칼럼 (2022.11.30.).
- 조영재(2022),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 현안연구과제, 충남연구원.
- 정민철,신소희,구본경(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OO> 확대 및 발전방안,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보고서.
- 정보라(2022), 로컬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정책 : 지역기반 혁신기(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희망이슈 제66호 (2022.04.14.), 희망제작소.
- 정수희,허동숙(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 지 23(3), 한국경제지리학회.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2022.11.15.), 충남인스토리, 우리지역을 밝히는 NGO : 원하는 삶을 사는데 대학이 꼭 필요한가요?, 간디학교 출신 비진학 청년활동가 두루미 책방지기 조혁민(금산군 활동가 인터뷰).
- 충남연구원(2022), 제주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2022.11.02.).
- 충남연구원(2022), 충남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테이블) : 충남 청년들 모여라, 농촌에 살래?, CNI세미나 2022-091(2022.11.25.), 충남연구원.
- 최정신.황정임.최운지(2020),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연구, 일반과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황정임.최운지.최정신.정용경(2019),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6(4), 한국농촌지도학회.
- 희망제작소(2022), 곡성군 팜앤디 협동조합 사례 : 마을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공동체.

<정부자료>

- 곡성군 미래혁신과(2021),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020년 청년키움 지원체계 보고회 발표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06.08.),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2.10.26.),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3.06.13.), 귀농귀촌의 길잡이 「2023년 귀농귀촌 가이드북」 발간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02.06.),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05.),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 농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03.03.),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사전준비, 안정적 정착지원 로드맵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2.24.),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 농사편드(2023), 2023년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현장운영기관 모집 계획.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0), 제6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 심의안건 : 청년농업인 의제.
- 영월군 보도자료(2022.11.16.), 영월군,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영월로 거듭나다. : 청년이 희망이다, 청정 영월 프로젝트 추진.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 현황.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08.), 충남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충청남도(2022), 민선 8기 농업정책 추진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및 미래포럼 발표자료(2022.12.05.).
- 충청남도(2022), 제2차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206).
- 충청남도(2022), 충남형 사회적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안).
- 충청남도(2023), 제39차 실국원장 회의 실국원 주요업무계획 : 8. 청년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중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보고 추진경과'(2023.07.10.).
-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후계농 육성 계획.
-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 중 세부 사업자료.
- 충청남도(2023),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농업 지원 지침.
- 충청남도(2023), 충남청년정보.
-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사업 관리카드 내역자료.
-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수행, 연구용역 보고서(근간).
-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2023.02.08.), 농지은행,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2023.02.06.), 농어촌 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조 4천억 원 투입.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1.18.),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있는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 최우수에 경남 거창의 「잇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4.20.),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 140개 팀 본격 활동 시작 : 11월까지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140개 팀 활동 지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2.09.),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 국비 2,388억 투입,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1.04.), 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1.5.(수)~2.9.(금)),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2.17.), 2022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삼성생명-사회연대은행, 전국 21개 청년단체에 전달식 가져.

〈언론자료〉

- 농민신문(2022.04.29.), 새정부 청년농 육성하려면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선을.
- 농민신문(2021.09.10.), 농촌에 청년 살게 하려면...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 인프라 부족 해결.
- 농업인신문(2021.07.1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필요.
- 연합뉴스(2023.05.22.), 지방소멸에 맞서다 : 느린 삶 찾아 시골로... '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기획기사.
- 한국농정(2023), 친환경농업,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

〈통계자료〉

- 고용노동부(2021), 「구직신청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청년통계(2022),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
- 통계청(2022), 2021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22.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MDIS).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성비.
- 행정안전부(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

〈법률자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청년기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52호, 2023. 3. 10., 일부개정].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2. 20.] [충청남도조례 제4456호, 2019. 2. 20., 제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정].

〈누리집〉

- 경향신문 누리집
(<https://v.daum.net/v/20210820181010131>, 검색일자 : 2022.11.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 농담 누리집
(<https://nongdam.kr/about>, 검색일자 : 2022.11.01.).
(https://nongdam.kr/issue01_policy, 검색일자 : 2022.11.01.).
- 농민신문 누리집
(<https://www.nongmin.com/338000>, 검색일자 : 2022.12.10.).
(<https://www.nongmin.com/344407>, 검색일자 : 2022.12.10.).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54863/view>, 검색일자 : 2022.07.15.).
- 농업인신문 누리집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13>, 검색일자 : 2023.01.06.)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75>, 검색일자 : 2022.07.15.).
- 농민신문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804920&memberNo=36080930&vType=VERTICAL>, 검색일자 : 2022.12.04.).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 검색일자 : 2022.05.01.).
- 농업농촌식품 블로그(<https://blog.naver.com/fun-fun-/222945938992>, 검색일자 : 2022.12.04.).
- 농협창업농지원센터 청년농부사범학교 누리집(<https://nhparan.nonghyup.com>, 검색일자 : 2023.05.01.).
- 대신농촌재단 누리집(<https://webzine.dsa.or.kr/?p=10846>, 검색일자 : 2022.09.28.).
- 더퍼블릭뉴스 누리집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 검색일자 : 2022.12.10.).
- 데일리굿뉴스 누리집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02>, 검색일자 : 2022.10.27.).
- 시골언니 프로젝트 누리집(<https://www.sigolunni.co.kr/>, 검색일자 : 2023.04.25.).
- 아주경제 누리집(<https://www.ajunews.com/view/20220816145335248>, 검색일자 : 2022.08.16.).
- 연합뉴스 누리집(<https://v.daum.net/v/20230522070245745>, 검색일자 : 2023.05.22.).
- 영월군 청년사업단 누리집(<https://www.yw.go.kr/youth/>, 검색일자 : 2022.11.15.).
- 영월군청 누리집(<https://www.yw.go.kr/www/contents.do?key=517>, 검색일자 : 2022.11.15.).

- 유럽연합 누리집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cap-overview/new-cap-2023-27_en, 검색일자 : 2022.10.30.).
- 전라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검색일자 : 2022.05.01.).
- 청년마을 누리집(<https://localro.co.kr>, 검색일자 : 2022.12.30.).
- 청춘작당 누리집(<https://springground.com/Prologue1>, 검색일자 : 2022.11.17.).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_story&wr_id=92, 검색일자 : 2022.10.18.).
(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_story&wr_id=99, 검색일자 : 2022.12.10.).
(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info&wr_id=302, 검색일자 : 2022.09.10.).
- 충남 꿈비채 누리집(<http://happyapt.co.kr/site/>, 검색일자 : 2022.11.28.).
- 충청남도 누리집
(http://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MMENU00939, 검색일자 : 2023.05.01.).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누리집
(http://chungnam.go.kr/orga/board.do?mnu_cd=STAMENU00078, 검색일자 : 2022.12.10.).
- 충청투데이 누리집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114&_ga=2.17287739.380896851.1685180411-472674406.1638970654, 검색일자 : 2022.08.08.).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381&_ga=2.55017641.380896851.1685180411-472674406.1638970654, 검색일자 : 2022.09.05.).
- 팜앤디 협동조합 누리집(<https://farmnd.co.kr/>, 검색일자 : 2022.11.01.).
- 한국농어민신문 누리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48>, 검색일자 : 2022.10.28.).
- 한국농정 누리집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20>, 검색일자 : 2022.10.2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6>, 검색일자 : 2023.02.05.).
- 홍성군청 누리집(<https://www.hongseong.go.kr/>, 검색일자 : 2022.05.01.).
- NH농협 농·축협 금융상품몰 누리집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60R.view>, 검색일자 : 2023.02.03.).

■ 집 필 자 ■

연구책임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담당 : 전체 총괄)
연구진	이도경	충남연구원 연구원(담당 : 제2장, 제3장, 부록)
외부연구진	김기흥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담당 : 제4장 통합 시범사업)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담당 : 전체 자문, 제4장 통합 시범사업)

전략연구 2022-22 · 충남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글쓴이 · 강마야 · 이도경 · 김기흥 · 정민철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대표)

ISBN · 978-89-6124-630-9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30-9